

모심과 살림

5호
2015년
여름

생명운동이론지

좌 답 전환? 전환!

특집 '청년'은 있다

전환의 시대 청년의 삶과 새로운 길 찾기

이 시대 청년으로 일한다는 것

청년에게 '일상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다

청년, 음식시민이 되다

청년과 농민이 만났을 때

생협운동과 사회운동의 틈에서 청년운동의 미래를 생각하다

기 고 '만들기'의 시대, 삶을 바꾸는 기술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통합 경제학

특별기고 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이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사회적경제의 관점에서 본 협동조합의 원외 이용 문제
- 비조합원 이용 문제, 생협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인 터 뷰 동학여신들, 매의 눈으로 역사를 보다

살림의 길 생명문화 작은집운동의 확산과 빛 없는 삶
생활협동 협동조합의 오래된 변주, 다시 시작되다
사회실천 적정기술의 동향과 농촌 기술운동

지구의 창 '좋은 삶'을 위한 사회발전지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앞으로의 15년

모심과
살림연구소



여름과 겨울, 1년에 두 차례 전환을 위한 ‘오래된 새길’ 이야기를 나눕니다.

생명운동이론지

모심과 살림

모심과 살림 4호 (2014년 겨울)

‘나’를 살리는 공동체

모심과 살림 3호 (2014년 여름)

무위당과 새로운 사회운동

모심과 살림 2호 (2013년 겨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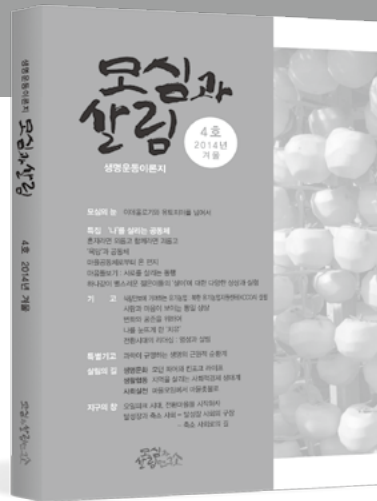
새로운 삶과 사회를 여는 노동의 대안

모심과 살림 1호 (2013년 여름)

전환기의 사회운동, 전환을 위한 사회운동

모심과 살림 0호 (2012년)

생명의 눈으로 본 협동조합



(사)모심과살림연구소 회원이 되어 주세요.

후원회원·자료회원 분들께는

『모심과 살림』을 포함해 연구소 간행물을 보내드리며,

온라인상에서 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도서 구입이나 행사 참여 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1~4호는 각 5천원, 0호는 3천원입니다.

구입문의 모심과살림연구소 02-6931-3604 <http://mosim.or.kr>

생명운동이론지

모심과 살림

5호
2015년
여름

떠내는 글

스스로 서서 함께 살아가기

“우리 사회에서 유례가 없는 유형의 젊은이들이 나타나고 있다”

청년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무성한 가운데, 한 일간지에서 소개한 ‘달관세대’ 담론이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덜 벌어도 덜 일하니까 행복하다는 그들’은 한편에서 ‘가장 운택하게 자랐지만 가장 불행한 세대’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청년들을 대하는 시선에 대해 응원과 지지보다는 불편함을 담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노동과 생계 문제로 힘들어하는 대다수 청년세대의 삶을 가리고 왜곡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앞선 일본의 경험처럼 지금 우리사회도 저성장과 고실업 문턱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청년의 욕망이 거세되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다른 한편에서 이들이 ‘새로운’ 욕망을 꿈꾸고 싹틔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질적 성장과 풍요의 시대가 한계를 드러낼 즈음 다른 삶, 새로운 존재로의 차원 변화에 눈을 돌리는 청년들의 모습이 이제서야 조금씩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미세한 움직임과 변화들 속에서 앞으로의 ‘하강사회(下降社會)’를 살아갈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질문해 봅니다. 그것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방향으로.

『모심과 살림』에서는, 전환의 시대에 전환기적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과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위로나 요청의 시선보다는 좀 더 가까이서 이들이 스스로 서기 위해 애쓰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듣고자 했습니다. 외롭기에 함께할 누군가를 찾고, 가진

것이 적기에 서로 힘을 모는 방법을 고민하고, 얽매임이 적기에 고정된 틀을 넘어 과감한 선택을 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통해 사회 전체의 전환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보고 기성세대의 역할도 새롭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해서입니다.

고용노동의 테두리를 벗어나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일하며 삶을 꾸려 나가고자 애쓰는 청년들, 나고 자란 지역에서 지역정체성을 스스로 찾아 새롭게 뿌리내리며 성장해가는 청년들, 식과 농을 화두로 삼거나, 당사자 관점에서 사회운동에 적극 결합하는 청년들까지, 자각^覺, 자작^作, 자립^立, 자치^治를 고민하고 실현해 가는, 이를테면 청년의 삶의 '전환'이 청년 운동의 '전환'이고 이것이 사회와 문명의 '전환'으로 이어지는 길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스스로(自)'의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주체는 비단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과 삶으로 들어온 '만들기'와 '기술'은 일상에서의 창작과 제작의 영역을 무한히 확장시키며 생산의 주체와 경계를 허물고 사회 문화를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주어진 삶과 규모 키우기에 익숙한 우리에게 '만들기'를 통해 '적당함'을 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또 하나의 자극과 영감을 주리라 기대합니다.

홀로 삶의 버거움은 협동의 시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협동운동과 관련한 이슈와 실천 활동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핵심 메시지 역시 '스스로 서서 함께 살자'는 것으로 귀결되는 듯합니다.

'노량진 한복판에서 '귀촌'을 외치자'는 한 청년의 말이 기억납니다. 대상과 주체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귀^歸'의 방향이 농촌을 넘어 다양한 차원으로 '돌아감' 혹은 '방향 틀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사는 누구든 어떤 깨달음이 생겨나고 다름에 대한 상상력이 움텄다면, 전환은 이미 시작입니다. 2015년 여름, 최첨단 기기와 최고 기술을 자랑해 온 초대형병원이 역병 확산의 온상이 된 참담한 현실에서, 스스로 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전환은 이미 '현재진행형'입니다.●

(사)모심과살림연구소는

전일적 생명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활양식과 문명을 창조하는 지혜와 지식을 나누고자 200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생명사상과 협동운동에 대한 연구 및 조사, 세미나 및 포럼 개최,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네트워크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137-862) 서울 서초구 서운로 19 서초월드 809호

<http://mosim.or.kr> mosim@hansalim.or.kr 02-6931-3604

모심과 살림 5호

발행인 박맹수

편집인 정규호 김신양 김현우 주요섭

편 집 김현

디자인 디자인 이인

펴낸날 2015년 6월 19일

펴낸곳 (사)모심과살림연구소

※ 책값은 7천원입니다.

차례

002 펴내는 글 · 편집부

좌담 006 전환? 전환! · 편집부

특 집 ‘청년’은 있다

028 전환의 시대 청년의 삶과 새로운 길 찾기 · 정규호

046 이 시대 청년으로 일한다는 것 · 기은환

055 청년에게 ‘일상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다 · 송준규

070 청년, 음식시민이 되다 · 박세영

080 청년과 농민이 만났을 때 · 김현

092 생협운동과 사회운동의 틈에서 청년운동의 미래를 생각하다 · 세토 다이사쿠

기 고 103 ‘만들기’의 시대, 삶을 바꾸는 기술 · 김아름

116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통합 경제학 · 김용휘

특별기고 127 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이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적경제의 관점에서 본 협동조합의 원외 이용 문제 · 김신양
비조합원 이용 문제, 생협은 어떻게 볼 것인가? · 정규호

인터뷰 148 동학여신들, 매의 눈으로 역사를 보다 · 이나미

살림의 164 생명문화 작은집운동의 확산과 빛 없는 삶 · 하만조

길 176 생활협동 협동조합의 오래된 변주, 다시 시작되다 · 김이경

189 사회실천 적정기술의 동향과 농촌 기술운동 · 김성원

지구의 201 ‘좋은 삶’을 위한 사회발전지표 · 서병수

창 21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앞으로의 15년 · 박숙현

좌담

정리
편집부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볼 때 큰 틀의 차원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런 마음을 압축적으로 담아낸 말이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심과 살림연구소에서는 최근 '전환'을 키워드로 책을 발간한 세 분의 저자를 모시고 북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전환에 대한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전환? 전환!

참 석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김성균 (지역사회연구원 소장)
주요섭 (한살림연수원 사무처장)

진 행 김신양 정규호 (모심과살림연구소)



전환의 ‘정체’

사회 > 크게 보면 ‘전환’이지만 각각의 책에서 조금씩 다른 의미로 쓰인 것 같다. 한 분씩 자신이 생각하는 전환의 의미를 이야기해 달라.

김현우 > 전환은 바꾼다는 것인데, 결국 이대로는 안 되니까 바꾸는 것이다.

의미를 조금 좁히면, 책 제목이기도 한 ‘정의로운 전환’은 미국의 노동운동가 토니 마조치가 얘기한 바대로 ‘유해한 작업환경, 환경을 오염시키는 생산물을 만드는 노동과 생산에서, 노동 과정이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지역사회에게도 좋으며 결과도 환경과 생명을 함께 살리는 것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그러려면 더욱 많은 것들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 한 공장이나 한 업종에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생산사슬도 해결해야 하고, 기존의 시장으로 그냥 내던져져서는 안 되니 협동조합을 비롯한 공동체 경제까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문명적 전환까지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적색의 소비자집단과 녹색의 노동계급도 나와야 하고, 그러다보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 있는 전환이 되어 버린 면도 있다. 농업의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주요섭 님은 책에서 엑소더스나 개벽에 비유하셨는데, 거기에 공감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정의로운 전환:
21세기 노동해방과
녹색전환을 위한
적록동맹 프로젝트

김현우, 나람북스, 2014



분명한 전환:
생태적 재지역화 개념,
이론, 그리고 모색
김성균, 이담북스, 2015



전환 이야기:
열망의 유토피아가 온다
주요섭, 모시는사람들, 2015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무 어렵고 큰 이야기 또는 당장은 엄두를 못 내는 얘기가 아니라, ‘리얼 유토피아’처럼 지금 당장 써먹거나 싸우는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김성균 님이 생태적 재지역화를 강조하신 것도 그런 점에서 같이 모색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전환이라는 대안이 메시아가 해답을 주듯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앎을 것이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위기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기온이 한순간에 오르는 게 아니고 석유정점도 갑자기 오르는 게 아니다. 여러 방편으로 위기의 시점을 연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파국이 오고 그 다음에 개벽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전환의 대안이나 욕구들이 주변에 흘러서 차고 넘칠 때 그런 것들이 밀고 당기면서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해방이 도둑처럼 왔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싸우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도둑처럼 오는 게 전환이 아닌가 한다.

김성균 > 개인적으로 전환이라는 건 지금 시대적 상황에서는 싹 다 갈아치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가 만들어놓은 독특한 콘텐츠가 있다. 넓은 도로와 이것을 짊어주는 자동차, 높은 빌딩. 쉬운 예로 일산, 분당, 평촌이 다 그렇다. 여기서부터 공간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다. 예를 들어 안양시 인구가 약 62~3만 정도인데, 안양에는 안양사람과 평촌사람이라는 두 부류 사람들이 존재한다. 개발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보여준 천박한 자본주의 모습이다. 요즘은 젊은 친구들한테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 ‘LG 자이’, ‘푸르지오’ 이렇게 대답한다. 자기 삶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하나도 없고 다 개발을 주도한 자본이 만들어준 것이다. 버스정류장 이름도 그렇게 바뀐다. 안양에 포도원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지금은 포도원이라는 안내방송 대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다섯 개 아파트 건설사 이름이 전부 다 나온다.

도시관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항상 고민은 ‘대한민국에서 얘기하는 공간사회학이 도대체 뭐냐’였다. 지역사회개발론, 도시계획론 등에서 공간



“

우리가 발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공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우리가 토지를 바라보는 눈은 그 출발점이다. 여전히 팔고 사는 부동산 개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다른 관점으로 볼 것인가.

”

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사람’에 대한 고민은 없다. 길을 어떻게 넓히고 도로를 어떻게 할지, 이를테면 토건을 중심으로 한 개발주의가 만들어 낸 구조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모 연예인이 광고한 양문형 냉장고가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전환적으로 살려면 텃밭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집 냉장고 크기부터 줄여야 한다. 대형마트형 생활 방식이 지속될 수 있는 데는 집의 대형 냉장고가 자리하고 있다. 이런 구조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동네빵집이 문을 닫고 프랜차이즈가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의 공간과 삶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국가와 자본의 권력구조를 정확히 보고 바꿔내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발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공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우리가 토지를 바라보는 눈은 그 출발점이다. 여전히 팔고 사는 부동산 개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다른 관점으로 볼 것인가.

주요섭 > ‘전환’을 우리말로 옮겼을 때 중심이동, 탈바꿈, 이행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탈바꿈(transformation)이

“

탈바꿈이라는 건
언젠가 먼 훗날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지금 그 속도가 늦는 것처럼 보이고
잘 못 느낀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즉 '현재진행형'이다.

”



다. 사회 전체의 탈바꿈도 필요하지만 출발점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 출발점이기도 하고 어쩌면 종착점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바꿈이라는 건 언젠가 먼 훗날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지금 그 속도가 늦는 것처럼 보이고 잘 못 느낀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즉 '현재진행형'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행(transition)으로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탈바꿈에는 사람의 탈바꿈도 있고 사회의 탈바꿈도 있다. 다 탈바꿈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탈바꿈의 출발점으로서의 '인식론적 전환'이다. 사고방식, 세계관, 관점의 전환이 없이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 어렵고 다른 변화를 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인식론적 전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고 알고 듣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보려고 하면 다 볼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사실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나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책에서 얘기한 세 가지 전환 가운데 의식의 전환을 먼저 강조하지 않

을 수 없다. 내 의식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에 ‘그러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물음표다. 우리가 전제하고 있던 모든 사고방식이나 생활양식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질문하는 것. 이게 전환의 출발점이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사회 > 여러 개념 가운데 ‘전환’을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주요섭 > 사회적 불연속성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혁명은 불연속적인 것이긴 하지만 앞의 걸 폐허로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전환은 앞의 걸 인정하면서도 전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이 있어야만 새로운 메타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새로움의 하나, 그게 중요하다고 본다.

전환의 ‘씩수’

사회 > 전환의 징조는 무엇이고,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세 분은 전환이 ‘중요하다’거나 ‘필요하다’고, 또는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전환의 ‘씩’을 더 키우고 계속 자라도록 물을 주어야 할 텐데, 과연 어디서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지 말씀해 달라.

주요섭 > 앞에서 인식론적 전환을 이야기했는데, 잘 보려고 하면 보인다. 반면 보려고 하지 않으면 안 보인다. 제 나름으로 조금 보였던 것 중 하나는, 최근에 여성들이 쓰는 동학 소설 모임에서 1년간 작업 끝에 책을 출간하게 된 점이다. 지난해 동학혁명 120주년이 된 해에 전국에서 모인 10여 분이 동학을 다시 읽는 학습회를 해오면서 지역마다 한 명씩 동학

혁명 과정에서의 인물을 선정해 여성의 눈으로 쓰는 작업을 했다.

또 몇 년 전에 이런 고민들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었던 경험이 거창에 있는 여성들의 자기치유 모임이었다.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끼리 모여서 소모임으로 마음공부를 하고 있었다. 이 모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같이 단식을 하면서 몸 치유 경험을 하기도 했다. 인천에는 그동안 사회 운동을 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든 분들께 예술치료를 통해 위로하고 치유와 돌봄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매개해주는 모임이 있다.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 대전이나 정읍 등 곳곳에서 비슷한 움직임들이 보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자본이나 국가가 마음을 어루만져주거나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더욱 분명해졌다. 지금은 자기 치유의 시대다. 내가 나를 치유하고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되었다. 이게 '전환의 싹수'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 혁명을 얘기할 때는 다른 누군가, 정부나 시장, 복지기관 등이 대신해줄 것을 기대하고 요구했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치유하고 구원해야 하는 시대이고 그것을 열망하는 사람들, 나아가 이것을 실제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작은 모임들이 많아지고 있다.

김성균 > 마찬가지로 전환의 싹수는 굉장히 많다고 본다.

2000년대 초반에 생태공동체연구모임에서 공모사업 지원을 받아 북유럽 10여 군데 생태공동체를 답사할 기회가 있었다. 그제 인연이 돼서 책에 나와 있는 글로벌 에코빌리지 네트워크(GEN)를 사례로 정리했다. 주요 섭 님이 얘기하신 '자기 스스로' 같은 것인데, 그런 방식으로 지역에서 운동하고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룹들을 보면서 정말 고민할 게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지인 한 분이 “생태공동체나 생태마을은 농촌에선 되는데 도시에서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명확히 답을 못한 적이 있다. 이후 그 답을 덴마크에서 찾을 수 있었다. 당시 덴마크는 주거와 거주 문제를 고민하면서 도시에서 더불어 사는 삶의 터를 만드는 방법으

로 코하우징을 선택했다. 덴마크에는 코하우징 조합이 3천 개가 넘다고 한다. 2007년에는 영국 출장을 기회로 슈마허칼리지를 들렀는데, 동네를 둘러보니 편의점도 없고, 어떤 작은 서점에서 1962년판 『오즈의 마법사』 책을 발견하고 놀랐던 기억이 있다. 그 동네가 트랜지션 타운으로 유명한 토트네스이다.

그 이후로 토트네스 관련 자료를 모으고 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토트네스 사람들은 〈교외도시의 종말〉이라는 영상을 본 후 자신들이 직면하게 될 전환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어디에서든 만들어진 도시는 에너지를 밖에서 가져오게 되는데, 지구온난화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년 반 동안 매번 모여서 토론하고 학습하면서 아젠다를 만들었다. 2013년에 나온 주민들이 만든 보고서가 책의 부록으로 소개된 〈에너지감축행동기본계획 매뉴얼〉이다.

분명히 이런 전환의 싹들은 국내외적으로 있다고 본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마을이나 사회적경제 단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어려운 점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김현우 > 짝수가 있다. 특히나 광우병 촛불과 세월호를 경험한 젊은이들은 그전과 같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생명과 밥상과 연대를 몸과 마음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의미를 알아채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반면 비관적 생각도 든다. 예를 들어 국가와 자본은 압축성장으로 계속 달려 나가고, 대응을 해보려고 하면 일을 더 크게 저질러 놓고 있는 것이다. 4대강 파괴나 제2롯데월드 같은 것들을 저렇게 해 놓으면 뒷감당을 누가 할 것인가. 뉴타운으로 그마져 있었던 공동체들이 다 파괴되고 이웃이 없어진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배달앱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배달노동자들과의 관계나 연대가 앱에서 터치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결국 긍정과 부정의 측면들이 있는데, 어차피 해야 될 과제나 요구가 있

다면 어떻게 빨리 잘 할 것인가(빨리라는 말도 조심해야겠지만)를 얘기해야 한다. 탈핵만 해도 그렇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의 탈핵운동이 굉장히 진전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행사 하나 만들어내기 쉽지 않다. 핵발전소 재가동이나 수명 연장, 신규 부지, 수출 등 정신이 없다. 이렇게 보면 비관적인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2040~50년 안에 한국도 탈핵이 될 것으로 본다.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용이 낮아지고, 폐기물부터 관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게 뻔한데 아무리 어리석은 정부라도 지금 같은 방식을 계속할 수는 없다. 문제는 ‘어떤’ 탈핵을 할 것인가인데,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대기업이 금융자본과 결합해서 계속 독점하면서 시민들은 단지 전기 코드 꽂아쓰고 매달 고지서 받아보는 에너지 소비자로서 머물러 있다면 ‘탈핵’은 했으되 ‘전환’은 아닌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긍정성, 부정성을 모두 보고 어떻게 빨리 안전하게 좋은 탈핵을 할 것인가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썩수의 주체에 관해서라면, 책에서 적색과 녹색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점에서는 솔직히 비관적이다. 녹색이든 적색이든 보수성이 굉장히 있다고 본다. 녹색도 자기와 가족의 안위를 넘어서기 쉽지 않다. 적색은 더 심각하다. 한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계약관계와 관행을 넘어서기 쉽지 않고, 이런 에너지 문제나 전환의 필요성을 노동조합 간부들과 개인적으로 얘기해보면 잘 통하는데 노동조합에서 사업으로 하라고 하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비유를 한다. 정의로운 전환 또는 삶의 전환의 문제가 노동자 개인의 선택으로 맡겨지면 0과 1밖에 안 남는 거다. 도저히 혼자로는 이 체제를 바로 넘어설 수 없고 ‘엑소더스’ 할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순응하고 살거나, 아니면 혼자 탈출하는 거다. 개인적인 선택으로 국한되면 의미는 제한되고 여전히 남은 사람들은 0과 1의 선택 속에 놓이기 때문에, 0과 1이 아닌 0.01부터 0.99까지 여러 가지 모색이 가능하고, 그것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해야 된다는 것을 같이 얘기하는 게 정의로운 전환이지 않을까 한다.



“

0과 1이 아닌 0.01부터 0.99까지
여러 가지 모색이 가능하고,
그것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해야 된다는 것을 같이 얘기하는 게
정의로움 전환이지 않을까.

”

전환의 ‘친구’ 그리고 ‘방법’

사회 > 굉장히 많은 변화와 시도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또한 굉장히 쉽게 파괴되거나 없어지기도 하는 것 같다. 한편으로 전환이 지금 이 사회의 대안으로 얘기되는 다른 개념, 지속가능한 개발이나 사회적경제, 그 외 여러 가지 것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무엇을 같이 할 수 있을까.

김성균 > 공간사회학 입장에서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거기에 지속가능성을 엮을 것인가 했을 때 나온 개념이 ‘생태적 재지역화’이다. 글로벌 스탠더드 기준에서 세계화를 얘기하고 지역이 세계적인 거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지역적인 건 없고 지역의 자원을 유출시키는 구조 속에서 진정한 ‘지역화’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표현한 게 ‘재지역화(re-localization)’였고, 여기에 생태적 의미를 더해 만든 개념이다.

알도 레오폴드의 『모래군의 열두달』이라는 책에 근본생태론과 생명지역주의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토지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한국 사회의 현실을 의사소통, 네트워크, 지역문화, 지역공동체의 측

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도시계획 방식이 아니라 분권, 제3섹터, 상향식 개발, 거버넌스, 마을만들기, 생협 등 새로운 흐름을 묶어서 지역사회 내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고, 개발과 계획 과정에서 코하우징, 뉴어바니즘, 생태마을, 트랜지션 타운 같은 구체적인 전략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생명지역주의자들이 카테고리화한 것을 한국적 상황에 맞춰서 정치·경제·사회·기술·문화로 묶어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정치다. 한국 사회가 처한 지정학적 위치 속에서 남북이 분단되고 군사독재 정권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지역사회와 생활정치는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 오히려 지난 4~50년 동안 토건과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기득권 집단이 카르텔을 형성해 지역사회를 지배하면서 풀뿌리 보수주의를 공고히 해 왔다. 중앙의 행정과 정치가 지역사회를 이끌어 오면서 시민이 참여해서 아래로부터 지역 발전을 모색하는 기회 또한 제대로 가지지 못했다. 최근 들어서 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반가운 일이나, 행정이 적극 개입하면서 이 분야의 거버넌스 영역이 주로 민간 위탁이나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 생활정치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담은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고민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주요섭 > 사회적기업법이나 사회적경제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도 마찬가지인데, 제도화시킨다는 것은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놓아두고 새로운 움직임을 그 안으로 포섭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려는 작업이다. 거듭 남이라는 것이 어떤 ‘질적’ 변화를 뜻한다면, 전환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할 때 (기계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제도와 법 밖에 있는 사회적경제 영역이 중요하다고 본다. 모든 중간지원조직들은 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만 지탱하고 있다. 민이 주도하는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본 사례가 없다. 새로운 싹이 자라나는 것들을 제도 안으로 포섭해서 싹을

고사시켜 버리는 게 현재의 사회적경제, 협동조합들이 당면한 문제가 아닌가 한다. 이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 중심이동이 이루어지려면 새로운 존재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메타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중심점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엄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전환 이니셔티브라는 단체에서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을 하나의 대안으로 이야기하면서 new-sustainability라고 하는데, 그 'new'의 의미가 뭘 까에 천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현우 > 전환 담론은 지속가능 개발이나 대안경제 프로그램과 열심히 만나야 한다. '리얼한' 매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장 사람들이 모이고 재정과 사업이 도는 곳들, 조금이라도 전환 담론을 구현하거나 테스트할 수 있는 곳들과 만나야 하고 자연스럽게 만날 수밖에 없다. 전환이라고 할 때, 누구의 어떤 프로그램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다양하게 서로 배우고 경합하고 확산되면서 전체적으로 전환이라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노선이 맞다고 하고 갈라치기 하기보다는 '묶어내기'가 더 중요한 단계라고 본다. 세 저자도 전환의 강조점이나 맥락의 차이도 있지만, '전환동맹'이라고 봐도 될 것이다.

다음 얘기는 주요섭 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 전환 담론을 통해서 오히려 지속가능한 개발이나 사회적경제가 점검되어야 된다. 정말 지속가능개발이 지속가능하게 가고 있는지, 사회적경제가 국가가 하기 싫거나 애매한 것들을 좋은 미사여구로 대신 시행하게 하는 데에 결과적으로 공모하고 자족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수량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 얘기하지만 거기에서 노동과 생산의 문제,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이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10년~30년 뒤에 그 지역과 지역을 포함하는 경제·분배체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청사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런 운동 속에서 과감히 탈성장 얘기를 하고 있는가. 대안경제가 탈성장을

염두에 두거나 거기에 우호적이긴 하지만, 탈성장을 지금은 본격적으로 할 얘기가 아니라고 하고 만다면 문제가 있다. 전환의 친구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한 발짝 더 나간 긴장과 문제제기도 필요하다고 본다.

주요섭 > 탈성장도 중요한 담론이지만, 흔히 탈성장을 얘기하면 자꾸 시스템으로만 생각한다. 그런데 한 사람이 탈성장적인 삶을 살면 그게 출발이 될 수 있다. 내가 탈성장적 삶과 태도를 가질 수 있는가, 나와 우리 몇 사람들의 공동체, 혹은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탈성장적 지역 경제 모델, 공동체경제 모델을 서로 만들어가겠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시스템 전체, 국민경제 전체를 두고 하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자꾸 거기에 매어 있기 때문에 탈성장 얘기를 책에서는 하지만 현실에서 말로 꺼내기 어려운 것인데 그 지점이 아쉽다.

김성균 >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난 40년 동안 일명 풀뿌리보수주의라는 이름으로 지역을 장악했는데, 최근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농어촌 관련된 활동들, 생협, 도시문화 등 관련 부처들이 다 있다. 그런데 그 맥락을 잘 따져보면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커뮤니티 중심으로 중간지원조직 만들고 보조금 주는 구조이다.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하는 사람들도 그 구조에 들어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국가계획과 정책이 다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장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별로 없다. 그래서 너나없이 마을만들기나 사회적경제를 들고 나오는 현실인데, 이를 재지역화 차원에서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고민이 있다. 내년 총선, 지방선거 때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제도로 편입하는 상황이 볼 보듯 뻔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사회적경제나 마을만들기는 다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전환, ‘탈’_脫, ‘재’_再, ‘연’_緣 하기

김현우 > 주요섭님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탈성장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책에서도 인구의 루트 1%가 바뀐다면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수궁은 하지만, 700명의 간디가 있다 하더라도 이견희 씨가 병상에서 일어나야 삼성반도체 주가가 오르고 국제경쟁력을 회복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과 또 그것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기구와 관료들을 극복하거나 허물 수 있을 것인가. 한 사람부터 탈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고약하게 얘기하자면 자족적인 계도로 머무는 결과를 만들 우려는 없을지 질문을 드린다.

‘엑소더스’라는 말도 통쾌하게 읽었다. 탈도시 탈학교 탈노동 탈정당 탈종교를 말씀하셨는데, 다만 탈정당에 대해서는 정당정치의 영역을 무조건 ‘탈’ 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개념이나 관행까지도 전환하면서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닐지. 탈정당이라고 못 박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일 수도 있고 현실적 효과도 반감시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었다.

주요섭 > ‘탈’도 일종의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하나의 해답이 아니라 수많은 해답이 있고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것이다. 중요한 것은 효모균이 있어야 술을 담글 수 있듯이 그런 ‘촉매’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한 사람, 한 그룹, 마을이나 모임이 중요하다.

탈학교를 얘기했는데, 제 딸들도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런데 정말 다니기 싫어한다. 안 다니고 싶다는 건 몸은 거기에 있지만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을 어른들이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밖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정말로 나오고 싶은 아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탈정당도 마찬가지다. 국민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정치적 의사결정 틀이

정당이고, 정당은 헌법 기관이다. 우리 정치를 만들어 놓은 법적 구조물의 핵심이 정당인 것이다. 긴 호흡으로 보고 국민국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면 정당이라는 근대적인 정치적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없다. 물론 지금 당장 없앨 수는 없고 그게 잘 돼야 하지만 또한 냉정하게 볼 건 봐야 한다. 현재 있는 제도 정치 안에서 해결하려면 들어가서 해야 하지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정치질서를 구축하는 효모균을 만드는 역할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 그런 점들을 구분해서 보았으면 좋겠다.

김성균 > ‘탈’은 없애는 게 아니다. 이반 일리치의 탈학교 또한 학교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학교가 갖는 시스템을 없애자는 것이다. 탈성장도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서 ‘세계화’가 등장했고 대한민국의 모든 학자들이 다 세계화를 얘기했는데 그 과정에서 globalization이 아니라 glocalization이 나왔다. 세계+지역이다. 그런데 그 지역이 천박한 자본주의에 끌려가는 지금 현실에서, 진정하게 아래로부터 형성될 수 있는 지역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거기에서 주체가 누구인가. 제가 결론 부분에 「지역, 국가 넘어서기」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구를 인용했다. 시민이 운영하는 정치체제를 선택한 게 대한민국이고 민주공화국이다. 그 선택의 주체가 시민이라면, 어떤 시민인가. 풀어서 얘기하면 온전한 시민성이고 그것이 발현되는 것이 커뮤니티다. 그런 관점에서 재지역화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주요섭 > 김현우 님의 ‘정의로운 생태적 전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100% 공감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 프랑스혁명의 3대 이념과 가치로 자유 평등 박애를 이야기하는데 ‘정의로운’이라는 게 저에게는 평등으

로 읽힌다. 자유의 가치나 박애의 가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조명할 수는 없는지 궁금하다.

김현우 > 정의가 평등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평등을 하기 위해서도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평등이 아니라 질적으로, 연대성과 성찰성에 기반한 평등이라 한다면 자유와 박애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자유 평등 박애의 관계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 지속가능성이 무어냐를 점검하고 되물어야 하듯이 정의로운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거꾸로 묻는 성찰이 요구된다.

사회 > 김현우님은 적록연대라고 함으로써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주체 영역으로 조금 구체화시켜서 좁혀진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여성운동과 문화운동은 전환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긴다. 생물학적 남성·여성을 넘어서서 여성성과 남성성이라고 할 때 서구의 생태주의나 동양의 개벽 사상 쪽에서는 공격과 지배, 억압의 남성적 패러다임으로부터 돌봄, 살림, 생명의 여성적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주요섭 > 책에서도 음개벽(陰開闢) 얘기를 했다. 양의 시대에서 음의 시대로, 무계중심의 이동이라고 생각한다. 성 역할이 짧게는 수백, 길게는 수천 년간 고정되어 온 것인데 그 균형이 무너져 있었다. 90:10이거나 99:1인 경우도 있다. 그 균형을 회복하는 데 있어 여성들이 그동안 남성들이 해왔던 몫을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성들의 고유 영역으로 떠맡겨둔 살림노동, 생활노동 부분, 아이를 키우고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부모를 모시는 것들을 남성들이 더 많이 해서 균형을 맞춰가는 게 더 필요하다. 여전히 남성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라든가 질서, 문화, 시스템들이 아주 압도적이지만 거시적으로 흐름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 같

고, 여성들 입장에서든 그것을 어떻게 고양하고 격려하고 복돋을 것인가의 관점에서 보았으면 좋겠다.

노동도 여성도 마찬가지로 한때 '해방' 자를 붙였다. 해방됨으로써 주체성을 얻을 수 있었다. 노동으로부터, 가부장적 질서로부터 벗어나기를 열망했고, 벗어나야만 내가 설 수 있는 건 분명한 것 같다. 그런데 다음 단계로 가려면 노동창조, 여성창조 같은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단계의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가야 한다. 어떤 노동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인가. 여성성을 늘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방의 여성성이 아니라 여성이 갖는 고유한 성질, 긍정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살려내고 더욱 진화하게 도와줄 것인가, 이런 관점의 이야기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김현우 > 큰 차원에서 당연히 적록보연대로 가야 한다. 주요섭 님 책에서 좋았던 것은 노동해방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정작 노동운동은 노동해방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게 제 문제의식 중 하나인데, 노동의 불평등은 성별 분업과도 연관되어 있고, 노동해방은 성별 노동분업의 해방이기도 한 것이다. 이런저런 인식 전환 전에도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득 보장만 되면 많은 게 해결되거나 잠재된 주제들이 떠오를 것이라고 본다. 기존에 적색/녹색 운동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에 외부적 충격이나 도발로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사실 누구든 자기 안에 적/녹/청/흑색이 다 있다. 그런 욕구는 어떤 양심의 가책일 수도 있겠고, 보수적인 사람이라도 핵 발전 안 하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정몽준 의원도, 핵무기는 필요하지만 울산 가까이 핵발전소는 위험하고 없는 게 낫다고 이야기한다. 그런 것들이 관계성의 인식 속에서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매력적인 적록보 연대의 그림과 활동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가장 주력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한다. 물론 좋은 말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충격과 강제가 필요하

다.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도 하나의 대안일 뿐인데, 그런 여러 다양한 대안들이 차고 넘쳤을 때 어떤 계기들이 주어지면서 더 큰 변화가 도모되는 것이라 본다.

사회〉 한편으로 ‘전환은 ‘선’인가?’라는 질문도 하게 된다. 또한 국가와 시장이라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보이는 것에서도 전환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 끊임없이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상황 속에 전환을 어떻게 이끌어내야 할까. 그 과정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김현우 님 책에서는 그 과정에서 사회적/생태적/미래세대 약자에게 피해와 충격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환이 정의롭다고 이해했다.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으면서 전환이 이루어지면 가장 좋겠지만, 가능하지 않다면 전환의 이행 과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는지.

김현우〉 예컨대 생태파시즘이라는 얘기도 있고, 기후변화 문제도 생태적 감수성을 가진 독재자가 에너지 절약하고 산업을 바꾸면 해결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최근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동원 위주의 조직과도 무관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이 최선이거나 유일하게 선호할 만한 답인가? 우리는 중국식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조건이 있고. 미국의 경우 월마트에서 뜯지도 않은 음식을 버리고 그 음식만 거두어도 먹고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생활방식을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인정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나 수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에서 어떤 주체들이 형성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한국의 전력 정책을 전환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정부와 열심히 싸우고 또 로비해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잘 바꿔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시민’도 중요하다. 송전선로 문제도, 전기가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오는 데까지 어떤 노동과 산업과 관계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핵발전소나 화력발전소를 설계하고 만드는 과정의 민주노총 조합원들, 원자력 연료 노동자들, 송배전하는 한전 노동자들, 그걸 관리하고 고지서 발행하는 공무원들, 사회복지사들, 플러그 꽂아서 전기를 쓰는 우리들까지 다 있다. 이런 사람들이 가상의 테이블에 모일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전력을 핵발전 의존으로 중앙집중적으로 하는 게 유일한 답인가 하는 것을 얘기 나눌 수 있다면, 안 그럴 수 있고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의 누군가 더 좋은 전력 정책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이런 시민들의 관계가 있어서 바뀌는 것과 없는 채로 바뀌는 것은 의미가 다를 것이다. 이것은 전력뿐 아니라 먹거리, 주택, 교통 정책 등 어떤 것이든 바꾸어내는 징검다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

주요섭 > 전환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지금 여기서 내가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내 삶이 피폐하고 내 영혼이 갈증을 느낄 때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맥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컨대 귀농·귀촌을 결정하는 순간에 거기서 살고 싶은 사람들과의 관계망이 만들어진다. 오래 전에 송희식 변호사라는 분이 연대사회라는 개념으로 대안적 사회의 틀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각자가 주체, 주인공이 돼서 각자의 열망에 의해서 함께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공동의 목적을 서로 알고 같이 만나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다. 그것을 '새로운 공동체'로 표현하고 싶다. '재再'에도 again과 new의 의미가 같이 있다. 옛날 것을 복원(회복)해야 하는 측면과 함께 새로운 차원으로 만들어야 하는 측면이다. 단, 그것들 먼 훗날 따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에서 즐겁고 행복하면 이미 새로움은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사회 전체의 시스템으로 만들고 국민국가에서 더 나아가 세계공화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만으로 안

될 것이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런 과정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면 좋겠다 생각이다.

김성균 <transition 2.0>이라는 영상을 보면 두 분 말씀하신 로드맵이 있다. 전체 16개의 전환운동을 하는 마을 사례를 소개하면서 크게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친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신뢰, 그 다음부터는 외부 자원을 끌고 들어오는 것, 마지막에는 그것으로 이 동네에서 어떻게 뿌리박고 살 것인지를 프로세스로 정리했다. 이 하나의 결을 저는 ‘사회화’(socialization)로 표현한다. 한국 사회는 제도부터 만들고 사회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학계에서도 의제를 정해놓고 제도와 정책을 얘기한다. 그런데 그 전에 기반이 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껴뚫어 보고 나서 제도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

사회 > 전환이라는 말 자체가 워낙 거시적이고 차원이 다양한 것 같다. 그렇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전환의 실마리는 말을 거는 데서부터라고 보인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시작이라고 보인다. ‘전환’이 다른 선택이라고 했을 때, 우리 삶의 선택으로부터 전환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세 분 말씀 감사드린다.●

특 집

‘청년’은 있다

스스로 서기,
함께 살기

生

28

전환의 시대
청년의 삶과
새로운 길 찾기
정규호

46

이 시대 청년으로
일한다는 것
기은환

55

청년에게
'일상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다
송준규

70

청년,
음식시민이 되다
박세영

80

청년과 농민이
만났을 때
김현

92

생협운동과
사회운동의 틈에서
청년운동의 미래를
생각하다
세토 다이사쿠

食

曲
農

전환의 시대 청년의 삶과 새로운 길 찾기

'킬링'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요즘 들어 청년실업¹⁾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청년' 세대가 처한 삶의 현실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 2월말 기준 청년 실업률이 11.1%로 지난 1999년 IMF 외환위기 직후의 실업률(11.5%)에 육박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등 불완전한 취업상태까지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22.9%~37.5% 정도여서 실제 상황은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²⁾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거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대부분을 바쳤던 공부의 목표를 소위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³⁾에 두었던 대다수 청년들에게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현실이 주는 충격과 허탈감

• 모심과살림연구소 소장

1) 일할 의지와 일할 능력이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일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것을 '청년실업'이라 부른다.
2) 통계청은 지난 4월 기준으로 20~30대 취업 무경험 실업자 수가 9만5천 명으로, 카드사태가 있었던 2003년 1월 이후 1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은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실업 문제가 청년들에게 특히 집중되고 있는 현실은 상대적 박탈감까지 키우고 있다.³⁾ 문제는 이런 청년실업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 등 청년들의 고용 상황도 점점 나빠지고 있다. 단기 계약직으로 취직한 청년 비중이 2008년 11.2%에서 6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취업자의 약 20%가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며, 수습 기간에는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청년들도 적지 않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20~30대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2/3(65.2%)가 정규 취업을 위해 열악한 인턴 근무 노동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금 청년들은 불량노동, 불안정한 노동은 물론 노동의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일을 통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청년들의 삶은 매우 심각하다. 높은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⁴⁾ 학자금 대출로 대학을 다닌 후 졸업해도 취업을 못해 부채를 안고 살아가다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는 지금의 현실을 ‘청년 실신’(청년실업자+신용불량자)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⁵⁾ 결국 청년이 처한 불안정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는 인생의 가장 큰 도전에서 있는 청년들을 ‘좌절 세대’ 또는 ‘포기 세대’로 만들고 있다.

이처럼 청년의 노동과 삶의 현실이 워낙 열악하다보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현실과 맞지 않은 말 대신 ‘젊어서

3) 우리나라 전체 실업을 대비 청년실업을 비율은 지난해 2.58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3배보다 높다.

4) 이들을 ‘알부자족’이라고 부르는데, 아르바이트로 부족한 학자금을 충당하는 대학생들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그리고 실제로 휴학생 7명 중 1명가량은 취업이나 병역이 아닌 경제 이유 때문에 휴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올해 대학졸업생 1,0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졸업생들의 평균 부채 규모는 1,300여만 원이며, 빚을 안고 졸업하는 대학생 비율은 58.4%로 5명중 3명 정도가 부채를 안고 사회에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생하면 골병 든다', '짧아서 고생은 늙어서도 고생이다'라는 자조와 한탄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미래를 희망하고 계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육체적으로는 물론 불안감과 무기력감, 좌절감과 분노 등으로 정신적으로도 고달프다. 한때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자기계발', '멘토', '힐링', '치유', '창업'과 같은 매력적인 말들은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다. 지금 청년들은 '힐링'을 통한 위로나 '멘토'의 격려보다 '킬링^{killing}'의 시대에 살아가기 위한 절박한 해결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청년을 바라보는 복잡한 시선과 그 이중성

1) 청년 문제를 다루는 방식들

청년의 삶이 사회의 관심으로 떠오르면서 언론에서는 연일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다루고 있고, 정부와 정치권도 각종 대책을 내놓기 바쁘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의미와 효력을 가지려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기본 틀 자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만들기, 중소기업 취업 장려, 청년인턴제도, 청년 창업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강화, 청년의 부당 노동 개선 등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 대책 밑바탕에는 청년들을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는 노동력 공급자 또는 고령화 사회를 지탱하는 부양자로 위치시키고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지금의 수출주도형 대외의존 경제, 토건 중심의 개발경제, 부채기반 공급경제로는 청년 문제의 해결은커녕 미래를 지속불가능하게 만들 뿐인데, 이것을 혁신하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더욱 강화, 확대시키려는 것이 지금까지 확인된 정부의 기조다.

청년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과 접근 태도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정치권은 청년을 기성 정당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수혈의 대상

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정당별로 청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청년위원회, 청년대변인 설치, 비례대표제를 활용한 청년의원 배출 등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⁶⁾ 가치 배분의 우선순위를 다루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현실을 보면 청년과 미래세대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배려를 발견하기 어렵다. 청년의 목소리를 정치적 의사결정 영역에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지금의 만 19세 이상으로 된 선거투표연령을 더 낮추거나 청년 비례대표를 확대하거나 당권을 젊은 세대로 이양하는 등의 노력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의 정당들은 이념적 차이를 떠나서 기성세대 정치인들의 기득권화 된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⁷⁾

2) 청년 담론에 내재된 엇갈린 시선들

청년을 바라보는 엇갈리는 시선들은 최근 청년의 현실을 다룬 각종 담론들에서도 확인된다.

화려한 스펙에도 불구하고 낮은 급여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지금의 청년들을 ‘이케아 세대’⁸⁾로 명명하는 것이 그 한 예다. 또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헛된 욕망을 버리고 현실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가리켜 ‘달관 세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본의 ‘사토리きとり 세대’⁹⁾를 우리말로 옮긴 것인데, 돈벌이나 출세에 큰 욕심 없이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식의 담론은 청

6) 정치권의 청년 세대에 대한 관심은 2010년 6.2 지방선거를 거치면서부터로, 당시 전체 유권자의 40%에 달하는 20~30대 젊은 세대의 투표율 증가가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7) 청년들을 대상화하고 수단화하려는 태도는 청년 활동가들의 재생산 문제를 고민하는 소위 사회운동 영역에서도 발견된다. 기성세대 운동가들은 청년세대와의 소통 확대에 대한 희망과 후배들에게 ‘꼰대’로 비춰지는 존재적 위치 사이에서 적잖은 고민을 하고 있다.

8)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학점 관리의 기본이고 각종 자격증과 어학연수, 공모전 입상, 인턴, 사회봉사 경력에다 심지어 성형수술까지 감행하는 지금의 청년들의 처지를 놓고, 세련된 디자인에 상대적으로 가격은 저렴한 해외 가구업체 브랜드 이름을 빌려다 붙인 것이다.

9) 사토리는 ‘깨달음’이란 뜻으로, 자기분수를 알고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안분지족(安分知足)의 삶을 깨달은 세대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년들이 당면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욱 도움이 안 된다. 경기 침체로 어차피 안정된 일자리는 얻기 어려우니 아등바등 살려 하지 말고 덜 일하고 덜 벌고 덜 쓰면서 소박한 삶에서 행복을 찾는 젊은이들을 새삼 지목해서 달관 세대라고 하는데, 절망적인 현실에 알아서 적응하고 만족해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게 하고 문제 해결의 의지까지 퇴행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적이다. 달관은 삶에 대한 희망이나 의욕을 가진 사람들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선택에서 나와야 건강한 것이다.

청년 문제와 관련한 담론들 중에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세대갈등론’이다. 고령화 시대에 조기 퇴직이 늘어나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50대 취업준비생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과 세대 간에 일자리 경쟁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이 세대갈등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연금개혁이나 정년연장제도 같은 것도 세대 간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이슈인데, 최근 공적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연금 관련 주무부처 장관이 ‘세대 간 도적질’이란 표현을 하고, 야당은 ‘대한민국 미래처형’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정치적 공방을 벌이면서 세대갈등론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세대갈등론으로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상당한 부작용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세대 갈등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고 문제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정된 자원을 놓고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갈등하는 것은 공멸의 길을 앞당길 수 있다. 기성세대 역시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삶에 대한 버거움을 점점 더 크게 느끼고 있다. 게다가 기성세대가 축적해 온 경험과 가치들도 빠른 변화 속에서 효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청년에 비해 기성세대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경력과 자원을 가지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과 여력이 더 큰 점 또한 사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3) 청년에 대한 기성세대 인식 전환의 필요성

무엇보다 청년세대, 청년 문제를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인식론적 전환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 현실에서 청년들은 기성세대로부터 이중적인 메시지를 동시에 받고 있다. 한편에서는 청년들에게 일탈을 금지하고 규범과 질서를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청년 창업을 위해 개성과 창의성, 도전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는 기성세대 자신들이 만든 이념의 잣대로 청년들을 이중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한쪽에서는 지금시대 청년들이 애국심과 공공의식이 결여된 채 이기적 개인주의에 물들었다고 비난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돈과 성공만 쫓는 신자유주의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고 비난한다.¹⁰⁾

대다수 기성세대가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면서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 데도 이중적인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청년의 보편적인 문제와 자신들의 자녀문제를 분리시켜서 바라보는 ‘내 자녀 예외주의’가 대표적인 예로, 청년 문제가 심각할수록 자신의 자녀들만큼은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자녀의 스펙과 경쟁력 강화에 온 힘을 쏟아 넣고 있다. 경기가 침체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번성하고 있는 사교육 시장은 이런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청년 문제에 대한 새삼스런 관심이나 떠들썩한 이야기들이 청년 당사자들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가기도 한다. 청년들은 ‘특별한 대안도 해결의 의지도 없으면서 그래서 어찌라고?’라는 질문을 기성세대에게 던지고 있다.

“청년세대는 이미 멘토의 탈을 쓴 청년 대상 장사치들에게 신물이 나 있다.

기성세대가 쓴 청년 대상 멘토의 책을 사고, 강연을 듣고, 사상을 따라 하는 것은 청년세대의 생존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 청년세대를 정말 걱정

10) 서명선, 2009: 234.

한다면 잘 알지도 못하는 청년세대를 이끌려 하지 말고, 청년세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달라.”¹¹⁾

결국 청년 문제를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시선과 접근 방식에 대한 성찰과 교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은 ‘세대적 전환기’에 당면한 청년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시대적 전환기’ 상황에서 청년이 당면한 총체적인 문제로서 청년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이것을 특정 세대의 문제로 제한하고 규정화시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을 ‘○○세대’, ‘△△족’ 같은 방식으로 이름 붙임으로써 청년들이 실제 당면한 복잡 다양한 삶의 총체적 모습들이 기성세대의 이해와 관심의 틀에 맞춰서 걸러지고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을 다시 묻다. 그들은 누구인가?

1) 생애주기 측면에서 본 청년

청년 문제에 대한 기성세대의 성찰은 청년에 대한 새로운 물음을 요구하고 있다. 청년 그들은 누구인가? ‘청년’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와 이들의 존재론적 특성을 통해 살펴보자.

오늘날 우리에게 청년은 아동과 성인 사이의 과도기적 단계로 존재하는 세대로서 그 의미가 고착화되어 있다. 연령으로는 대략 20~30대가 여기에 해당된다.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성인에 대한 개념의 범주도 시대마다 차이가 있고,¹²⁾ 그만큼 청년에 대한 정의도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다. 지금도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청년의 범주를 정하기에 곤란한

11) 유성호, 2015.

12) 조선시대만 해도 대략 남자는 16세, 여자는 14세부터를 성혼 연령기로 삼았다.

상황을 50~60대가 청년회장을 맡고 있는 우리의 농촌 현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청년을 생애주기 측면에서 삶의 과도기 또는 전환기로서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통념상 청년기를 취업과 결혼, 출산과 육아 등을 통해 성년으로서 독립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의 시기로 본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독립해나가는 것이 청년세대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업이라는 것이다.

이런 생애주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시대 청년들이 독립된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기에는 사회경제적 조건들이 매우 열악하다. 성장기에 부모 세대가 누렸던 평생직장과 노후보장에 대한 꿈도 사라진 지 오래다. 그 결과 지금의 청년들에게 독립이 주는 부담과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고, 그만큼 독립된 삶의 주체로서 자신감과 의욕이 떨어져 독립 시기도 점점 늦출 수밖에 없다.¹³⁾ 성인기로의 이행 과정도 시간이 더 걸릴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고통도 더 크게 받고 있다. 물론 이런 현실은 부모세대의 삶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년 구직자 절반 정도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경제적 불황은 계속되고 가계부채는 점점 늘어나고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후 준비도 제대로 해놓지 못한 대다수 부모세대로서는 독립을 미루는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 부담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청년 문제를 세대 공동의 주요 과제로 다뤄야 할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2) 사회적 과정과 맥락에서 본 청년

한편, 사회적 과정과 맥락을 통해서 지금 시대 청년의 존재론적 특성을

13) 경제적 독립을 못하고 부모에 의존해 살아가는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캥거루족' 또는 '빨대족'과 극심한 취업난으로 재학생 신분이 취업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절반 이상의 대학생들이 졸업을 미루는 'NG(No Graduation)족'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당연히 대학 모습도 바뀌어서 예전의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를 외치던 운동가들은 사라진지 오래고 대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생존의 활로를 찾으려는 외로운 개인들이 캠퍼스를 채우고 있다.

살펴볼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의 의미와 역할이 시대별로 변화되어 온 과정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청년’은 근대에 들어 형성된 개념으로 보는데,¹⁴⁾ 1900년대 초 일제 통치하에서 일본 유학생들을 비롯한 근대적 사고를 지닌 지식인 엘리트들이 애국계몽운동의 주요 주체로 등장하면서 청년이란 말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당시 청년은 생물학적인 연령보다는 사회 혁신과 독립국가에 대한 전망을 구체화해나가는 소명과 역할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되었다.¹⁵⁾ 사회 변화를 추동하는 주체로서 청년에 대한 인식은 해방 후에도 계속 이어져,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저항과 비판의 엘리트 지식인운동의 주체로서 청년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물론 한편에서는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과 자유의 추구가 새로운 형태의 청년문화로 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했다.¹⁶⁾ 주목할 점은 정치 민주화를 향한 지식인 엘리트 운동으로서 청년의 역할과는 별개로 1970년대를 거치면서 노동자와 농민, 도시빈민 등 사회적 약자들과 현장에서 함께하는 청년운동이 분화되어 나타났다는 점이다. 1970년 전태일 분신자살 사건, 1977년 함평 고구마 사건, 1979년 오원춘 사건, 그리고 청계천을 비롯해 각종 도심 재개발사업에 따른 철거민 투쟁 등이 기존의 엘리트적 청년운동에서 민중지향적인 운동을 분화시켜냈다.

그런데 1980년대 들어서면서 청년운동에 또 한 차례 성격 변화가 일어난다. 1980년 광주민주항쟁 이후 정치 민주화와 통일을 중심으로 청년과 재야운동이 결합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제도권 정치참여 운동이 확대되면서 현장 지향적 운동의 흐름은 약화되었다. 여기에다 88서울올림

14) 동아시아에서 청년이라는 말은 1880년 일본에서 YMCA를 기독교청년회로 번역하면서 처음 등장했고, 우리나라 역시 기독교청년회와 함께 청년이라는 말이 쓰였다고 보고 있다(이기훈, 2004: 211-212).

15) 이기훈, 2004.

16) 70년대에 ‘통·생·불’ 즉 통기타, 생맥주, 청바지가 새로운 청년문화로 등장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주창윤, 2006: 95).

픽 이후 대중소비사회가 확산되고, 사회주의권 붕괴와 냉전체제의 해체로 사회정치적 환경도 크게 바뀌게 되었다. 청년운동의 중심 세력이었던 대학생의 사회적 지위가 크게 약화되기 시작한 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민주화의 결과로 이루어진 교육개혁 조치와 함께 대학생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선택받은 엘리트 집단’으로서 대학생이 가졌던 위상은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¹⁷⁾ 이처럼 사회적 변화와 혁신을 추동하는 운동의 주체로서 청년의 역할은 약화된 반면, 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의 성장과 전면적인 지구화, 소비주의 확대 속에서 새로운 소비주체로서 청년이 주목받게 되었다. 보편적 가치보다는 자기실현에 관심이 더 많은 자기중심적이고 소비지향적인 새로운 청년들의 모습에 주목한 소위 ‘신세대’ 담론도 이때 등장했다.¹⁸⁾

그러다가 1997년 IMF 경제위기를 맞아 사회 전체가 승자독식의 치열한 경쟁상황에 내몰리면서 엄혹한 생존논리가 청년들의 삶을 옥죄기 시작했다. 바늘구멍처럼 좁아진 취업문을 뚫기 위해 대학은 취업준비 학원으로 변하고, 경제위기 이후 부모세대가 당면한 어려운 살림살이의 여파와 함께 고시촌과 반지하 월세, 아르바이트 전선에 내몰린 청년들의 삶은 더욱 고달파졌다. 이런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2000년대에 들어서 청년들 사이에서 ‘자기계발서’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개인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찾으려는 청년들의 열망이 역설적으로 표현된 것이다.¹⁹⁾

주목할 점은 이런 흐름과는 별도로 당시 ‘월드컵’과 ‘축볼’로 상징되는 청년들의 자발적인 결집과 집단적 행동 양식이 표출되면서 ‘참여세대’로서

17) 소영현, 2012: 388.

18) 새로운 소비문화 주체로서 X세대, 정보화에 따른 네트워크 세대로서 N세대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다.

19)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까지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시켜서, 결국 ‘자기 계발하는 주체’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는 진단도 나왔다(서동진, 2009).

청년들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²⁰⁾ 그런데 청년들의 참여적 역동성은 2008년 권위주의 정권의 등장과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지속성장’, ‘균형성장’, ‘민주주의 발전’과 같은 기존의 믿음 체계가 뿌리째 흔들리면서 함께 위축되었다. 그 결과 기성세대(부모)보다 훨씬 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도 더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고 취업은 훨씬 더 어려워진 열악한 조건에서 살아가야 하는 청년세대들의 불안과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안정된 직장을 갖고 가정을 일구어 살아가는 것이 기성세대에게는 소박한 꿈이었으나 오늘날 청년 세대에게는 점점 더 실현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 자기계발서의 효력은 상실되고 청년을 위로하는 소위 ‘힐링’ 담론들이 유행했으나 그 효과 역시 오래가지는 못했다.²¹⁾

이런 사회적 흐름과 맥락 속에서 살펴볼 때, 지금의 20~30대 청년세대는 19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중반 사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던 시기에 태어났다. 세계적으로는 사회주의권 붕괴와 함께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는 시기였고, 국내에서는 군사독재 종식과 민주주의의 확장, 그리고 본격적인 대중소비사회의 등장과 함께 세계화와 정보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인식의 지평이 크게 확장되던 시기였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해외여행 자유화나 전교조를 통한 교육개혁운동도 지금 청년들의 성장기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 IMF 경제위기를 맞아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가족이 해체되는 부모 세대의 고통과 불안감이 청년들 성장기에 영향을 미쳤고, 사회 진출을 앞두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 속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온몸으로 감당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보니 지금의 청년세대 인식체계 속에는 개성과

20) 선거정치에 영향력을 미칠 정도 참여 주체로서 P세대, 월드컵과 붉은악마로 표출된 W세대 등이 그 예다. ‘2030’이라는 신조어도 이때 등장했다(이동연, 2004: 135).

21) 소영현, 2012: 392.

다양성, 자유로움의 정서와 존재론적 불안감과 불신의 정서가 서로 이중적으로 긴장 상태를 이루면서 공존하고 있다. 과제는 존재적인 불안정성과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함께 지닌 소위 ‘낀 세대’에 놓인 청년들이 어떻게 스스로의 삶의 정체성과 구심력을 다져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청년 문제, 어떻게 이해하고 다가갈까?

가장 가까운 미래세대인 청년의 어려운 삶을 방치하면서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다. 지금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총체적 문제들이 청년세대에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는 시대다. 게다가 사회경제적 조건 자체가 급변하면서 점점 파편화되고 있는 청년들의 불안정한 삶을 국가의 보호나 부모의 후원에 의존해서 해결하는 것도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청년이 당면한 삶의 문제를 특정 세대에 한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다. 청년은 더 이상 기성세대의 이해의 ‘대상’이자 멘토링과 힐링, 즉 가르침과 치유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의 청년 문제는 우리 시대를 진단하는 ‘거울’이자 미래로 나아가는 ‘실마리’를 담고 있다. 따라서 청년과 기성세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청년 문제를 통해 사회 전체적인 흐름과 현황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데 있어 특히 기성세대의 성찰과 결단이 중요하다. 기성세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청년들이 기존과 다른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전환의 계기를 앞장서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지나온 성장의 시대가 남긴 결과물과 앞으로 살아갈 저성장 시대의 도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0년 동안 한국경제는 GDP 규모는 약 1000배, 1인당 GDP 규모

는 약 400배 증가할 만큼 양적으로 빠른 성장을 해왔으며,²²⁾ 현재 세계에서 무역규모는 7위, GDP 규모는 15위를 기록하고 있다.²³⁾ 하지만 이런 경제적 성과의 이면에는 공동체 붕괴와 삶의 질 악화가 자리하고 있다.²⁴⁾ 주목할 부분은 자살률의 가파른 증가로, 현재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30대 청년들의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2000년 13.1명에서 2013년 23.2명으로 크게 늘었다. 매우 심각한 일이다. 그런데 자살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과거보다 경제가 성장하고 물질이 더 풍요로워졌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배경과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있어야 한다.

게다가 지금은 성장의 부작용을 넘어서 성장 자체가 도전받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우리 사회 역시 성장이 정체되고 고착화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1970년대에 10%대, 1980대에 9%대, 1997년 IMF 경제위기 전까지 7%대를 보이다가,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4%대, 금융위기 이후에는 3% 중반대를 보이는 등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²⁵⁾ 이런 가운데 심각한 양극화와 일자리 부족으로 살림살이는 점점 팍팍해지고 있고,²⁶⁾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고령층은 물론 젊은 층의 의식과 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빈곤이 대물림되고 고착화되면서²⁷⁾ 돌봄과 복지에 대한 수요는 점점

22) 1953년 우리나라 GDP가 13억 달러, 1인당 GDP는 66달러였던 것이 2013년에는 각각 1조 3천억 달러와 25,973달러를 기록했다

23) 현대경제연구원, 2015.

24) 우리나라의 공동체 관련 분야는 OECD 국가 중 34위로 낮은 편이며, 삶의 질 순위 또한 25위로 저조하다.

25) 최근만 보더라도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작년 10월에는 3.9%로 전망했는데, 올 1월에 3.4%로 낮추더니 지난 4월에 다시 3.1%로 하향조정해 발표하고 있다.

26) 가계부채는 빠르게 증가해, 지난해 최초로 1,000조 원을 넘어섰으며 현재 1,1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작년 말 가계신용은 약 1,090조 원으로 국민 1인당 2,150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으며, 금융자산 처분으로 금융부채를 전액 상환할 수 없는 가계부채 한계가구도 12.5%로 137만 가구에 달한다.

2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2014)에 따르면 2013~2014년간 빈곤탈출률은 22.6%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늘어나고 있으나, 세수 감소와 재원 부족으로 정부가 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처럼 경제와 사회의 동시적인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가 동반 추락할 수밖에 없다. 노인 빈곤 문제²⁸⁾는 부모 부양으로, 청년 실업 문제는 자녀 부양으로 양쪽 세대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족과 커뮤니티 또한 삶의 안전판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 ‘알건 다 아는’ 청년들의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은 점점 커지고 있고, 무한경쟁이 주는 압박감은 무임승차에 대한 분노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세대는 지금 인구 구성이나 영향력 면에서 ‘비주류’다. 소위 ‘늙어가는 대한민국’이라 불리듯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또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 청년들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자원 자체가 기본적으로 부족한데다,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여론화하고 연대를 통해 조직적으로 해결하는 경험도 부족해서, 사회·정치적 영향력도 중장년과 노년층으로 넘어가고 있다.

결국 지금 시대 청년들은 어렵고도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자기계발서를 읽고 스펙을 쌓아 개인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정규직 노동체제로 편입하는 데 열정을 바치고, 지친 마음을 멘토의 힐링이나 치유로 달랠 것인가? 희망을 주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마냥 표출할 것인가? 아니면 어려운 현실을 일찍이 자각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포기한 채 현실에 적응해 살아갈 것인가?

문제는 비주류화 된 상태에서 사회 전 영역에서 배제되고 있는 청년들을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 일자리의 양적 확대를 통해 지금의 사회 시스템 속

28)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은 OECD 평균보다 4배 이상 높고, 노인 자살률 또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에 다시 집어넣고 통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을 독려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는 정부 정책도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새로운 길을 찾아낼 것인가?

전환기 청년의 삶을 위한 협동과 공동체 전략

부모의 소득 불평등이 자녀의 학력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청년 세대의 취업과 건강 등 삶 전체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사활을 건 경쟁 속에서 관계는 단절되고 낙오와 소외, 배제에 대한 불안감과 피로감이 확대되면서 소위 ‘피로사회’, ‘탈진사회’가 청년들에게 주는 삶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²⁹⁾ 여기에서 지금처럼 국가와 가계의 부채가 계속 늘어날 경우, ‘100세 시대’라는 말이 무색하게 청년들이 당면하게 될 노후의 삶은 더욱 비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누군가에 의해 정체성이 규정되고 기능적인 역할로서 대상화되는 청년이 아니라 생애주기는 물론 시대적 전환기에서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서 청년에 대한 인식과 역할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

우선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이끌어 온 지배적인 가치나 시스템에 의존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점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전환은 ‘새로움’과 ‘대안’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있을 때 비로소 그 가능성이 확장될 수 있다. 지금처럼 승자독식의 치열한 적대적 경쟁체제에다 패자부활의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

29) 정규호, 2014: 140.

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청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 실패가 용인되고 그것이 성장과 학습의 기회가 되도록 해서 청년의 도전과 고생스런 수고가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가진 인적, 물질, 사상적 자원들이 청년 세대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현실 사회의 자원과 권력의 흐름을 바꿔낼 수 있는 기성세대의 책임 있는 결단이 중요하다. 기득권과 고정관념을 스스로 내려놓고 미래세대의 가능성을 넓히고 현실화 할 수 있는 조건과 기회를 만들어 주는 기성세대의 징검다리 역할이 요청되고 있다.

나아가 전환기 청년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협동과 공동체 전략들이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일찍이 생명협동운동을 통해 새로운 문명의 길을 모색했던 「한살림선언」에서 강조했던 “생명의 세계관에 입각한 협동적 생존의 확장”의 의미를 지금 시대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적극 참고해 볼 수 있다. 풀뿌리, 지역 차원에서 협동과 공동체를 통해 자립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은 생애주기에서 독립을 당면 과제로 둔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생활의 기본 필요(의·식·주, 교육, 의료 등)를 협동의 방식을 통해 충족시키면서 공동체에 대한 감각을 기르고 개별화된 소비에서 발생하는 지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협동은 전환의 시대에 삶의 지혜이자 생존의 비결이다. ‘나는 나, 너는 너’라는 분리된 사고로 각자도생(各自圖生)하는 방식으로는 공멸을 앞당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과 가족 단위를 넘어선 연대와 협동을 통해 커뮤니티에 기반한 서로살림의 호혜적 그물망을 든든하게 만들어서, 급속한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하고 정서적 유대감과 삶의 안정감을 높여 나가는 것이 청년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들어 홀로 감당하기에 벅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의 관심과 필요를 나누면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길을 찾아 나선 청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도시털밭 활

성화, DIY 문화의 부흥, 귀농귀촌 인구 증가, 에너지와 먹을거리 자립 운동의 흐름 속에서 국가와 시장은 물론 부모와 자연생태계에 대한 수동적 의존에서 벗어나서 대안적 생활양식을 실험하고 자립적 문화운동을 펼쳐가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청년세대의 생존과 자립을 위한 노력들과 만나고 있다.³⁰⁾ 삶의 전환을 위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 나선 청년들은 스스로 먹을거리를 생산해서 직접 요리해 먹고, 옷을 만들고, 집을 고치고,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있는 방법들을 익히면서 삶의 기술을 체득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스스로’(自)의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주체로서 청년 문화와 운동들은 더욱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즉 자각(自覺), 자작(自作)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협동과 연대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온전한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회복함으로써 자립(自立)과 자치(自治)를 실현해나가는 것은 삶의 민주주의를 체득하는 길이자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다.³¹⁾

이처럼 국가주의, 성장주의, 관료주의의 영향력으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지역과 생활 현장에서 동료와 이웃들과 함께 협동을 통해 힘을 길러내고 삶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기 위한 노력은 소위 ‘후쿠시마 세대’, ‘세월호 세대’로 불리는 지금의 청년 세대가 새로운 살림의 시대를 열어가는 주체로 당당하게 서는 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청년들의 노력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일이야말로 ‘돈보다 생명’이 중요한 사회를 염원하는 기성세대의 윤리이자 책무라 할 것이다.●

30) 송수연, 2013: 146-149.

31) 송수연은 이것을 자립문화운동이라 칭하며 기존의 체제와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에너지이고 활동이라고 부르고 있다(2013: 159).

참 고 문 헌

- 서동진. 2009.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돌베개.
- 서명선. 2009. “그들은 관찰한 것일까. 관찰된 것일까: ‘잉여’들의 새로운 시작”. 우석훈.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 레디앙.
- 소영현. 2012. “한국사회와 청년들: ‘자기파괴적’ 체제비판 또는 배제된 자들과의 조우”. 『한국 근대문학연구』, 제26호.
- 송수연. 2013. “새로운 문화정치의 장, 자립문화 운동: 문화귀촌, 청년의 소셜 네트워크, 메이커 문화”. 『문화과학』, 제73호.
- 유성호. “청년은 ‘당신의 평등’이 아니라 생존을 원한다”. <Slow News> 2015. 5. 12.
- 이기훈. 2004. “청년, 근대의 표상: 1930년대 ‘청년’ 담론의 형성과 변화”. 『문화과학』, 제37호.
- 이동연. 2004. “세대문화의 구별짓기와 주체형성”. 『문화과학』, 제37호.
- 정규호. 2014. “생명위기 시대와 협동운동”. 『녹색평론』, 제137호.
- 주창윤. 2006. “1970년대 청년문화 세대담론의 정치학”. 『언론과 사회』, 제14권 3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2014 한국복지패널기초분석 보고서」, 2014-30.
- 현대경제연구원. 2015. “광복 70년, 경제·산업 변화와 시사점”. 『VIP 리포트』, 통권 599호(15-2).
-

이 시대 청년으로 일한다는 것

대학교를 수료할 즈음 나의 진로는 백수^{白手}였다. 당시의 나는 백수야말로 빛나는 가능성의 총체라 믿었다. “속절없는 무능은 오히려 타락한 세속의 속살에 파고들어 깊은 균열을 안길 수 있다”는 내 스승님 말씀에 한껏 동의했으므로 나에게 백수라는 진로보다 더 나은 직업은 당장 없어보였다. 나는 완전히 무능했고 빈손이었으며 자유로운 이십대 중반이었기에 백수의 조건으로는 완벽한 듯 보였다.

다만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며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이어가는 부모님과 사남매 중에 맏이라는 자리의 무게에서만큼은 자유롭지 못했다. 나의 진지한 진로는 대개 철딱서니 없음으로 또는 현실을 모르거나 부정하다가 아예 도피한 것쯤으로 치부되었다. 가슴 아프게도 나는 부모님의 ‘자랑’이 지 못했고 언니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으며 지 혼자만 생각하는 ‘이기적 존재’로 전락했다. 가족을 충분히 설득할 만큼의 언어와 생활이 내게

-
- 현재 'OO은대학'에서 지역-사람-자원을 잇는 술래로 성장 중이며 '서울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인식의 노동, 정서의 노동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몸이 좋은 사람이 꿈이다. 툼이라는 별칭을 사용한다.

부족했던 것이다.

예상했던 가족의 저항만큼이나 어려웠던 또 하나의 문제는 ‘먹고사니즘’이었다. 나는 금수저 아닌 밥수저만 물고 태어난 평범한 사람인데다 부모님께 빈손을 벌린다는 것은 세 명의 동생이 있는 나에겐 양심이 없는 일이었다. 특별한 기술도 특출난 재능도 없는 내가 당장 가진 것이라고는 학비 전액의 학자금 대출뿐, 이런 상황에서는 대학시절 늘 그랬던 것처럼 바쁜 끝벌 같은 아르바이트생은 가능해도 시간이 많은 백수는 불가능한 꿈이었다.

그때 마침 한 시민단체 대표님께 상근을 제안받았다. 가진 것 없던 내가 호기롭게 백수를 지향하는 모습을 도리어 인상적으로 보셨던 것 같다. 고등학생 시기를 청소년단체와 함께했고 대학 시절 인권단체 인턴을 했던 터라 시민단체가 낯설지는 않았다. 준비 없이 ‘운동’의 세계에 발 들인다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었지만, 백수 못지않게 활동가 또한 세상과 사회를 배우며 공동의 것들을 만들어나갈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백수 지망생 신분은 잠시 내려놓고 나의 첫 번째 일-노동이 시작되었다.

긴 듯 아닌 듯, 고용노동의 시작

단체는 대표님 두 분과 상근자인 나까지 총 세 명이었다. 조직 규모는 작았지만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신 두 대표님과 플랫폼 성격의 조직 특성 덕분에 비교적 짧은 시간 내 시민사회의 많은 분들을 만나며 다양한 일을 경험할 수 있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배움의 순간이자 만나는 모든 이가 배움의 존재라는 말처럼 사회 초년생인 내게 매 순간 성장의 기회들이 축복처럼 펼쳐진 듯 보였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은 별개의 문제였다. 대표님이 바빠 지실수록 업무는 점차 늘어나고 다양해졌다. 상근자가 나뿐이었기에 업

무를 물어볼 사수가 없었고 일을 분담하고 비전을 공유할 동료도 없었다. 자연스레 업무시간이 길어졌고 초보인 나는 일을 잘 해내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 일하는 구조 속으로 스스로를 들이밀었다. 축복처럼 펼쳐져 있던 내 일이 양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노동으로 변하는 건 한순간이었다. 낮은 활동비도 고민의 한 축이었다. 이미 짐작했고 각오한 바였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학자금, 통신비, 교통비, 보험비, 각종 CMS출금과 경조사비까지 하면 월급은 금세 로그아웃, 식비와 생활비도 부족한데 저축은 꿈같은 이야기였다. 마치 시지프스 신화처럼 매달 0에서 새로 시작하는 통장을 볼 때마다 내 삶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겼다. 나 개인이 삶을 생애사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기란 이 상태로는 불가능해 보였다.

좋은 일, 다른 삶을 살고자 활동가가 되었지만 정작 내 현실에서 좋은 삶은 점점 아득해졌고, 자본주의적 자가 착취로 지쳐가고 있었다. 어느 순간 웃음이 사라졌고 눈은 탁해졌으며 정신은 둔해졌다. 몸과 마음이 소진된 자리에는 우울이 들어섰고 냉소가 나를 지배하게 두었다. 방어 기제와 억울함이 깊어짐과 동시에 결국 모든 문제는 나의 부족으로 돌아와 자존감이 바닥을 쳤다. “노동하지 않으면 삶은 부패한다. 그러나 영혼 없는 노동을 하면 삶은 질식하여 죽어간다”는 알베르 카뮈의 말을 계속 곱씹게 되었다.

그때 마침 사건 하나가 생겼다. 일 시작 후 1년 반, 여전히 어려움을 붙안고 있던 시기였다. 학교로부터 통지서 한 통이 날아들었는데, 이번 학기에도 졸업하지 않으면 재입학해야 한다는 일종의 경고문이었다. 나에게 졸업이란 ‘언젠간 해야지’ 정도의 막연한 것이었기에 졸업요건으로 제시된 사항 중 갖춰놓은 게 하나도 없었다. 졸업 준비를 더는 미뤄선 안 될 것 같아 부랴부랴 사직서를 썼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학부생을 마감, 마침내 진짜 백수가 되었다.

이 시대 [청년백수 1]의 자화상

아, 내가 (드디어) 백수라니...!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 씁이었지만, 사실 절실히 바랐던 여유이기도 했다. 이번엔야말로 백수의 잉여로움에서 잉태되는 다양한 가능성을 수렴하여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었다. “지속가능한 창의백수”라는 부제도 붙였다. 생활비가 필요했기에 임금노동을 해야했지만 기왕이면 나의 일을 자율 노동, 주체 노동으로 꾸려보자 생각했다. 주어진 밥상에 숟가락 얹으며 사는 삶보다는 건강한 식탁을 차리고 이웃과 나누는 삶을 만들고 싶었다.

그런 연유로 나의 첫 자율·주체 노동은 ‘농農’으로부터 시작했다.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 많던 나와 내 친구들은 2012년부터 한 달에 한 번 충남 홍성군 홍동 지역에 내려가 농을 만났다. 도시에선 찾기 어려운 생명과 생태, 공동체적 가치가 넘실대는 그곳에서 우리는 청년 삶의 진로-농 진로, 농 창업, 농적인 삶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주머니가 얇은 친구들은 서울과 홍성을 오가는 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었는데, 백수가 되니 나의 시간과 노동력을 기꺼이 청년 도농교류 지원 프로그램에 쏟을 수 있었고 우리는 반년 동안 금전적 어려움 없이 도농을 오갈 수 있었다.

두 번째 자율, 주체 노동의 주제는 ‘사회적경제’였다. ‘다른경제 학습 동아리’¹⁾라는 학습 조직에서 사회적경제의 역사와 사상, 실천 등을 배울 기회가 생겼다. 학습 도반들은 사회적경제를 몸으로 살아내기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애쓰시는 분들이었다. 학습이 진행되면서 선생님과 도반들은 서로의 삶을 함께 성찰하며 상호의존적 존재로 공생의 감각을 조금씩 습득해나갔다. 비교적 시간이 자유롭던 나는 조교로 학습 진행을 도

1) 시장경제만을 경제라 생각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사람과 삶의 터전’이라는 시각에서 사회현상과 경제를 새롭게 사고하고자 모인 학습 동아리. 학습 도반들은 서로 주체성을 가지고 만나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습을 통해 모두의 자유를 확장시키고자 공동으로 노력했다.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11차례 스터디를 진행했고, 현재 격월로 만나면서 학습과 관계를 더욱 다채롭게 이어가고 있다.

울 수 있었고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에 담당자로 참여하여 학습의 여유와 깊이에 힘을 보탤 수 있었다.

이렇듯 나의 노동은 공동체와 연동되어 쓰일 때 빛이 났다. 때로 노동의 고된 순간들도 찾아왔지만 자기 노동의 주체로 공동체를 위해 즐거운 만큼만 일한 것이었기에 금전적 대가는 없어도 열정페이와는 전혀 다른 노동이 되었다. 내면에서 우리나라는 행복한 노동. 일할수록 관계부자, 마음부자가 되는 느낌이었다.

물론 나는 여전히 가난했다. 그러나 이전의 백수 지망생 시절과 달라진 점은 나의 살림살이를 함께 고민해주는 분들이 생긴 것이었다. 시민사회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은 스스로 노동을 조직하며 살고 싶다는 내 생각을 지지해주셨고, 다양한 형태의 일거리를 연결해주셨다. 이러한 일들 중 대개의 것들-시민사회 영역 행사 보조, 사회적경제 설문조사 진행, 서울시 청년허브 청년학교 조교 등-은 그 노동이 곧 진로와 맞닿은 공부가 되었다. 또한 이 덕분에 생계를 꾸리면서도 앞서 자율·주체 노동의 경험처럼 공동체를 위한 노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어떤 노동은 반대로 자존감을 앗아가기도 했다. 대개 나의 노동이 열정, 자원봉사, '좋은 경험한 셈'으로 둔갑되었을 때였다. 미리 약속한 노동의 대가가 아닌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금액을 지급 날짜로부터 한참을 지나 받기도 했고, 활동비를 준다고 해서 한 달 넘게 일했는데 나중에서야 활동비 받는 게 필요하냐고 서로 알아가는 과정으로 생각하자며 무급으로 수렴될 때도 있었다. 특히 좋은 일 하자고 모인 곳에서 내 노동이 쉽게 여겨질 때, 그런 취급을 받고도 싫은 소리 못하는 내 모습이 진짜 무능하게만 보였다.

꼭 필요한 생활비만 벌면서 시간이 많은 사람이고 싶었던 나.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최저시급의 아르바이트생이었다. 매달 지출하는 고정비용이 높으니 이런 형태의 노동으로는 오랜 시간 일해야만 했다. 애초의 바람이었던 식탁을 차리는 삶은 저 멀리 떠나가고 맨밥에 물 말아

먹는 처지쯤으로 느껴졌다. 우울과 부정적 생각이 가득한 내선순환 열차를 타고 나는 선로만 빙빙 돌았다.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왜 이리 어려운지, ‘시간대비 고소득’ 할 재주가 없다면 내가 사는 대한민국 자본주의 땅에서 백수의 지속은 욕심이었다.

청년의 마음 구조 살피기

지금까지의 기록은 [청년백수 1]로서 내 노동의 역사다. 당연하게도 나는 전체 청년의 표준이 아니며 다수를 대표할 수 없다. 이미 청년세대 내에서도 나이, 거주지, 학력, 빈부, 성별, 성적 취향, 혼인 여부 등에 따라 가지고 있는 고민과 이슈, 노동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지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나열했던 시민단체, 백수 지향, 농農적인 삶, 사회적경제 모두 일반 청년의 키워드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나의 사례를 들어 청년세대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내 글 속의 고민과 어려운 감정들이 우리 세대와 함께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 청년들의 지배적인 감정구조는 무기력과 불안, 소진이 아닐까. 각자도생 위험사회에서 다수 청년들에게 노동의 현장이란 자아실현의 장이 아닌 비정규직, 계약직,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열정의 수탈과 소외, 노동 착취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곳이다. 무한경쟁을 강요받으며 자라왔기에 ‘함께’가 익숙하지 못한 우리는 외로워도 슬퍼도 연대하지 못하며 결국 익숙하게 혼자 섬이 된다. 삶의 전망보다는 살아남기가 시급하기에 모래밭 위에 성을 짓듯 불안 위에 생존의 탑을 쌓는다. 속이 텅 빈 공갈빵 같은 기분을 상시적으로 느끼며 외로움과 슬픔 모두를 1인칭으로 수렴시킨다.

이런 우리를 두고 청년세대 담론이 무성하다. 88만원 세대(우석훈)부터 출발하여 3포(연애, 결혼, 출산), 5포(인간관계, 내 집 마련), 7포(희망 직업, 꿈)세대를 지나 모든 것을 자포자기해버렸다는 다포기 세대, 그리고

이제 포기를 넘어서 달관의 경지에 올랐다는 달관세대까지 등장했다. 이에 더해 청년세대를 생존, 독존, 공존, 탈존(김홍중)이라는 네 가지 존재 형식으로 분류하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내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청년세대만큼이나 빈번하게 호출되는 세대담론이 또 있을까. 이미 산업화된 ‘청년을 위한 시장’은 지속적으로 청년, 청춘이라는 단어를 대중에게 노출시키며 그들을 위한다는 책, 영화, 여행, 힐링 프로그램을 셀 새 없이 찍어내고 있다. 여타의 상품들처럼 이 시장에서 청년 역시 팔릴 만한 가치재로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소비된다. 청년 시장은 청년의 불안을 타고 그 규모를 키워 가는데, 이상하게도 불안은 가시질 않는다. 이는 마치 전염병을 잡는다고 떠들지만 실상은 불안만 자극하고 증대시키는 시대의 형국과 닮은 듯하다.

그런데 다양한 담론과 상품 속에서 담아내는 청년세대의 모습은 설령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일지라도 불편하고 거북한 데가 있다. 그곳에서 청년들은 주로 수혜의 대상이나 미완한 인간, 불쌍한 존재쯤으로 묘사되기 때문이다. 또한 배경만큼이나 다양한 청년들의 마음 구조는 잘 살피지 않으면서 알팍한 심리와 의식의 일부만 읽고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하는 느낌이 든다. 이들이 피상적 진단만 반복하고 대안을 만드는 데 게으른 사이, 청년들은 소모되어 지쳐가고 임시·과도기적 청년 시기를 지나 대책 없이 다음 세대로 밀려나 버린다.

나는 청년들이 여전히 자아실현을 욕망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를 다포기 세대, 달관 세대로 만드는 사회 구조에서 욕망의 실행은 곧 빛이 되며, 그것을 바라봤자 성취의 가능성이 미미하기에 ‘이번 생은 글렀어요.’ ‘우린 안 될 거야, 아마’라며 포기한 듯 달관한 척 사는 것이다. ‘포기하다’와 ‘달관하다’는 청춘의 동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 세대가 두 동사로 주어를 설명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 사회가 청년들의 열정 열매만 따먹고 그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탓은 아닐까.

각자도생에서 공생의 삶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은 이미 소수자다. 단지 ‘사회적 약자’일 뿐 아니라 실제로 청년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지난 10년 사이 15~29세의 청년 인구가 65만 명가량 줄어들었다.²⁾ 이는 서울시 4개 구를 합친 인구수와 맞먹는다. 이 추세대로라면 한국은 2018년 인구절벽이 도래하고 2033년 국가 파산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하는 이유는 청년의 실종은 곧 우리 사회의 성장이 멈춘다는 것과 같은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저성장이 빚은 고실업 문제와 그에 따른 승자독식을 부추겨왔다. 또한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령화 문제와 세월호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위기 상황에서 작동하기를 거부하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생산하는 사회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문제는 더 이상 ‘청년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닌 ‘청년이 그만큼 고통 받고 있다’로 읽혀야 맞다. 또한 청년의 고통은 곧 세대와 무관하게 확장될 것임을 알고 청년 문제의 해법들을 세대를 아울러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청년 문제의 해결은 청년을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시각 교정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본다. 우선, 결코 동질화될 수 없는 청년세대를 간편하게 규정 짓고 단정하는 습관을 버렸으면 좋겠다. 대신 청년들 스스로 그들의 문제에 가닿을 수 있게,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고 호명할 수 있게, 넘어쳐도 무릎이 깨지지 않을 흙바닥을 신명나게 깔아주었으면 한다. 시대의 문제를 첨예하게 고민하고 공감의 언어로 풀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을 구체적인 정책으로써 응원하고 지지해주기를 바란다.

이미 과성숙한 자본주의는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이제는 청년 노동을 희

2) ‘10년간 청년일자리, 인구보다 더 빨리 줄었다’, 경향신문, 2015. 3. 25

생시키며 성장 위주 사회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저성장 사회에서 어떻게 함께 살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청년을 비롯한 모든 세대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시민수당, 기본소득, 주거 복지 등의 두터운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나 가능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독일은 1970년 1인당 국민소득 3천 달러에 못 미쳤을 때 청년 복지 제도를 시작했다고 하니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육박하는 한국이 못 해낼 이유가 전혀 없다.

아마 다들 느끼고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곧 우리 삶에 파국이 닥치리라는 것을. 이제 다른 삶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에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라도 각자도생의 삶에서 공생의 삶으로의 시대 전환을 일궈내야 한다. 생명의 가치 및 공동체적 가치의 성찰을 가능케 하는 호혜와 환대의 장을 사회의 기본 작동 원리로 삼고, 신뢰와 친근감을 바탕으로 새롭게 우리의 관계를 뜨개질해야 한다. 더불어 사는 평민, 그 무능의 급진성을 과감하게 믿고 인간과 자연은 동무로 만나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만 우리의 노동은 자율적으로 구성되고 각자의 자아실현과 맞닿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제 나는 스물아홉, 이십 대 끝자락이다. 그리고 백수의 시절을 지나 올 3월부터는 '○○은대학'의 술래로, '서울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매니저로 새 노동을 시작했다. 물론 역시나 느끼는 것은 노동은 늘 새롭게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도 그간 시도했던 노동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대안적 주체 노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과정이라 믿는다. 달빛에 옥수수가 익는 것처럼 우리의 노동 또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하게 익어갈 것이다. 이성으로 비판하되 의지로 낙관하며 내 노동의 주체로 설 때까지 우리 존재 모두 힘내기!●

청년에게 '일상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다 - '과천 청년들'의 사례로 본 지역과 청년의 상호작용

'포기 세대'우리 사회가 청년을 바라보는 시선

청년, "일상과 미래를 포기한다"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 여기에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더하여 '5포', 더 나아가 꿈과 취업까지 포기한다는 '7포' 세대. 우리 시대의 청년을 부르는 호칭이다. 취업이 어렵고 집값이 높아 청년들이 각종 일상과 미래를 포기한다는 이러한 현상. 이 시대를 청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청년들에게는 그 하나를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이다. 연애도 하고 결혼해서 가정도 꾸리고 애도 키우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생계를 유지할 돈이 있고, 안정된 퇴직까지 보장된다면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비

* 도시와 공동체를 고민하고 관찰하는 인류학도. 과천 신도시가 지어질 때 태어나자마자 이사 와서, 도시와 함께 성장한 신도시 청년. 11개월째리 아들 동둥이를 과천에서 키우고 있다. 고향에서 인류학 현장연구를 해서 석사 학위논문 「부모됨·이웃됨·시민됨-과천시 풀뿌리 시민운동의 형성과 도전」을 썼다.

정규직에 월급은 적고 업무량은 많아서 야근이 잦으며, 비싼 집값 때문에 직장과 거주지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등의 혹독한 조건 속에서 일상은 메달라갈 수밖에 없고 청년들은 자연스레 미래를 포기해서 현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청년 시절은 꿈과 이상만으로도 빛나는 시절이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청년’이기를 포기해서라도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있다. 신영복 교수는 “사회의 뿌리가 사람이고, 사람의 뿌리가 청년시절에 자라는 것이라면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사회의 비극”이라고 표현했다. 혹독한 처지에 놓여있는 지금의 청년들. 청년이 ‘청년’답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

청년들의 문제,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곳곳의 청년들도 부모 세대가 누렸던 직장 생활과 경제적 안정을 누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다. 대신 박봉을 주는 단기 계약직 일자리만 전전하는 능력 있는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계층 간 임금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부모의 집으로 돌아오는 등 청년의 기성세대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진다는 분석도 등장하고 있다.

2011년, ‘월스트리트를 점령하자!’는 미국 청년들의 연이은 시위가 미국 전역과 세계 곳곳에서 퍼져나갔다. 같은 해 스페인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50% 정도로 치솟으면서 청년들이 장기간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대부분의 언론은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실업률과 경제의 관점에서 숫자로만 분석했을 뿐, 청년들이 겪는 현실과 조건에 대해서는 면밀히 소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연 청년 문제를 실업률과 경제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걸까?

2015년 1월, 프랑스의 시사풍자만화지 ‘샤를리 엡도’의 충격 테러가 파리

시 소외지역에서 성장한 이민 2세 청년들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파리는 이번 문제를 청년의 소외 문제로 바라보고 소외 지역의 문제를 포괄적인 사회통합 정책으로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로 하였다. 소외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청년과 지역의 연계성을 높여서 도시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소외와 사회 위협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청년 문제의 해결을 지역과의 연계성으로 풀어가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그렇다면 한국의 청년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청년 문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

서울시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정책을 주거·부채경감·미래설계 등의 생활안정 전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청년 문제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취업 차원에서만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에 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거시적으로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지역'이다.

청년의 문제를 실업률과 경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대신 일상의 공간인 지역에서부터 바라보면 어떨까? 여기서, 지역을 단순한 지리적 공간으로만 바라본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찾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신 지역을 지리적·사회적·문화적 요인들이 역동하면서 만들어지는 구성체로서 바라본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특히 지역에 대한 애착과 정체성이 있고, 대안적인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곳이라면 더욱 더 그러할 것이다.

서울시의 실질적 청년실업자가 3명 중 1명꼴이라고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청년의 유출을 걱정하고 있다.¹⁾ 이러한 상황 속에

1) '통계로 본 서울의 노동 : 산업·고용·취약노동자구조',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서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다’고만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보다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청년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일상을 담고 있는 ‘동네’와 청년의 상호작용을 경기도 과천시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우리 청년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우리 동네, 과천을 소개합니다

오래된 신도시, ‘읍내’ 같은 과천

사례로 들고자 하는 경기도 과천시는 1970년대 말 독재자의 ‘의도치 않은 기획’으로 시작되었다. 북한의 장거리포가 개발되었다면서 서울의 정부청사를 관악산 남쪽으로 옮기고 배후도시를 만들게 된 것이다. 1984년에 완공된 과천시는 1990년대에 완공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1기 신도시’보다도 더 오래된 ‘초기 신도시’이다.

과천시는 인구 7만 명 규모를 30년 넘게 유지하고 있으며, 면적의 90%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수도권외의 ‘기이한 도시’이다. 살기 좋다는 이미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낡고 좁은 아파트에 비싼 집값으로도 유명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과천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오랫동안 정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다. 심지어 신도시가 건설될 때 신혼으로 이사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가구도 많은데, 이들을 ‘아파트 원주민’이라고 부른다. 적은 인구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과천 중심가에 가면 마치 ‘읍내’에 나온 것처럼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오래된 상가들과 나무들은 더욱 더 ‘읍내’ 느낌을 풍부하게 해준다.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풀뿌리 네트워크

과천은 풀뿌리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지역 곳곳에서는 지역의 문제를 시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치운동이 일어났는데, 과천은 이러한 활동을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곳이다. 25년 넘게 풀뿌리 시민운동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네트워크’ 방식으로 활동을 전개하였고, 세대를 교체하면서 활동 주체를 다양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과천의 풀뿌리 시민운동 1세대는 1990년대부터 전국 최초 주민발의로 시립 탁아소 설립조례를 제안했으며, 송전탑 반대 운동으로 전력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1980년대 말부터 ‘한살림 과천공동체’를 중심으로 한살림운동이 활발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1세대의 활동은 기존의 운동방식과는 다르게 생활 속에서 요구나 부당한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는 ‘생활 운동’을 전개했다는 특징이 있다.

2세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과천의 공동육아를 통해 들어온 시민들로서 2000년 전후로 대안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지역화폐, 생활협동조합, 독서모임 등의 다양한 풀뿌리 조직을 만들었고, 다양하게 분화된 풀뿌리 네트워크는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 특히 조직이 아니라 개인의 단위에서 활동의 이름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풀뿌리 시민운동이 더욱 일상의 차원으로 내려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과천의 풀뿌리 네트워크는 평상시에는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다가 부모됨·이웃됨·시민됨의 코드가 작동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활동을 전개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활동은 과천을 ‘아이들의 고향’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는 지역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들 스스로 과천을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010년 전후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는 3세대에 이르면 평범한 시민이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좀 더 공적인 해결방식을 추구하면서 ‘생활정치’로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 현재는 특정 정당 소속이 없는 주부 2명이 시의원 7석 중 2석에 당선되어서 활동 중이다.

목소리가 들리지 않던 청년들 등장해

2014년 지방선거에서 풀뿌리 시민진영의 시장·시의원 후보들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지역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가 어려워서 정책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자리를 계기로 청년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과천시 풀뿌리 네트워크에 새로운 4세대가 영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청년들은 기존 풀뿌리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과천이라는 도시와 함께 성장했다는 점이다. 기존 세대가 ‘아이들의 고향’을 만들어주고 싶었다면, 청년들은 ‘과천이 고향’인 그 아이들이었다.

도시와 함께 자란 청년들의 지역정체성

아파트가 고향인 청년들, 둔촌주공아파트의 사례

‘고향’과 ‘신도시’를 연결한다는 게 어딘가 낯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청년 세대에게는 그렇지 않다. 아파트 단지에서 유년기를 보낸 세대들은 어렵지 않게 공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립잡지 『안녕, 둔촌주공아파트』



『안녕, 둔촌주공아파트』 표지



기린미끼럼들과 마지막 시간

트』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단지의 추억을 담아내고 있다. 이 잡지의 발행인 이인규 씨는 주택공사 아파트 단지에서 자라고 살아온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와 사진을 수집하여 연작으로 잡지를 발행하고 있다. 그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아파트가 아닌 여러 주거공간에서 살아왔지만, “아파트가 더 삭막하고 주택가가 더 정겹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에게 둔촌주공아파트는 인생에서 가장 따스한 시절을 보낸 소중한 곳으로, 주차장에서 친구들과 놀고 단지 상가를 휘젓고 다녔던 추억들을 잡지에 담아내고 있다.

이 작업을 하다가 다시 둔촌주공아파트로 이사를 들어온 이인규 씨는 단지 상가에 〈마을에 숨어〉라는 문화공간을 열어 기타·일러스트·캘리그래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3월에는 서울역사박물관 〈아파트인생〉展 한 코너에서 전시를 하기도 했다. 또한 둔촌주공아파트에서 성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린미끄럼틀이 철거된다는 소식에 실측과 사진 등의 기록을 남기고 추억이 있던 주민들을 모아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 작업은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둔촌주공아파트를 보고 ‘다시 돌아올 수 없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작업을 하면서 둔촌주공은 물론 잠실주공·개포주공·반포주공·과천주공 아파트단지에서 살았던 ‘아파트 키드’에게서 “나도 비슷한 추억을 갖고 있다”는 공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인규 씨는 “고향을 구성하는 것은 공간 자체라기보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관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과천에서도 ‘동네’와 ‘고향’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과 이들이 공유하는 ‘무언가’를 내포하고 있었다. 둔촌에서 지키고 싶어 하는 ‘무언가’와 과천에서의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다른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각자의 관계망을 묶을 수 있는 하나의 상징으로 작동하고 있다.



〈과천 청년들의 수도〉 포스터와 ‘동네에 의미있는 장소’ 앙케트 발표

‘과천다움’, 청년들이 공유하는 상징

공동체는 하나의 상징적 구성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 그들만의 영역을 형성하는데, 그 과정에서 상징이 두드러지고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로 작용한다. 과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상징은 과천에서 자란 청년들에게서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었다.

과천에서 가장 좋았던 점으로 청년들은 ‘대공원 산책’, ‘큰 가로수’, ‘관악산-청계산’ 같은 자연을 가장 많이 꼽는다. 그 때문에 오랜만에 과천으로 놀러온 친구는 “아 풀냄새, 이게 과천이지”라고 감탄하고, 외국으로 유학 간 친구는 “폐북에 과천 사진 좀 올리라니깐” 하고 종용한다. 서울에서 과천으로 오는 남태령 고개를 넘어오면 버스 창문을 열고 공기를 맡는다는 얘기에 ‘맞아, 맞아’라고 박수치며 격하게 공감하기도 한다.

또 청년들은 “내가 놀던 아파트단지가 그대로” 남아있거나 “내 ‘나와바리’ 이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릴 때 봤던 축제가 계속 있어서”라고 말할 정도로 ‘지속성’을 과천의 장점으로 말한다. 12개 주공아파트단지 중 2곳이 높은 아파트로 재건축 되었을 때, 과천에서 자란 청년 대부분의 반응은 ‘과천 같지 않다’는 것이었다. 관악산과 청계산 사이에 낮은 아파트로 구성된 과천시내의 경관이 변하는 것에 대해 낯설어했다.

또한 축제에서의 경험도 청년들이 내세우는 것이다. 1997년부터 마당극 큰잔치로 시작한 지역 축제에 풍물패로 참여했던 친구는 연극연출을 전공하게 되었고, 통역 자원봉사를 하던 친구는 영문학으로 박사과정 유학 중이다. 이렇게 축제는 과천의 청소년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청년들은 문화적 경험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공감 요인으로 꼽았다. 이렇게 과천에서 성장하면서 생겨난 자연환경, 사회적 관계, 도시경관, 문화적 경험 등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을 청년들 사이에서는 ‘과천다움’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전의 세대들에게서는 정의되지 않은 채 ‘그 무언가’라고 불리던 것이었다. 기존 세대들에게 정리되지 않던 ‘그 무언가’는 과천에서 직접 자라온 청년들의 체화된 경험과 인식을 통해서 구체화될 수 있었다. 그리고 공유되고 있는 인식과 감정이 복합된 지역정체성이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과천다움’이라고 불리게 되면서 더욱 뚜렷한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비싼 집값에도 과천에 살겠다는 의지

‘과천다움’이라는 지역정체성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주성’이라는 조건을 갖추어야 가능하다. 수도권에서는 임대료·직장·교육 등의 이유로 지역을 자주 옮기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경우 자라나는 아이에게는 지역정체성이 뿌리내리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부유’ 상태가 누적되면 어른에게도 힘든 조건이 될 수 있다. 2012년 국토해양부의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현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이 자가는 10년, 전·월세 등은 3년으로 나타났다.

과천은 부동산 가격이 매우 비싸다. 넓고 좁은 아파트이지만 ‘살기 좋다’는 이미지는 집값을 꾸준히 상승시켰고, 재건축하려는 시도 때문에 더욱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과천의 전·월세 비율이 61.5%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 청년들에게도 임대료는 과천에 사는 데 가장 어려운 요인이다. 그럼에도 과천에서 자란 청년들은 독립하거나 결혼을 해서 과천에 계속 살고 싶어 하고, 심지어 청소년기에 이사를 나갔다가 결혼 후에 다시 과천으로 이사를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 같은 가격으로 다른 지역에서 넓은 평수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과천의 청년들은 그러한 '경제적인 선택'을 포기하고 과천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한다.

수도권에서 한 자리에 오래 산다는 것은 흔히 '자기 집이 있거나 돈이 많아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과천에 강한 지역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전·월세를 부담해서라도 그곳에 계속 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인 선택'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과천다움'이라는 지역정체성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어떻게든 과천에서 거주를 이어나가려 하고 하는 청년들은 이제 과천에서 활동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청년공간·청년홍신소·청년마켓...뭐하지?

과천의 청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과천다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페이스북에 '과천, 청년들의 수다'라는 페이지를 개설했고, 회원수가 4,000명을 넘어섰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던 청년들 중 몇몇은 공감대에서 그치지 말고 활동으로 이어서 전개해보자며 모임을 갖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고민했던 활동 아이템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청년들의 공간** : 청년들의 활동을 인큐베이팅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다. 과천 곳곳에 능력 있고 독특한 청년들이 많지만 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없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의 청년허브 같은 것이 과천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있었고, 새벽까지 작업할 수 있는 카페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과천의 비싼 임대료 때문에 아이디어를 그 이상으로

전개시킬 수 없었다.

● **청년홍신소** : 과천의 ‘취준생(취업준비생)’들과 ‘자발적 백수’들에게 ‘짧은 일용직 알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생각해낸 것이 청년홍신소이다. 집에 혼자 계신 노인은 운전해 줄 누군가가 필요할 수도 있고, 집안일을 하던 주부가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못을 박아야 할 때, 또는 아기엄마가 급한 일로 베이비시터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전화하면 대기하고 있던 청년들이 출동하는 방식을 구상하였다. 홍신소 논의에서 중요했던 점은 적게나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자는 것이었다.

● **청년마켓** : 건물 공간을 임대하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는 일로 중앙공원에서 돛자리를 펼치고 각자의 재능을 펼쳐 보여주는 청년마켓을 구상해 보았다. 처음에는 서울의 ‘마르쉐@’이나 ‘연남동 마을시장’처럼 형태를 완벽히 갖춘 장터를 준비해보고자 했다. 하지만 장터를 찾아오는 대부분이 과천 내부의 주민일 것으로 예상하고, 규모를 작게 줄여서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펼치기로 했다. 청년마켓은 과천이라는 신도시에서도 ‘로컬피플·로컬프로덕트·로컬푸드’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하지만 과천시는 기준이 모호한 ‘공원에 상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대며 무조건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장소·사람·추억...지역정체성이 청년들의 원동력으로

과천이나 둔촌에서는 청년들의 지역정체성에 기반한 관계망이 형성되고, 눈에 보이는 활동을 이제야 하나둘씩 시도해보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며 공유하고 있는지, 간단하게나마 그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장소** : 아파트 단지인 둔촌이나 신도시인 과천은 ‘만들어진 도시환경(built environment)’을 가진 지역이지만, 이곳에서 성장해온 청년들에게는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자칫 청년들은 도시의 빠른 변화를 선호한다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례에서 보면 신도시에서 자란 청년들은 도시의 고유한 경관이 지켜지기를 원하고 있다.

● **사람** : ‘읍내’스러운 애기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과천에는 학교가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다리 건너면’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고, 동네에서 뭘 하는지 다 알 수 있을 정도이다. 과천은 도시계획상 인구규모가 작지만 밀도가 있고, 중학교가 2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망이 집중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익명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추억** : 지역에서 자란 아이들의 경험이 공유될 때, 청년들의 새로운 놀이가 시작될 수 있다. ‘추억팔이’라고 부르는 이 놀이는 지역정체성을 자극하면 각자 자신들의 추억이 어떠했는지 설명하고 싶은 욕구가 발생되고, 이렇게 모인 추억들이 자연스레 공유되는 방식이다. 추억이라는 걸 터놓고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청년들의 참여를 유발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단계까지 다다를 수 있다.

지역은 청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풀뿌리 기성세대, “새로운 방식이지만 근기가 필요”

기존에 활동하던 풀뿌리 시민들은 과천의 청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우선 청년들이 ‘미디어를 잘 다루고 시각적인 취향에 민감하다’는 점이 기성세대가 크게 느끼는 차이점이다. 그래서 동네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 청년들이 각종 모임에 간사 역할로 들어가서 시각적으로 전달력이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세대들이 ‘서명 운동’으로 시민들에게 문제에 대해서 알렸다면, 청년들은 ‘설문조사’로 인

포그래픽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한다.

하지만 어떤 2세대 활동가는 청년들이 ‘근거를 갖고, 버텨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언에 대해서 청년들은 ‘일부러 어려운 일에 버틸 생각은 없으며, 재미있는 일을 선택하려고 지역 활동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진 다른 대화에서는 세대 간에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과천에서는 2세대가 등장하면서 1세대의 활동을 부정하고 대화를 단절하면서 세대 간 단절을 겪었던 경험 이 있었는데,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이다.

과천시, ‘과천다움’을 지우려는 정책으로 역행

아이러니하게도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과천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누리당 전략공천 후보가 민주당과 녹색당의 경합을 제치고 시장선거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2015년 올해, 과천을 경마장과 연계한 ‘말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중이다. 주민들은 조용한 거주환경과 푸르른 자연환경 때문에 과천에 계속 살고 있는데, 과천 시장은 주민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경마장과 연계하여 도시의 상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과천시 말축제 변경 관련 설문조사 인포그래픽

그중 하나는 과천 축제를 ‘말 축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과천시는 일방적인 설명회 외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사건에 가장 발끈하고 반대하는 세대가 과천의 청소년과 청년 세대이다. 10대·20대의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설문조사(총 1,065명)에서 78.8%가 말 축제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하고, 76.8%가 기존 거리예술 축제를 자랑스러운 축제였다고 응답했다. 또한 기존 거리예술 축제를 59.9%가 적극적으로 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형 축제’라는 이름으로 축제의 경제효과만을 부각하는 용역보고서를 검토해본 결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뻔한 용역보고서에 ‘과천’과 ‘말’이라는 용어만 엮어놓은 내용이었다. 심지어는 과천의 상징을 묻는 용역 보고서의 설문조사 문항은 시목인 밤나무, 시화인 철쭉, 시조인 비둘기, 시 동물인 말 중에서 선택하라고 해놓고, ‘시민들은 말을 가장 대표적인 상징으로 응답했다’고 결과를 내놓는 식이었다.

축제는 상징이 살아 숨 쉬는 일탈의 순간으로 정의된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를 경제이득으로 바라보기 이전에 정체성과 상징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상징은 행정이 정하고 시민들이 따르는 ‘동원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이 의미를 걸어놓고 공유하는 ‘참여의 구성체’이다. 공동체는 상징적 구성체이며, 축제는 이러한 공동체를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어야 한다. 과천의 축제가 그러한 점이 부족했다면, 고쳐나가면 될 일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과천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인 한 명 때문에 과천에서 자란 아이들이 의미를 두고 있던 축제는 이러한 식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청년’답기 위해서는 일상의 지지를 받을 ‘동네’가 필요

현재 과천에서는 청년들과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가들, 그리고 풀뿌리 시민들이 모여서 이런 문제에 함께 대처하고 있다. 설문조사·서명·시민토론회 등의 의견 수렴, 전단지·현수막·인포그래픽 등의 정보 전달, 시의원과

다른 정당과의 연계 시도, 대안적인 축제 방안 모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 청년들이 눈에 보이는 활약으로 동네에서 일종의 데뷔를 하는 중이다.

과천의 축제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로 청년들이 공식적으로 등장하고 자신들이 공유하던 정체성을 확인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는 행정의 한계를 확인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켜가려는 자조적인 움직임이 더욱 생겨날 수도 있다. 과천의 비싼 임대료로 청년들은 활동 공간도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청년 지원 프로그램도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고립된 청년들을 한두 명씩 찾아서 그 관계망을 넓혀나가고, ‘과천다움’을 공유하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낼 것이다.

청년에게는 일상에서부터 상호작용을 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동네’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지 기반은 반드시 지리적인 영역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자신의 정체성을 담고 그 안에서 활동하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상관없다. 하지만 만약 이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공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 직장을 다니는 청년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또는 자발적으로 대안적인 생활 방식을 찾고 있는 청년들 모두에겐 나름대로의 ‘동네’가 필요하다. 이러한 ‘동네’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모이고 엮힐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에서부터 형성될 수 있다.●

청년, 음식시민이 되다

버릴 거면 나 주지

25세 청년인 필자는 현재 프리랜서로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 집이 없다. 또한 수많은 청년들이 그러하듯,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스스로 방세와 생활비,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다. 워낙 요리와 식문화에 관심이 많았던지라 베트남식당에서부터 브라질리안·하와이안·이탈리안·일식당, 그리고 빵집과 별다방까지 다양한 곳에서 일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즐거움도 있었다. 그러나 매달 일정하게 나가는 생활비를 충당하고 학비를 위해 저축까지 하기엔 적은 시급으로는 불안했다. 때로는 이른 아침부터 자정이 넘는 새벽까지 하루 14시간 꼬박 일을 하기 위해 학교 시간표도 아르바이트 시간을 피해서 넣어야 할 때도 있었다. 서로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가끔 짬을 내 만나서, “공부하고 싶어서

-
- 평화교육 진행자. 주로 먹거리와 비롯된 생태적인 감수성을 주제로 일상생활에서 스스로가 느끼는 즐거움과 행복, 그 외의 수많은 느낌과 생각을 타인과 자연에게 어떻게 배려하면서 나누어갈지 고민하고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촉진 역할을 해오고 있다.

온 학교인데 내가 지금 학생인지 노동자인지 모르겠다”며 괴로워하는 서로의 모습이 안쓰러워 함께 울고 웃으며, 이럴 땐 먹어야 한다며 술과 안주로 위로하는 것이 달콤한 스트레스 해소법이었다.

이른 아침엔 커피숍에서 일하고 저녁엔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면서, 남아서 폐기하는 음식들을 몰래 화장지에 싸뒀다가 먹기도 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빵과 가공식품을 쓰레기봉지에 넣고 봉지채로 냉동실에 얼려놓거나 학교로 가져가 친구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부끄럽지 않아?’라고 묻는 친구도 있었지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버리는 일이 (그것도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더 부끄러운 행동인 것 같았고, 쓰레기가 될 뻔한 음식물을 낭비하지 않음으로써 식비도 줄고 시간도 절약되고 빈곤 문제 해결에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뿌듯하고 당당했다. (물론 가끔은 도시락통에 옮겨 마치 내가 직접 만든 것처럼 보이게 하기도 했지만).

그러한 생활을 2년 남짓 해오던 어느 날부터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각하지 않았던 학교 수업과 아르바이트를 빼먹기 시작했다. 나태해지는 것인지 피곤해서인지 그동안의 식생활 때문인지 몰라도, 몸이 예전 같지 않은 듯했다. 아침에 먹은 빵은 저녁 즈음에나 소화가 되고, 몸도 부어 있고, 식욕도 공부할 의욕도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았다. 친구들 또한 3학년이 되고 더 어려워진 수업 쫓아가랴, 일하랴, 취업 준비하랴 각자의 일로 바빠지는 시기였다. 만나면 돈이고, 그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공부해서 장학금 타야지... 그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충분히 어울릴 시간이 없었다. 아무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아니 연락할 사람도 없었다고 해야 할까. 생활에서 웃음과 즐거움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한마디로 외로웠다.

봄 학기가 반 정도 지난 5월, 어김없이 지각한 어느 날, 문득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곧장 휴학서를 제출했다. 밖을 나오자 적당히 따뜻한 햇살과 바람에 웃음이 절로 나왔다. 졸업이 늦어진다고 걱정하시는 엄마

에게 '난 행복해, 걱정 마요'라고 신나게 얘기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휴학기간 1년 중 이미 반 학기 정도가 지났으니 사실상 9개월 정도 자유 시간이 생긴 것이다. 아르바이트와 인턴, 2개월 동안의 첫 배낭여행으로 시간의 개념과 윤리적 소비, 건강한 생명과 인간관계, 교육에 대해 공부하고 생각해보며 다시 학교로 돌아갈 자신감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다.

이제 뭐 먹고 살지?

근 2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빼먹지 않고 섭취한 가공식품, 건강하지 못했던 식습관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반성하며 대안을 생각하고 있던 때, 2011년 3월 11일 일본 토후쿠 지역에서 원전 사고가 일어났다. 한순간에 많은 이들이 생명과 생활 기반을 잃었고, 누출된 방사성 물질은 지구 환경과 먹을거리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 일본 교토에서 유학 중이던 당시, 충격과 슬픔과 불안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방사능에 대한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미디어를 통해 들려왔고, 어류나 일본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보이콧 하자는 소리도 들려왔다. '아, 이제 뭐 먹고 살지?'

다행히 간사이에 위치한 교토는 피해 발생 지역과 8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어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슈퍼에서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생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다. 이제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먹거리에 대해서 생각해야 했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느낌과 시각으로 지금 이 상황과 일본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배워야만 했다.

사건 직후,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음식은 정치인들이 직접 나서 먹어 보이는 등 그 안전성을 강조하며 다시 전국으로 유통이 되기 시작했다. 괜찮다는 이야기에 바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먹거리인지 조사하고 더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보

면서 문득, 1년 전 허기를 견디던 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몇 톨 더 썩
것을 찾고 시간도 아끼려고 인스턴트 가공식품들을 주로 먹다 보니, 삶의
질과 생활패턴, 건강이 나빠졌고 병원을 다니며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도 쉬게 되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안전한 먹거리를 어떻게 구하
지?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던 차 마침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농사'였다.
어릴 적부터 벼농사와 감농사를 짓던 외갓집에 다녔던 기억, 부모님이 식
재료상회를 해 시장통에서 자란 기억들이 '내가 직접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주었다. 하지만 '방 한 칸 집에 살며 땅도 없
는 현실에서, 어떻게?'라는 데 쉽사리 답이 나오지 않아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 보자 하고 우선 집안에 작은 화분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몰래몰래
학교 구석에 시금치 씨앗을 심기도 했다.

한편 후쿠시마 복원을 돕는 모금을 하기 위해 한 학기 동안 학교 앞에서
빙수를 팔기도 했는데, 그런 활동을 하는 중에 여러 사람과 만나면서 모
금된 액수보다 찾아와주시는 분들과의 대화에서 용기와 즐거움을 얻었
고 '정과 마음의 공유'를 통해 행복을 느꼈다. 또 피해자들이 더 안전한 곳
으로 피난하기 위한 지원도 필요했지만, 모두가 떠나가는 그 자리를 묵묵
히 지키며 다시 농사를 재건하고 자급자족 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것도 알
게 되었다. 한순간에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피
난을 간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음에도, 힘들 때일수록 서로 단결하고
협력하는 그들의 모습에 가슴이 찡찡하고 인정을 느끼기도 했다.

교토평화박물관(The Kyoto Museum for World Peace)에서 일하던 당시, 봉사활동
으로 가이드를 하고 있던 한 일본인 여성을 만났다. 그녀는 경제학을 전공
했지만 심장병으로 큰 고비를 넘긴 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했다. 완고한
베지테리언이 된 그녀는 매번 후쿠시마를 오가며, 오사카로 피난 온 가족
들, 특히 가장이 되어 4~5살 된 아이를 돌보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작은 모
임을 만들고, 직접 기른 혹은 지역의 안전한 식재료들로 채식 요리를하거

나 앞으로의 인생에 관해서 함께 담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를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며 자급자족에 대해 그리고 음식이 가지는 힘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보게 되었다.

음식이란 단순히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는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고 서양에는 ‘You are what you eat’이라는 말이 있듯, 채소를 기르는 데도 기후나 때와 장소가 적합하지 않으면 건강하게 자랄 수 없으며, 영양이 부족한 음식을 먹으면 내 몸 또한 영양부족이 되기 때문에 음식은 모든 사회적 요소들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기르기 쉬운 채소들을 집안에서 기르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식품 안전, 유기농 등을 주제로 하는 여러 세미나에 참여하기도 했다. 관심을 가지고 보니 먹거리와 관련된 행사들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 여러 곳에 참여하며 연구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던 다양한 농업의 형태를 접하고 사람들과 교류를 가지게 되었다.

NOWHERE

그러다가 나라^{奈良} 이코마^{生駒} 시 타카야마에서 사토야마^{里山} 활동을 하고 있는 작은 커뮤니티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코마 시엔 대나무 박물관이 있을 정도로 대나무가 많고 일본의 전통차를 만들 때 쓰이는 차센^{茶筌}은 90% 이상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옛날엔 황금새가 왔다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이코마 시는 도로와 철도 개발로 인해 생태계가 무너져가고 있다고 한다. 사토야마란 본래 뒷산 혹은 도시의 경계에 있는 자연을 뜻하는 말로, 사토야마 활동은 그 생태계를 보존하는 활동을 칭한다. 소외되는 곳, 시골과 도시의 경계지점에서 지역 생태계와 문화를 보전하기 위한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활동

의 중요성과 즐거움을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었다. 하지만 강요하고 싶지 않았기에 나의 활동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 이야기와 사진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고, 한두 명의 친구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열 명 이상의 청년들이 왕복 다



먹거리공부방, 한 달에 한번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우프코리아 게스트하우스의 텃밭 채소들로 미각교육을 진행한다.

섯 시간의 거리에든 불구하고 매달 한 번씩 찾아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농사도 짓고 있다.

사토야마에서의 활동을 계기로 관심과 활동 범위가 점점 더 넓어져 미에三重 현에 있는 아카메赤目에서 자연농법으로 쌀을 재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다. 상업화된 농업 현실에서 많은 농부들이 농약과 화학비료, 유전자조작 씨앗을 사용할 때, 가와구치 할아버지는 거기에 끝까지 반대하여 가족들마저 떠나갔다고 한다. 하지만 그에게는 가족과 같은 (20대의 청년들을 포함해) 오랜 제자들이 있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에 배움의 날이 있어서 전국에서 자연적인 방법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법을 배우러 온다. 저녁엔 오래된 산장에 가서 직접 수확한 식재료로 밥을 해먹고, 아이부터 노인까지 100여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지내며 자연과 인간, 그리고 우주에 관한 인문학 강연도 열어 씨앗을 뿌리고 수확하고 먹는 것에 대해 지구인적 관점에서 얘기를 나눈다. 농사일을 끝내고 몸은 피곤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다 보면 시간은 금세 자정이 넘어 있다.



제철 맛워크숍, 직거래로 구입한 자연농법 황매실로 집 마당에서 오순도순 먹거리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청을 담갔다.

우프¹⁾코리아 사무실에 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는 안전한 먹거리와 관련 된 활동들을 보다 가까이 접하게 되었다. 서울 안 국동에 위치한 한옥집을 사무실로 사용하며 점심 시간에는 자유롭게 요리를 해서 먹었는데, 식재료는 생협을 이용하고 가

끔 호스트 농가에서 보내 주시기도 한다. 마당 작은 텃밭에 심은 쌈채소와 허브, 토마토 등을 따먹으며 되도록 건강한 밥상을 차리기 위해 노력했다.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필자는 한 달에 한 번 먹거리 공부방을 열어 초·중·고생부터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우리가 먹는 먹거리들이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우리 식탁으로 오는지, 안전한 식탁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고 텃밭 견학과 간단한 샐러드 만들기 등 하지만 평소에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대안활동을 모색해 갔다.

또한 슬로푸드청년네트워크(Slow Food Youth Network)의 멤버로 ‘건강한 먹거리를 어떻게 맛있고 즐겁게 잘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요리가무, 잇인(Eat-in), 몬산토 반대행진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요리가무는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다르고 못생기고 조금 상처가 났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버려지는, 쓰레기가 될 뻔한 농산물과 식량을 구출해 공공장소에서 함께 요리하고 나눔으로써 먹거리 낭비에 대해서 알리고 함께 요

1) 우프(WWOOF: World Wide Opportunities on Organic Farm)는 1972년 영국에서 시작된 활동이다. 전 세계의 다양한 형태의 유기농가에서 일손을 도우며 그들만의 유기농법과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고 배우면서 우퍼(WWOOFer: 우프 활동가)는 농가로부터 숙식을 제공받는 구조이다. 대규모 농가와 비교해 적은 수입의 소규모 농가와 생활비를 벌어가며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은 청년에게는 더없이 좋은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리해서 먹는 즐거움을 전하는 활동으로, 청년들뿐 아니라 생산자와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함께하고 있다.

생태공동체마을(Eco-village) 야마우토,山水人와 별에별꼴에서의 경험도 빼놓을 수 없겠다. ‘산’, ‘물’,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



금산 산골짜기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밭 매러 가는 길.

는 야마우토는 1960년대 유행하던 ‘히피’ 스타일의 이벤트로 매년 8~9월 교토京都에 있는 산속에서 열린다. 일 년에 한 번 열리는 큰 축제인 만큼 전 지역에서 ‘히피족’이라 불리는 젊은 청년들이 모여들며, 화장실부터 주거 공간, 공동부엌, 무대 등을 직접 설치한다. 그리고 나면 어디에도 없을 것 같은 유토피아가 눈앞에 펼쳐진다. 참여자들 대부분은 자급을 위한 작은 규모의 농사를 지으며, 경제적 욕심을 버리고 회사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소박하면서도 담백하고 ‘깔끔한’ 생활을 하고 있다.

청년들의 생태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위한 도전은 충청북도 금산의 깊은 산속에서도 펼쳐지고 있다. 청년 자립공동체 별에별꼴에서는 바쁜 도시에서의 생활 패턴과 잠시 거리를 두고 폐교를 주거공간과 작업실로 바뀌 나가며, 개인의 꿈을 펼치는 개인작업 시간을 바탕으로 쌀과 콩, 채소, 두부 등으로 먹을거리도 함께 만든다. 이러한 생활의 즐거움과 보람을 더 다양한 청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식구체험날’과 ‘알고 보니 축제’ 등도 열고 있다.

이러한 경험과 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대에, 특히 한국에서는 더더욱 생명과 희망에 대한 감수성이 결핍되어 있음을 느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이 청년들은 빠르게 바뀌는 바쁜 자극적인 울타리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빙빙 돌면 칭찬을 받으니까 말이다. 목마르고 곁핍된 애정을 물질로 위로하는 생활패턴으로 진화해 가고 있는 청년들이 짜고 달고 빨리 먹는 식습관을 가지게 되거나 생명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감수성은 이러한 일상화된 감각의 틀을 깨고 자동화된 의식을 일깨우는 힘이 있다고 여겨진다. 지금 이 순간 여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각 개인의 템포에 맞게 우리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공간에서 감수성을 돌아보는 작게나마 ‘낮설게 하기’의 재미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연상과 생각들이 창의적이고 독특한 묘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절호의 찬스!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자연 문화와 나의 문화를 조화롭게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만 잘 먹고 잘 되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어차피 어떠한 한 생명체만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혼자’와 ‘스스로’는 의미가 다르



누군가의 집에 놀러간 것이 언제 적인지, 요리를 함께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과 레시피를 공유하는 여유로운 주말.

다. 생명의 다양성을 무시하지 않고, 각 생명체의 특색을 바라봐주고 돌보아주는 조화로운 삶을 먹거리로부터 스스로 찾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 자급자족 생활을 시작한 이들에게 그 계기를 물어보니, 대

부분 3.11 이후 자신의 인생에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찾다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한다. 그들만의 사회구조와 먹거리 시스템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음식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생활하고 있다.

취업 시장에 진출해본 경험이 없는, 사회로부터 때 묻지 않은 젊고 패기 만만한 20~30대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진정한 꿈을 찾을 수 있는 희망과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소위 백수, 백조라고 불리는(회사시스템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청년들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자기의 색깔을 찾으면서 사회를 더 건강하고 즐겁게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이러한 청년들을 위한 공간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한국뿐 아니라 일본, 인도, 네팔, 이스라엘, 프랑스, 호주, 스페인, 미국, 독일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평균적인 월급에 비해 수입이 적으니 함께 식사를 위해 불을 만들고,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고 버려진 집을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시키고, 텃밭을 위한 생태화장실도 만들어보고, 각자가 스스로 재배한 먹거리와 기술을 서로 나누면서 배우고 교환하며 살아간다. 평화교육 진행자인 나는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고 먹을거리를 나눠 먹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비록 적은 수입이라도 함께 만들어가는 땀과 지혜, 정성으로 만들어진 밥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는 것을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려 한다. 현재는 제주도에 거주하며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친환경장터인 마르쉐(개구림비마르쉐)와 논농사를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다.

더불어 나와 정말 다른 혹은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의 새로운 감성과 상냥함, 새로운 부드러움을 잘 관찰해 보고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일을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 그 연결고리는 끊임없는 생성과 창조의 능력으로 진화할 것이다.●

청년과 농_農이 만났을 때

농촌으로 삶터를 옮기는, 혹은 옮기고 싶어 하는 청년들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설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농사를 짓고 농부의 삶을 꿈꾸는 것은 아니다. '경쟁과 소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삶을 위해', 또는 '생태적 가치를 추구해서'라는 동기에서 볼 수 있듯 농촌을 대안적인 삶의 공간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존재한다.¹⁾ 그런가 하면 '도시에서는 농_農적 삶이 불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당당히 'No'를 외치는 청년들도 있다. 분명한 것은 청년과 '농'이 만나는 공간과 방식이 이전에 비해 훨씬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원

●● 6개 민간연구소·단체(녹색사회연구소, 모심과살림연구소, 문화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희망제작소)가 함께 진행하고 삼선재단이 후원한 '청년 귀농·귀촌 지원방안 공동연구'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원고. 본문에서 인용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는 연구 과정에서 진행한 내용이며, 해당 보고서는 2015년 6월 중 발간 예정이다.

1) '귀농귀촌을 생각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귀농자와 귀농희망자 모두 '경쟁/소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생태적 가치를 추구해서', '시골이 좋아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10개 항목, 중복 응답)

귀‘농’ 아닌 귀‘촌’을 택한 그들

지금껏 농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가장 큰 목적이자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었다면, 지금 시대 청년들이 농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이전에 비해 훨씬 다양해졌으며, ‘농’에 대한 생각과 태도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많은 청년들이 스스로의 선택을 수식하는 단어로 ‘귀농’보다는 좀 더 폭넓은 의미에서 ‘귀촌²⁾’이라는 표현을 택하고 있기도 하다. 앞 세대 귀농자들이 농업에 대한 강한 의미 부여와 함께 농사에 근거해 자립하고자 했던 성향을 보였던 반면, 농사가 아닌 다른 일과 삶의 욕구를 가지고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특히 젊은 세대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편 농업의 현실에서 비롯한 것으로, 또한 일정 부분 이전 세대와 다른 청년세대 고유의 성향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귀농해서 농사로 먹고살기 어렵다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처럼 이야기되고 있다. 우선은 농지 확보에서부터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귀농희망자들은 귀농 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호하는 반면 그러한 지역은 땅값이 큰 폭으로 올라 신규 귀농인 유입이 쉽지 않으며, 정보 접근에 대한 제약도 농지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판로와 낮은 농업소득 또한 전업농으로의 귀농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1980년대 후반 귀농한 진천의 박기수 농민은 “논농사가 기본”이었고 “절기에 맞는 농사”였던 당시 농촌 풍경을 회고했다. 하지만 농업 현실은 “하우스 등 시설재배” 위주로 급속하게 변화했다. 그 과정에서, 이전 세대 귀

2) 통계청에서는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촌으로 이주한 자(단, 회사원, 교사 등 별도 직업이 있는 경우는 제외됨)”를 귀촌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괴산군 귀농인 육성 및 귀촌인 정착지원 조례>에서는 ‘귀촌인’을 “타 지역에서 군으로 전입하여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와 직업이 없는 자”로 명시하는 등 귀농인과 구분하고 있다.

농자들이 공동노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농사일과 공동체를 경험했다면 지금은 그러한 두레농사를 경험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농사가 기계화·규모화되는 사이 노동은 개별화되고 품앗이보다는 용역(고용노동)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나는 모판 날라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농사를 배울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구현석 농민(90년대 초반 형성으로 귀농)의 말처럼, 지역공동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농사를 배우고 농민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은 지금의 농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3년 전부터 청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한 귀농자(31세, 남)는 작물을 심고 수확하고 출하하기까지 술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기반과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만큼 감당해야 하는 초기 비용이 더욱 컸던 것이다. 지역 생산공동체에 소속돼 생협으로 물품을 출하하면서 판로의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게 되었으나 시설 비용 등으로 안정적인 소득과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농사일을 하고 있다. 귀농 인구가 증가하고 고수익을 창출하는 사례들이 미디어를 통해 소개되는 한편 소농의 기반과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으며, 청년들에게는 진입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 또한 ‘농사로 소득을 얻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농촌으로 가더라도 농사 외에 다른 일을 선택하려는 경향을 보인다.³⁾ 청년들의 경험과 욕구가 다양해지고 농촌이라는 공간의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농사 외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흐름도 있다. 완주의 임경수 박사도 농업 소득보다 농외 소득이

3) 귀농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기보다는 다른 일을 찾거나 병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확인되었다. 귀농희망자들의 경우 농사만으로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응답은 12.5%에 불과했으며, 대다수는 ‘농사와 다른 일을 함께’(67.9%) 하거나 ‘농사는 하지 않고 다른 일로 경제활동을 하겠다’(12.5%)고 답했다. 농사를 할 경우 그 형태 또한 ‘농사로 소득을 얻기 위한 정도’(33.9%)보다는 자급을 위한 농사 혹은 텃밭 농사를 하겠다는 응답이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귀농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농사와 다른 일을 함께’ 한다는 응답이 59.7%로 높게 나타난 반면 농사만으로 경제활동을 한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농사형태에 서로 ‘농사로 소득을 얻기 위한 정도’는 37.7%로, 특히 20대에서는 17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농림부의 전업농 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농민들에게 두 번째 직업을 갖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에는 토지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농지를 임대해 자급자족 수준의 농사를 짓더라도 다른 직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귀농하면)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앞세대의 시각이 청년들에게 보다 유연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는 까닭

귀농해서 전업농으로 정착하기에는 이처럼 많은 진입장벽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저마다의 다양한 배경과 동기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적지 않은 청년들이 소득을 위한 농사보다 식생활의 자급 또는 경작 자체에 의미를 둔 농사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적은 소득에도, 혹은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이들이 농사를 짓는 것은 주로는 소박하고 생태적인 삶, 자급의 삶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설명된다. 즉 농사를 통한 ‘실천적 삶’의 실현이다.

“도시의 삶 자체가 순환의 고리 안에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고, 단절시키는 느낌을 주는구나. 시골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먹는 게 똥이 돼서 다시 밭으로 가고, 그런 순환의 느낌이 있잖아요, 환경적인 면에서도 채식하면서 도시락 싸서 다니고 손수건 쓰고 텀블러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되게 부차적인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근본적이지 못한 느낌을 계속 받아서, 일단은 내가 내 먹거리를 자급하는 것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 년 농사를 겪어보겠다는 마음으로 변산(공동체)에 갔어요.”(26세, 여, 남원)

“원래 시골에 살고 싶었던 마음이라, (환경단체) 활동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이 근본적으로 자연을 지킬 수 없는 활동인 거예요. 내가 도시에서 손을
놔야지,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도시의 소비문화를, 파괴적인 문화를 놔야
지만 4대강 공사는 새만금 간척사업이든 다 멈추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빨리 시골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35세, 남, 봉화)

도시 생활에서 ‘한계’를 느끼고 귀농한 청년들에게 이러한 가치 지향은
농적 생활이 주는 성취감, 만족감과 결부되어 농사를 지속할 수 있는 동
력이 되기도 한다. 자연과 함께하고 생태적인 삶을 살고자, 혹은 건강상
의 이유로 귀농을 선택한 이들에게는 유기농업, 생태농업 또한 자연스런
귀결이다. 하지만 농민들과 함께 마을에서 살아가면서 기존에 농촌과 농
업을 대상화해 바라보던 시선에서 벗어나 현실을 보다 이해하게 되는 지
점도 생겨난다. 농사를 먹을거리 자급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적인 삶에서
농사를 통해 자급을 실현하는 것이 곧 전체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
이 될 수 있다는 확신도 농촌 현실을 맞닥뜨리며 더욱 단단해진다. 이렇
게 스스로 하나의 롤 모델이 된 청년들은 이전 세대의 농민운동과 다른
방식과 속도로 농촌 ‘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형태는 드러
나지 않지만 곳곳에서 생태적으로 자급을 지향하는 공동체의 밑그림을
그려 나가는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처음엔 기계 쓰는 것까지도 막 배척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니까, 저희
가 설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어야 도시 사람들도
다 먹고 살았던 거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약 치고 비닐 치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자기가 먹을 거를 농사를 지어야 그분들이 그렇
게 안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저희처럼 한두 명씩 계속 자기 먹을거리 자기
가 하고 그분들이랑 같이 바꿔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32세, 여, 봉화)

“(농촌은) 젊은이들이 없는 현장에서 모든 것을 기계화에 의존해야 하는 현

실이고 불가피하게 석유에너지를 다량으로 사용해야만 유지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현실을 무시하고 오로지 생태! 친환경! 만을 외쳐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땅으로 내려오고 스스로 농사를 짓고 자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34세, 남, 장흥)

그런가 하면 농사가 개인적인 삶에서 갖는 의미도 작지 않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만큼 청년 농부들은 지속가능한 농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계속 농사를 짓고 싶다는 소박한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농사일 자체에서 의미와 기쁨을 찾고 있다.

“농사 계속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을 수 있는 게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농사를 지을 거예요. 해본 일 중에 농사짓는 게 제일 즐겁긴 해요. 너무 힘든데 다음날 되면 그래도 갈 수 있게 되는, 회복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36세, 남, 곡산)

“(농사를 지으면)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작물에 애정을 가지면 땅이 돌려줘요. 농사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씨 뿌리는 날, 김매는 날, 나에게 맞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아요. 날씨 좋을 때 밭에서 풀 뽑고 이런 게 좋아요. 처음에는 사무실 밖에서 일하는 게 좋았고, 육체적인 노동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36세, 여, 해남)

“농촌의 이미지를 각인하게 된 것은 대학 때 농촌봉사활동을 통해서였어요. 한 가지씩 자신의 상처들이 있는데 어떤 작업에 몰두하면서 무념무상에 빠지면서 치유 받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가졌던 것 같아요. … 그리고 먹거리에 대한 소중함, 먹거리가 어떻게 자라는지 궁금해지고 직접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그런 자연을 만나고, 먹거리를 직접 기르는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26세, 여, 홍성)

도시화와 산업화의 한 세대가 지남에 따라 삶에서 농사를 접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농활 등의 경험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절기의 변화와 함께하며 심고 거두는 과정, 땅을 밟고 생명을 길러내는 데서 오는 충만함 등 농_農이 갖는 고유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농사와의 접촉면이 보다 많아지고 넓어진다면 탈도시, 탈임노동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유의미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농적 가치’에 기반해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과 삶

‘농’의 가치는 농사를 짓는다고 저절로 체득되는 것이 아니듯 거꾸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촌과 도시에서 다른 방식과 형태로 농적인 삶, 농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우선은 일(노동)의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농업과 관계 맺는 청년들이 등장하고 있다. 지역에서도 “농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관사업의 가능성이 많다”고 말한다. 청년들의 욕구가 다양한 일자리를 필요로 한다면, 농촌 지역에서는 농산물 가공이나 홍보, 유통, 체험사업까지를 포함하여, (기존에 비중이 높지 않았던) 농업에 기반한 일감이 우선적으로 넓어질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이다. 특히 귀농귀촌한 지역에서도 이전의 경험과 기술과 능력을 살려 일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볼 때, 농업이라는 영역 안에서 청년들이 가진 능력으로 농민과 상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갈 수 있다. 이처럼 청년들의 진입은 농촌 지역 안에서 기존에 취약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삶의 전 과정에서 ‘농’에 대한 태도와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하는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교육농’이나 ‘농진로’ 등

의 개념도 그러한 배경에서 등장했다. 오랜 기간 (풀무) 학교라는 형태를 통해 농민을 길러온 홍성 지역에서는 그러한 형태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교육농 프로그램과 청년 농진로·농창업 플랫폼 등의 활동을 통해 접 측면을 확대해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또한 주목할 관점은 ‘농’의 가치를 공간적 의미에 국한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귀농귀촌 했다 도시로 돌아온 청년들을 ‘실패’로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선과 달리, 그러한 경험은 이후의 삶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농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이자 자산이 되기도 한다.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혹은 도시에 살더라도 ‘농’을 삶의 중심 가치로 두고 살고자 하는 태도 또한 새로운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귀촌 경험을 가지고 현재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은 자연과 단절된 삶, 농촌/도시의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성찰을 통해 경계를 허물고 소통·교류하는 것을 지향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렇게 ‘공간’이 아닌 ‘인식’과 ‘태도’의 측면에서 접근할 때 도시에서도 ‘농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진다.

“농적 가치가 농촌에만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농적 가치가 자연과 하나돼서 남과 함께 협업하면서 사는 것이라면, 이 가치대로 살지 못한다고 할 때 무대가 농촌인들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공동체적 삶, 유대감을 갖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수성을 가진 삶, 그런 걸 추구하는 데 농적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34세, 여, 서울)

“도시적 생활과 농촌적인 생활이 같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을 느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도시)에서 텃밭으로 농촌을 만들던가, 아니면 농촌에서 도시문화를 만들던가요. 서로 끌어당기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놓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36세, 남, 서울)

농촌과 도시를 오가거나, 도시에 살지만 농촌에 관련된 일을 하거나, 주거지를 옮겨 농촌에 사는 등 삶에서 농적 가치를 구현하는 여러 형태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는 그동안 단절되었던 농촌과 도시의 관계를 회복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젊은 세대에게서 그러한 ‘농’ 지향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북돋우고 확산하기 위해서 그 경로를 다양화하고 접점을 늘려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이미 그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2000년대 초반에 ‘반농반x’라는 개념이 등장하기도 했다. 일본 ‘반농반x연구소’ 시오미 나오키 대표가 표방하는 반농반x는 “농사를 조금 지으며 생태적 삶을 실천하고 나머지는 좋아하는 일을 하여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이는 단지 일이나 직업의 범주가 아닌 삶의 방식과 태도의 측면으로도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의 텃밭 농부들에게서 그러한 경향을 읽어낼 수 있다. 이처럼 이제 직업이 아닌 삶의 일부로서의 농사에 대해서도 새롭게 주목해야 할 때다.

청년의 농사가 지속가능하려면

우리나라 전체 농가 경영주 가운데 40세 미만 가구는 1만 명이 채 안 되는 숫자로, 전체의 0.9%에 해당한다.⁴⁾ 농업의 세대 계승에 대한 고민 속에서 선배 귀농인들의 경우 자연스럽게 청년들에게 ‘농업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주문하기도 한다. 점차 규모화·산업화되는 농업 현실에서 자본 기반이 없이 소규모 농사를 짓고자 하는 청년들의 진입을 돕는 것은 곧 전체 농업 정책이나 구조 변화와 연관된 문제이기도 하며, 따라서 직업과

4) 전체 농가 경영주 1,120,776명 가운데 40대 미만은 9,947명이며, 40대는 82,329명(7.3%), 50대 252,507명(22.5%), 60대 331,083명(29.5%), 70대 이상 444,910명(40.0%)으로 집계됨. (통계청, 2014)

생계 수단으로서 농사를 선택하는 청년 농부들의 농사가 보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의 구조 안에서 가능한 대안들을 만들어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스템 자체를 고민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진다.

청년 농부에게 농지와 기본소득을

농지 문제는 삶의 터전으로서 주거와 함께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귀농한 청년이나 지역 내에서 모두 그 지원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꼽는다. 후계농을 고민하거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을 지지·격려하는 선배그룹에 의해서, 무엇보다 오랜 기간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선례들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나, 이는 개인적 관계나 선의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아직은 특수한 경우로 인식된다. 농지은행에서 진행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이나 2030농지지원제도 같은 지원책도 생겨나고 있으나 조건과 기준이 까다로워 활용이 어렵다는 당사자들의 목소리처럼 그 실효성에 대해 물음표가 많은 실정이다. 반면 생산자 단체나 지역사회 안에서 은퇴 생산자들의 농지를 보전·활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당면 과제이다.⁵⁾ 청년과 농민의 필요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제도화하는 지역/단체 내 역할이 필요한 이유다. 농지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보존하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 또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 개념으로서 농민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전면적인 기본소득을 위한 장기적 구상에 있어서 농지와 자산 기반이 가장 취약한 청년 귀농인의 경우 우선적

5) 한살림 생산자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은퇴 후 후계자 유무'에 대한 질문에 64.7%가 '없다'고 답했으며, '후계자가 없는 경우 기존의 경작 농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한살림의 농지보전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응답과 '귀농자에게 임대', '한살림 공동체 또는 작목반의 공동경영에 위탁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모심과살림연구소, 「2014 한살림 생산자회원 현황 및 의식조사 보고서」, 2014)

으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취농지원금⁶⁾ 정책 등도 검토할 만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농지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인 합의에 앞서 제도의 필요성과 가능성, 농업의 가치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작은 단위의 공동체적인 해법 또한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생산공동체 등에서 청년 귀농자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득 보장 등의 방식으로 뒷받침해주는 방안이나, ‘청년 농산물’을 브랜드화해 생협 등을 통해 유통함으로써 초기 정착을 돕는 등의 방안 등이 제시된다. 개인적 관계 내에서의 판매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소농 귀농인들의 경우 생협 등 안정적인 판로와 관계망은 큰 도움이 되며, 단순히 생산물을 판매하는 관계를 넘어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어려운 여건에서 농사를 계속 해 나가는 데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청년 농부를 위한 ‘비밀언덕’

농사가 점차 ‘개별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많은 농부들은 “농사는 혼자 지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더욱이 농업과 농촌에 대한 경험을 갖지 못한 청년들의 세대적 특징이 있는 만큼, 이들이 자연스럽게 농사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서 공동체농장, 협업농장 등의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농촌이라는 공간이 자연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넘어 사람과 관계 맺고 그 속에서 함께 공동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공동체와 공동농장은 청년들이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공간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교육 농장의 성격을 갖고 있는 홍성의 ‘젊은협업농장’은 지역 내에서 사

6) 45세 미만을 대상으로, ‘취농자의 연수를 최장 2년간 지원하거나 농사를 시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최장 5년간 연 150만원을 지원한다. 이러한 정책으로 신규 취농자의 감소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책 도입 직전에 비해 이후 2년가 6% 완화되었으며, 만 39세 이하 신규 취농자 비중이 2006년 18.2%에서 2013년 26.3%로 상승했다. (‘일본의 신규취농자 지원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 NHERI 주간 브리프, 2014.)

람을 길러내고 또 유입시키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농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 활동, 다양한 농적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청년 귀농인들에게 협업농장은 농사를 배우고 농촌에 적응하는 데 있어 좋은 ‘완충지’이자 ‘비빌언덕’이 되고 있다.

“맨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농사의 기초를 배우려고 했어요. 수확할 때까지 1년을 하겠다고 하고 온 거예요. 농장에 있으면서 기초는 배운 것 같아요. … 농장을 못 떠나고 안 떠나는 건 배울 게 아직도 많이 남아서이기도 하고, 우선은 수입도 있어요. 또 지역에서는 소속된 곳이 있어야 도움도 청할 수 있고 교류도 할 수 있어서, (관계들) 길게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37세, 여, 홍성)

자급과 자립을 위해 농사를 지으며 청년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실험하고 있는 해남 미세마을에서는 지역에서의 삶을 꿈꾸는 젊은이를 지원하는 울타리가 되고자 미세농부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이처럼 농촌에 머물면서 농사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은 청년들의 유입을 용이하게 하기도 한다. 귀농 초기 ‘변산공동체’에서 농사와 생활을 경험한 20대 청년 귀농인들도 ‘배움과 삶의 터전’으로서 공동체의 의미가 있으며 무엇보다 “농사일을 배우고 같이 일을 하고 어울리는 게 좋았다”고 당시 경험을 술회했다. 현장에서 1년 농사의 ‘실제’를 몸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은 정착의 기반이 없는 청년들이 농부의 삶을 살아볼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 공동체농장이 갖는 중요한 의미이며, 그 경험이 축적되고 이어짐으로써 자연스럽게 농업과 농사, 공동체의 문화를 이어간다는 점에서도 그러한 모델의 지속·확산을 대안으로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청년들이 농부가 되고 농부로 살아가는 것을 돕는 일임과 동시에 농업 전체의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하는 일일 것이다.●

생협운동과 사회운동의 틈에서 청년운동의 미래를 생각하다

필자는 팔시스템 생활협동조합연합회에서 사회운동에 관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운동을 추진하는 일을 맡고 있다. 특히 2008년 송년파견촌¹⁾을 통해 가시화된 빈곤 문제, 2011년 발생한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관련 피해자 구제, 방사성 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일 등 생활협동조합의 기본인 '살리는 협동'에 힘을 쏟고 있다. 아래 내용과 같이 일본 생협운동의 아버지인 가가와 도요히코 賀川豊彦의 '협동조합의 중심사상'을 실천하는 것이다.

- 이익공락 利益共楽 : 생활을 향상시키는 이익을 나눔으로써 풍요로워진다.
- 인격경제 人格經濟 : 부자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닌, 인간을 존중하는 경제사회를 만든다.
- 자본협동 資本協同 : 노동으로 번 돈을 출자하고,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자본으로 활용한다.
- 비착취 非搾取 : 모두가 자유롭게 평등하게 이익을 나누는 사회를 만든다.

● 瀬戸大作, (일본) 팔시스템연합회 지역지원본부 부분부장

● 한살림성남용인 활동가

1) 복수의 NPO 및 노동조합에 의해 조직된 실행위원회가 2008년 12월31일부터 2009년 1월5일까지 도쿄 도 센다이 구 히비야 공원에 개설한 일종의 피난소.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협동조합의 중심사상’을 실현해나가지 않으면 안 될 때이다. 일본에서는 소비자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사업 규모가 크게 발전해왔지만, 사회적 과제 해결에 뛰어든 NPO나 시민단체는 특히 자치 조직 간 끈이 약한 ‘분산고립형’으로 되어 있어 네트워크 연계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에서 ‘사회연대경제’ 구축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팔시스템 등 협동조합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청년들의 운동으로부터 성찰할 지점은 없을지에 대한 물음을 던져보고자 한다.

청년과 노동조합, 생협의 보수화

일본 중의원(衆議院)에서는 현재 안전보장법제가 논의되고 있다. 또한 국제 평화지원법안, 자위대법과 PKO 협력법 등 현행관련법 10개를 일괄 개정하는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까지 2개 법안을 7월까지 가결하려 하고 있다. 반면 오키나와(沖縄)에서는 헤노코(辺野古) 신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오키나와의 민심을 묵살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살리기는커녕 원전 사고 피해자 건강문제구제책 시행을 중단하고 주택 지원 또한 축소하고 있다.

‘빈곤의 연쇄’도 확대되고 있으며, 빈부격차 또한 계속 벌어지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9월의 생활보호수급세대는 161만 세대로 사상 최대인 한편, 1억 엔 이상 금융자산을 가진 부유층이 처음으로 100만 세대를 돌파했다. 평균소득의 절반을 밑도는 빈곤세대의 아동은 6명중 1명으로 어린이 빈곤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2위이며, 대부분 모자 2명으로 이루어진 편부모세대의 빈곤율은 5%를 넘어서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증가 등이 빈곤의 연쇄를 낳고 있으며, 성인의 빈곤이 아동 빈곤과 청년 빈곤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일

본은 어느 틈엔가 젊은이들에게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다.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 중 절반 이상이 학자금 대출로 이자 부담을 겪고 있다.

아베정권이 강행하고 있는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향한 강압정치나 원전 재가동 준비에 반대하며 수상관저 앞에서는 매일같이 시민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주말에는 곳곳에서 집회가 열린다. 이런 상황에서도 (보수화되었다고 이야기되는) 젊은이들은 여전히 집회와 데모에 참여하지 않는다. 주요 노동조합의 다수는 원자력무라²⁾에 굴복하여 탈핵에 대한 의사 표현도 하지 않는다. 빈곤과 격차를 만드는 TPP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다. 생명과 생활을 파괴하는 원자력 발전과 TPP에 대해 많은 생협들 또한 어떤 반대 의사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노조와 생협 진영의 이러한 모습은 현재 일본 사회운동이 얼마나 약한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빈곤퇴치운동을 하는 청년들

앞서 집회와 데모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적은 지금의 상황을 절망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여전히 희망은 존재한다. 필자가 관여하고 있는 노숙자 지원을 담당하는 시민활동의 많은 부분이 젊은이들의 힘으로 꾸려지고 있고, 네팔의 NGO 지원활동 보고회에도 젊은이들이 참가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은 무엇일까?

빈곤 문제를 고민하는 단체 가운데 하나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모야이³⁾’에서는 노숙자를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신주쿠 역 주변에서 아웃리치

2) 원자력발전업계의 산학연 등 특정의 관계자에 의해 구성된 특수한 사회 집단 및 그 관계성을 비판하기 위해 부르는 용어

3) 2001년에 도쿄 신주쿠^{新宿}를 거점으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한 NPO로, 타인과 공동으로 일을 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의미.

outreach(지역사회 봉사활동) 활동을, 화요일에는 사무소에서 정기상담회를 열고, 아파트 입주 시 연대보증과 생활재건을 위한 정보 제공, 생활보호자 신청 시 동행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사무소 바로 근처에 ‘코모래비장⁴⁾’이라는 단독주택형 집이 있어 매주 토요일에 부담 없이 들러 자가 로스팅한 ‘코모래비 커피’를 마시거나 300엔짜리 점심을 먹으면서 장기나 바둑을 즐기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모야이를 설립한 것은 두 명의 뜻있는 젊은이였는데, 그중 한 명인 이나바 쓰요시^{稻葉剛} 씨는 신주쿠 옆 나카노^{中野} 구에서 ‘도쿄 쓰꾸로이 펀드⁵⁾’를 설립, 비어 있는 빌딩을 개조해 8개의 방을 숙박시설로 제공하고 있다. 다른 한 명인 유아사 마코토^{湯浅誠}(현 호세이 대학 특임교수) 씨는 송년파견촌 촌장으로, 빈곤 문제를 사회에 알린 인물이기도 하다. 1994년 2월 신주쿠 서쪽 출구 지하통로의 일부가 펜스로 봉쇄되고, 거기에 살고 있던 노숙자 열 명이 강제로 쫓겨난 적이 있었는데, 도청 바로 앞에 빈 상자로 만든(노숙자들의) 집이 있는 것이 눈에 거슬리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나바 씨는 그 일로 친구와 함께 신주쿠 현장에 들어가 당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정기적으로 야간 순찰과 식사 배급을 시작했다. 그 후 같은 시기에 시부야^{渋谷}에서 노숙자 생활지원 활동을 하고 있던 유아사 씨와 함께 ‘모야이’를 설립하게 되었다.

모든 사회 문제에서 그렇듯 빈곤 문제에서도 이른바 권력자들은 빈곤 당사자를 사회로부터 배제하여 빈곤을 보이지 않게 하려 하거나 빈곤을 당사자 본인의 책임으로 축소한다(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방사능 피해에 대한 국가의 대응도 같은 모양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빈곤 문제를 가시화하는 운동을 전개해 온 것이다. ‘모야이’를 중심으로 한 도쿄의 빈곤 퇴치 활동은 1990년대 20대의 젊은이가 진실을 마주하

4)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처럼, 우여곡절의 인생 속에서 이곳에서는 편안함을 느끼라는 의미

5) ‘시민의 힘으로 안전망의 구멍을 수리하다’의 합성어

고 시작한 운동이었다.

2014년 ‘모야이’의 이사장은 이나바 씨에서 27세의 젊은이인 오니시 렌(大西連) 씨로 이어졌다. 이처럼 과감한 세대교체를 두고 이나바 씨는 “같은 사람이 오랜 기간 한 조직의 대표를 맡아서는 안 된다”는 말로 설명했다. 필자는 그 외에 두 가지 이유가 더 있었다고 보는데, 첫째는 당사자인 젊은 세대가 운동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NPO 등의 창업세대인 리더 자신이 스스로 졸업하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다.

오니시 씨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등 커다란 좌절을 경험한 당사자이다. 아자부(麻布)고등학교라는 도쿄 최고 엘리트 고등학교 출신임에도 대학에는 가지 않았다. 빈곤 문제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친구의 권유로 신주쿠 식사배식에 갔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빈곤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는 리먼브라더스 사태의 여파로 400명 정도가 식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노숙자는 목욕도 안하고, 빈병을 모으고, 말을 걸기 무섭다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서 있었다. 젊은 사람도 있었고, 많지는 않았지만 여성도 있고, 휠체어를 탄 사람도 있었다. 그전에 갖고 있던 이미지가 바뀌게 되었다. 또 미디어 등을 통해 ‘송년파견촌’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 어떤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상담하러 오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는 잘 몰랐다. 그때까지는 노숙자라고 하면 역에서 자는 걸까, 일은 안하는 걸까, 원지 잘 모르겠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각자의 사정을 들으며 굉장히 가깝게 느껴졌다. 친척 아저씨 중 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그곳에서 내가 굉장히 재미있다고 느낀 것은 노숙자들도 함께 밥을 짓거나 야간 순찰에 참가하고, 그중에는 지원단체의 사람도 있었으며, 이른바 전문직 종사자,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위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 한편으로 나도 밥을 나눠주고 야간 순찰

을 하면서 ‘왜 이 사람은 계속 노숙자로 있는 거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매주 상담, 의료, 관공서 업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 노숙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많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어쨌든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꼈다. 그리하여 신주쿠에서 월요일에 행해지던 생활보호자 신청에 동행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모야이’의 오니시 씨뿐만 아니라, 현재 빈곤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단체 대부분은 20대 젊은이가 이사장으로 있거나 대표를 맡고 있다. 14살에 노숙자 문제를 알고, 19살에 오사카시기타_{大阪市北} 구에 NPO법인 ‘Homedoor’를 설립한 가와구치 가나_{川口加奈} 씨도 20대로서 취로지원사업으로 HUBchari(노숙자들의 공통의 특수기술인 자전거 수리를 활성화시킨 웨어사이클), HUBgasa(버려진 비닐우산을 재활용한 리사이클 판매사업) 사업을 젊은 여성의 감각으로 사업화하고 있다. 가정과 학교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상실한 고교생을 ‘난민고교생’이라고 부르며 시부야를 중심으로 소녀들의 자립 지원을 하고 있는 여고생지원센터 콜라보_{Colabo} 대표이사 니토 유메노_{仁藤 夢乃} 씨도 20대이다.

니토 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인터뷰에서 “가족과 사이가 나빴고, 학교도 싫어서 한 달에 25일 정도를 시부야 거리에서 헤매고 있었다. 어디에도 있을 곳이 없다고 생각했다. 주변에 모이는 것은 그런 친구들뿐이었다. 좁은 인간관계 안에서 희망이 전혀 없이 계속 죽고 싶었는데, 죽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빈곤 문제에는 생활의 궁핍뿐 아니라 관계성의 빈곤도 있다. 니토 씨의 경우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에 고졸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 다니던 학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어른과 만난 것을 계기로 다른 세계를 알고 변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 역시 지금 관여하고 있는 여자아이들이 안심하고 있을 장소와 여러 어른들과 만나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싶다고 말한다. 니토 씨가 설립한 NPO법인 ‘콜라보_{Colabo}’가 목표로 하는 것은 ‘모든 소녀

들이 의식주와 관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립되어 궁핍한 상태에 있는 10대 여자아이들에게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장소와 식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있도록 자립 지원도 하고 있다. 집과 학교에서 머물 장소를 잃어버린 여자아이들은 '관계성의 빈곤'에 힘들어하고 있다. 누구에게 부탁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른 채 스스로 포기하고, 점점 부정적 순환고리에 물리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특히 '관계성의 지원' 측면에서 여자아이들이 여러 어른들과 만나는 기회를 늘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밤거리를 돌며 헤매고 있는 10대 여자아이들에게 말을 걸고 상담하는 일 외에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SOS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출장상담도 하고 있다.

빈곤퇴치운동에 참여하는 이 젊은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은 자신의 경험과 상황에 따른 당사자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점이 아닐까?

생협 직원의 실상: 빈곤퇴치운동을 담당하는 청년들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이미 여러 문헌을 통해 소개되었지만, 일본의 생협은 1970년대 후반부터 경이적인 성장을 이루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것을 지탱하게 한 것이 공동구매⁶⁾였다. 그러나 공동구매의 성장은 80년대 후반부터 둔화되었다. 주부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반의 구성 인원이 줄고, 반이 유지되지 않는 지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생협의 전국조직인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는 점포 중심으로 전환했지만, 대부분의 점포는 적자경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공동구매의 대안이 되지 못했다.

6) 반班의 구성원들로부터 주문받은 물건들을 주 1회 그 반의 당번 집으로 한꺼번에 공급하고, 주문한 멤버는 당번 집으로 물건들을 가지러 가는 시스템

팔시스템의 전신이었던 지역 생협의 다수는 완고한 사람들의 집단이었다. 당시의 직원은 사회변혁을 꿈꾼 70년대의 안보 투쟁, 즉 전공투(全共闘, 전국학생공동투쟁회의의 약자) 출신의 활동가가 많았다. 국가와의 투쟁에서 패배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본 결과, 다시 지역으로 돌아가서 지역의 당면 과제부터 새로 운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 그들이 내린 총괄적 결론이었다고 한다.

팔시스템의 전환점은 공동구매 대신 무점포사업으로서 개별 배송을 고안하고 실천한 것이었다.⁷⁾ 이후 생협의 개별 배송사업 창업을 담당했던 것은 팔시스템의 창업자세대이다. 생산자와 제조처 개척, 산지직송 채소 매입, 소분 작업, 주문서 작성, 배송, 주문집계와 발주, 그리고 조합원 활동 등 거기에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조합원과 지역의 소리를 듣는 창업자 정신이 있었다. 그 무렵에는 생협 직원을 전담 직원이라고 불렀다. 생협 활동과 사업 전반의 ‘현장’이 양립하여 항상 당사자 입장에서 활동할 것을 지탱해 주고 있었다.

개별 배송사업의 적극적인 확대를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상 속에서 ‘보통’의 존재로 자리 잡는 일이었다. 예를 들면 1990년대 초반부터 많은 대학졸업생이 채용되기 시작하며 임금인사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또 상품부 및 물류 시스템 부문을 연합회 업무로 집중시키고 회원생협은 배송업무와 조합원 확대, 지역과 조합원 활동을 담당하는 등 연합회와 회원생협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다. ‘혼자서 무엇이든지 한다’에서 ‘분업’으로 이행된 것이다.

7) 지금은 당연해진 것이지만, 상품을 조합원 집집마다 개별 배달하는 시스템이다. 당시에는 ‘개별 배송에는 비용이 든다. 대형유통기업과 슈퍼마켓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생협 진영을 지배하고 있던 상식이었으며, 개별배송은 공동구매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소리가 강했다.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던 생협은 과감히 다시 시도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이 방식은 조합원으로부터 환영받게 되었고, 팔시스템의 공급액은 매년 두 자리씩 성장해, 전국 생협으로부터 주목받게 되었다. 개별 배송을 시작했을 때의 팔시스템은 19개 생협, 조합원 37,550명이었으나 지금은 1개 도(都), 9개 현(縣)의 9개 지역생협이 가맹되어 있고, 산하 조합원이 130만 명, 연 총 공급액은 1,900억 엔의 생협그룹으로 발전해 일본 생협의 무점포 사업 성장에 공헌하게 되었다. 다른 생협도 차례차례 개별 배송으로 전환하였다. 일본생협연합회도 90년대 말부터 개별 배송을 공급사업의 중요한 사업형태로 두고, 전국적인 확대를 꾀하게 되었다. 일본생협연합회에 의하면 택배에 의한 공급 중 61%가 개별 배송이다.

개별 배송사업을 지탱한 또 하나의 요소는 운송회사에 배송을 위탁한 것이다. 운송회사의 배송 담당은 지정된 생협 유니폼을 입고 생협의 업무 매뉴얼에 기반해 배송뿐 아니라 조합원 응대, 조합원 확대 및 공제 영업도 담당하도록 했다.

생협 직원은 대졸자의 취직자리 중 하나의 선택지가 되었다.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과 안전한 식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는 등 생협 특유의 취직 동기에 대한 특징은 있지만, 취업으로서의 선택지인 것에는 차이가 없다. 또 한 가지의 지망 동기는 안정된 직장이라는 점 때문일 수도 있다. 대졸자로 생협에 취직하여 4~5년간 현장에서 일하고 지역센터의 센터장을 목표로 하거나 본부 업무를 담당하는 등, 현장은 통과하는 지점에 불과한 존재가 되었다. 동시에 생협 직원이 지역과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일도 거의 없어졌다.

한편으로 생협이 대형화됨에 따라 ‘안전한 상품을 파는 조직’으로 변모하기도 했다. 어쩌면 생협 자체가 안전한 상품에 특화된 슈퍼마켓으로 전략하는 위험성을 늘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시되는 것이 생협 직원의 역할이며 문제의식이다. 자자체나 민간기업이 손을 대지 못하는 영역으로, 자신들의 삶에 있어 생활인으로서의 과제를 사업화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상을 구현해가는 것, 생협의 사회적 의미는 거기에 있다. 그런데 ‘현장성’을 잃은 직원이 ‘생활인의 과제를 사업화하는 일’이나 경제적 이유로 조합원이 되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자 등 ‘당사자’의 존재를 아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걱정을 또한 갖게 된다.

생협 직원을 다시 일으키는 힘 - ‘당사자성’을 되찾기

생협은 그동안 주로 활동단체가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이러한 차원에서 빈곤, 원전 사고 피해자 생활지원, 복지, 교육, 마

을 만들기 등의 모든 과제별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별 단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노숙자 지원 현장에서, 지역의 거처 만 들기의 현장에서 네트워크 형성에 집중하고 있다. 그 현장에 직원을 계획 적으로 관여하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도쿄 도 이나기^{稻城} 시에 위치한 팔시스템의 드라이SC⁸⁾에서는 센터의 공 간을 취업 지원 사업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폐식용유 리 사이클 사업이나 지역 사업소와의 협력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등 생활 이 어려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워커즈코프연합회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생활의 궁핍 문제에 초점을 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함께 사업 을 일으키고, 서로 의지하는 지역을 만들어가고 있다.

팔시스템에서는 이처럼 당사자와 함께 연대하며 순환사회를 만들기 위 한 협동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바이오디젤연료(BDF, Bio Diesel Fuel) 사업이나 삼림 사토야마^{里山}⁹⁾ 관련 사업으로 연계하고 젊은이 지원 거점부터 사회연대, 지역순환형 산업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시민 리사이 클 사업에 빈곤 계층 및 사포스테¹⁰⁾ 이용자, 장애인 등도 참여할 수 있도 록 유도하며 직업 체험이나 중간 취업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 른 사업소에서 이용자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도 하고 있으며, 간담회와 지역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해 이러한 활동을 많이 알리려 하고 있다.

한편 야마나시^{山梨} 현에 위치한 ‘NPO법인 푸드뱅크 야마나시’(전前 팔시스템 야마나시 이사장이었던 요네야마 케이코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8) 물류센터 역할을 하는 SC(Set Center)에 상온품을 추가로 취급하는 곳으로, 2011년에 건립됨.

9) 마을 가까이 있는 산으로, 뿔감이나 나물 채취 등 지역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산을 일컬음.

10) 지역 젊은이 서포트스테이션의 약자로, 후생노동성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시설. 젊은이 지원 노하우를 가진 NPO법인 또는 주식회사 등에 사업을 위탁하기도 함.

함께 일하고 있으며, 빈곤 가정을 대상으로 월 2회 식료품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식료품 지원 활동을 통해 빈곤을 눈에 보이게 가시화한 일은 특히 의미 있는 것으로 꼽을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자립 상담 지원사업, 취업준비 지원사업, 일시생활지원 위탁 사업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4월부터 발효된 ‘생활궁핍자자립지원법’에는 식료품 지원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조성금이나 지자체별 자금 지원이 끊기면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 푸드뱅크 야마나시의 2015년 수입 예산은 22,855,000엔으로, 2014년과 비교하면 ‘관계만들기’ 명목의 지원예산 2,000만 엔이 삭감되어 전체 금액이 절반 정도로 줄었다. 지자체마다 식자재 지원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푸드뱅크 야마나시도 그동안의 지원 사업 중 70%가 지속되지 못하는 처지다. 이로 인해 빈곤이 더욱 비가시화되어 빈곤 가정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가고 있다.

팔시스템에서도 활동을 유지, 지속하기 위해 각 조직에 긴급지원을 요청함과 동시에 올여름부터는 월 1회 식료품과 생활용품 기부 활동을 시작한다. 당면한 문제는 식료품 구입을 위한 자금 지원이지만, 생협이 장점인 택배사업을 활용한 배송 지원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젊은 층인 생협 직원을 활용하려고 한다. ‘돌봄 배송’을 통해 빈곤 당사자와 만나는 접착면을 늘리고, 그 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소중히 여기게 할 것이다.

자본주의 상품유통경제 안에서 대형 유통 기업을 ‘태양’에 빗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태양만으로는 밤을 밝힐 수 없다. 태양이 비치는 곳에는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이다. 스스로 태양은 아니어도 태양의 밝은 빛을 반사해서 어둠에 어스름 빛을 비치는 달과 같은 존재, 그것이 생협의 사업이어야 한다. 생협은 달이 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 생협 직원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 시작점은 ‘당사자성’을 되찾는 것으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첫 회 ‘메이커페어 서울’ 행사 이후 메이커들이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인 정부 주도의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의 열기 속에서 ‘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나타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국내 메이커 운동의 현황과 흐름을 살펴보고, 메이커 문화가 우리의 생활양식에 대안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메이커 운동’의 태동

‘만들기’는 더 간단하게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본적인 개념이다. 하지만 다시금 ‘만들기’가 재조명되는 이유는 만들기의 방식이 극적으로 바뀌고 있고, 이것이 사회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의 발달이 만들기의

● 엘리스온 에디터

●● 본 글은 미디어문화예술채널 엘리스온(www.aliceon.net)의 [CoverStory_TAG 11. 메이커 문화와 메이커 스페이스 “만들고, 배우고, 공유하라!” - 2부 국내편] 기사 내용을 부분적으로 공유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방식을 빠르게 바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혹자가 ‘제3차 산업 혁명’이라고도 부르는 ‘개인제작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기존의 만들기(제작)가 소수정예, 즉 장인 개개인의 기술과 숙련도에 의



해 좌우되었다면, 지금의 만들기는 누구나 가능하다. 기술의 발달과 공유(오픈소스)로 인해 개개인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혁신을 일으키는 게 가능해졌고, 그러한 풀뿌리 기술혁신의 확산이 만들기 인구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개개인의 아이디어가 제작까지 손쉽게 연결되는 지금, 소규모 제작의 영역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로봇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드론, 인공위성, 우주선까지로 확장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들을 ‘메이커Maker’라고 한다. 이는 2005년 창간된 『메이크』 매거진을 통해서 대중화되기 시작한 말로, 새로운 만들기를 이끄는 새로운 제작인구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 발명가, 공예가, 기술자 등 기존의 제작자 카테고리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손쉬워진 기술을 응용해서 폭넓은 만들기 활동을 하는 대중을 지칭하는 말이다. 기술의 사용이 새로운 만들기 인구 확장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쓰일 때는 ‘취미공학자’라는 의미가 강했지만, 공유와 발전으로 새로운 기술의 사용이 더욱 쉬워진 지금은 만드는 사람 전부를 포괄하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만드는 법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흐름을 통칭하는 말로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이라는 용어 또한 생겨났다. 『메이크』 매거진의 창간자 데일 도허티Dale Dougherty가 화두를 이끌어낸 후 디지털 제조업, 풀뿌리 기술혁신의 확산과 맞물려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 메이커들이 온·오프라인으로 DIY 프로젝트와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생기는 커뮤니티, 그리고 물리적인 작업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혁신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면서 생긴 개념이다.

‘메이커페어 서울’에서 ‘메이커 문화’의 확산을 보다

메이커 운동의 시작점이 된 ‘메이커페어’는 직접 만든 프로젝트가 있는 사람, 즉 메이커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만들기 페스티벌이다. DIY 프로젝트 전시, 워크숍, 세미나 및 강연 등이 규모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국에서 2006년 개최된 첫 페어에 2만2천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던 것에서 2013년에는 독립 조직 페어까지 포함해 전 세계 곳곳에서 총 100회 진행, 총 관람객은 53만 명이 넘었다. 매년 <메이커 미디어>에서 직접 진행하는 정규 플래그십 페어가 2~3회, 그리고 <메이커 미디어>의 라이선스를 받아 각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조직하는 미니 메이커 페어가 전 세계에서 수십 회 진행된다. 국내에서는 『메이크』 매거진 한국판 편집진이 진행하는 ‘메이커페어 서울’이 매년 1회 진행되며, 미니 메이커 페어는 라이선스를 신청하면 국내외에서 누구나 조직이 가능하다.

2014년 3회째를 맞이한 ‘메이커페어 서울’은 2년 전 1회 당시 30팀^(128명)에서 총 80팀^(300명)으로 약 세 배 가까이 그 참가 규모가 커졌다. 행사장도 이전의 예술 공간에서 국립과천과학관으로 규모를 넓혀 보다 다양한 참여자들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행사가 열린 주말, 평소에도 가족단위 관람객들로 붐비는 야외 마당에는 참여 메이커들의 작품이 전시된 대형 천막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부스 내부는 메이커들과 대화하거나 뭔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 관람객들로 북적이는 모습이었다. 천막 안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부스들은 ‘KID&KIDS, GADGETS, COMMUNITY, Maker SHED, TECH DIY, LIFE HACKS,



2014 메이커페어 서울

ARDUINO KITS, ROBOTS&TOYS, CRAFT, LED&LIGHTS, NEW MEDIA'와 같이 총 11개 섹션으로 나누어 있었다. 관람자 입장에서는 전시물들 간 사용된 기술과 성격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아 나누어진 전시공간의 경계가 다소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전시를 관람하다 보면 나누어진 구획은 금세 잊어버린 채 메이커들만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담긴 신기한 발명품, 장난감, 요리기구, 교육용 도구 등의 작품들 속에 폭 빠져들게 된다. 뉴미디어에서부터 전통적인 공예품까지, 만드는 과정을 공유하고 직접 만드는 체험도 가능한 작품이라면 어떤 제작물도 수용 가능한 메이커페어는 볼거리, 대화거리, 만들거리로 가득한 그야말로 흥미로운 장터다.

과학관 실내에 위치한 '무한상상실¹⁾'에서는 메이커들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세미나가 함께 열렸다. 무한상상실은 14개 창조작업실과 3D프린터 등 첨단장비를 갖추고 있는 공방형 실험실 형태의 공간으로, 물품 제조에서 ICT 소프트웨어 및 SF영화·소설·다큐 등 문예창작을 포함한 다

1) 2013년에 개소한 정부 주도 메이커 스페이스로 과학관, 도서관, 주민센터 등 주민생활공간에 설치되어 국민의 창의성, 상상력,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시험·제작을 하거나 UCC제작·스토리 창작 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다. 정부는 과학관과 도서관, 초·중·고등학교에 3D프린터를 보급하고 2017년까지 130개 셀프제작소를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 과학관을 중심으로 무한상상실을 개설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전문가 멘토링', '아이디어클럽', '스토리텔링클럽' 등을 운영한다. 또한 제안된 아이디어를 분석하여 우수한 아이디어는 저작권(IP)화, R&D 및 창업지원 등과 연계시스템을 운영한다.

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 예년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총 80개 참가팀 중 몇몇 기업 참가팀 또는 작가들을 제외하고는 개인적으로 또는 커뮤니티를 통해 처음 참가한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순수한 호기심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배우고, 사람들과 공유해오고 있는 메이커들의 증가 폭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13년 메이커페어 개최 이후 1년 사이에 정부 주도의 대규모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속에서 우리나라의 메이커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흐름을 느낄 수 있었다.

메이커 스페이스와 메이커 문화

‘메이커 스페이스’는 만들기에 필요한 도구를 갖춰놓은 장소이자 메이커 커뮤니티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다. 대개는 개인 제작에 유용한 CNC(컴퓨터 수치 제어) 기계를 중심으로 여러 제작기기를 갖추고 있다. 미국에서는 ‘테크숍TechShop’이 가장 규모로 성장했고, MIT에서 시작한 ‘팹랩FabLab’은 일종의 도구 작업실 포맷을 배포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작업실을 갖추고 있다. 지역 모임에서는 장소와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필요한 도구만 제한적으로 갖춘 경우가 많다.

국내의 경우 2010년 ‘해커스페이스’를 시작으로 매해 메이커들의 자발적 의지로 소규모 메이커 스페이스들이 조금씩 생겨났다. 이후 2011년 한국판 메이커 잡지 『MAKE: KOREA』가 출간되고 2012년 제1회 메이커페어가 열리면서 메이커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산되었다. 이후 국내에

서 ‘라즈베리 파이²⁾를 중심으로 한 지식공유모임 ‘라즈베리&임베디드 사용자모임³⁾이 단기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모임은 민간 커뮤니티를 통해 메이커들의 공유문화가 확산된 대표적인 모델로 ‘한국형 팹랩’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2013년에는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팹랩 서울⁴⁾이 문을 열었으며 ‘언메이크랩’, ‘릴리쿰’과 같이 제작실험 집단에 의한 새로운 유형의 민간 주도 메이커 스페이스들도 등장했다. 한편 2012년 수원의 시제품 제작터 개소 이후 2013년부터는 정부 주도의 디지털 제작 관련 공간 및 이벤트성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국내 메이커 스페이스로는 위에서 언급한 팹랩 서울과 국립과천과학관 무한상상실 외에 콘텐츠코리아랩⁵⁾, K-ICT 디바이스랩⁶⁾ 등이 있다.

-
- 2) 영국의 라즈베리 파이 재단이 학교에서 기초 컴퓨터 과학 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든 싱글 보드 컴퓨터(위키백과)
 - 3) 이들이 만든 지식공유 온라인카페 ‘오로카’는 15,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로보틱스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다.
 - 4) 2013년 문을 연 팹랩서울은 타이드인스티튜트가 운영하고 SK텔레콤이 후원하는 국내 최초의 팹랩이다. 공간은 세운상가에 위치해 있는데, CNC 라우터, 3D 프린터 등의 디지털 제작 장비들을 갖추고 있어 소정의 장비 이용료를 지불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공간 운영방식 및 메이킹과 관련한 워크숍 콘텐츠, 오픈소스 등을 공유하고 이들을 국내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나 메이커 입문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미디어아트, 3D 프린팅, 피지컬 컴퓨팅 등 메이커 무브먼트와 관련된 다양한 워크숍을 제공한다. 매주 열리는 오픈데이에는 공간을 둘러보고 디지털 페브리케이션(Digital Fabrication)에 대한 안내와 팹랩 서울의 소개를 들을 수 있으며, 저녁 7시에는 ‘Fab Lab Networking Time’을 마련해 메이커들 간 네트워크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현재 제조업 스타트업 분야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실험품 시작품 형태를 만드는 ‘팹랩서울’에 이어, 본격적인 시제품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테크샵’, 그리고 완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팹랩스토어’의 운영도 준비 중이다.
 - 5)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창의인재 육성 및 창업 거점 구축사업으로, 다양한 창작자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소통·융합하고 새로운 콘텐츠 창작 및 창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 2014년 서울 대학교 홍익대아트센터 내 1호점을 개소하고 이어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4곳을 선정, 지역점 경기, 인천, 대구, 부산점을 포함해 총 5개점을 개소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인천점을 제외하고 4개점을 순차적으로 개소하여 운영 중이다. 본 메이커 스페이스는 창작자들이 아이디어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유·무형의 디지털 창작이 가능하도록 3D 프린터뿐만 아니라 녹음 및 음향 장비, 영상 편집기기 등 다양한 장비와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프로그램 또한 보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 지원이 가능하도록 아이디어 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비창업자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 6)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운영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 전담 관리하는 정부 주도 메이커 스페이스. 국내 스마트 디바이스 중소·벤처 기업과 스타트업, 예비창업자들이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실현시키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념의 공간으로 2014년에 개소되었다. 제품개발 교육, 제품기획(SW·HW의 제품기능 및 마케팅·미디어 등 감성기획) 및 전문가 멘토링, 디자인(HW·SW·UX·UI등) 및 프로토타입 제작 지원, 제작공간 제공,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사업화·투자 연계 지원 등 개별 프로젝트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은 신청(아이디어 제출) 후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지원 수준과 단계를 결정한다.

국내외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개인 제조 방식은 예상보다 큰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역시 그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 그 교차점이자 전환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자생적 모임으로 메이커 문화를 주도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아날로그 물건을 해킹하고 재조립하는 다양한 제작 활동이 있었다. 또 MIT에서 시작된 펍랩과 같이 국내 미디어 및 테크놀로지 관련 대학 내 다양한 형태의 랩 속에서 유사한 실험은 존재해왔다. 그러나 그들이 곳곳의 오프라인 공간에서 눈에 띄지 않게 커뮤니티를 형성했다가도 현재까지 이어져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2010년에 문을 연 해커스페이스 서울이 현재는 비활성화 된 것처럼 민간 주도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한 메이커 문화가 지속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메이커들의 목소리 가운데는 이들의 대표적 축제인 메이커페어에만 가



2014 메이커페어 서울

보더라도 아직은 만드는 지식을 공유하는 문화보다는 자신이 배우고 만든 것을 자랑하려는 문화가 더 큰 것 같다는 의견도 있다. 또 테크놀로지 기반의 메이커 문화는 고가의 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은데, 기업에서 운영하는 메이커 스페이스인 팹랩의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인식 확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물며 개인 주도의 공간은 만들고 유지하기에 더욱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 메이커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기저에는 ‘공유’ 문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수많은 오픈소스(Open Source) 공유를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및 시스템이 형성되고 확산되어 왔다. 민간 영역에 지식공유 플랫폼과 커뮤니티, 메이커 스페이스들이 있었다면 산업 영역에서는 시제품 제작 및 유통 시스템, 전시, 출판, 이벤트 등이 다각적으로 발전되어 왔고 정부 주도의 교육 사업과도 연계되어 최근 메이커 문화의 흐름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오랜 시간에 걸친 민간 주도의 메이커 문화가 뿌리를 내린 후에 산업과 공공의 영역으로 연계되어 확산이 가속화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메이커 문화가 유입되는 초기 단계에서 경제 가치로서의 창의성 육성, 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 실현을 목적으로 대규모 정부 주도 사업이 발표되고 미디어를 통해서 한꺼번에 대중들에게 그 개념이 전달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해외에서와 같이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온 메이커 문화가 이렇듯 단기간에 곧바로 정착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아무래도 메이커 활동의 핵심인 만들고, 배우고,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메이커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 간 네트워크가 필요

일본의 경우 2009년 ‘해커스페이스 도쿄’를 시작으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팹랩과 같은 프랜차이즈형 메이커 스페이스가 확산되었다. 이 중에는 기존 공방 형태의 공간이 프랜차이즈형 메이커 스페이스로 변경된 경우도 있고, 팹랩의 기본 형태를 차용하여 다양한 콘셉트의 메이커 공간으로 새롭게 개발된 사례도 있다.

팹랩의 경우 2011년 5월 동아시아 최초의 팹랩이 일본 가마쿠라와 쓰쿠바에 개설되었다. 이어서 2012년 2월에 팹랩 시부야, 2013년 1월에 팹랩 기타카가야, 2013년 5월 팹랩 센다이가 연이어 가동되기 시작했다. 우리보다 2년 먼저 첫 팹랩이 운영되기 시작했고, 글로벌 프랜차이즈 팹랩은 우리나라에는 현재 서울 한 곳에 있는 것에 비해 일본은 2015년 현재 11개의 공간이 ‘팹랩 재팬 네트워크(FabLab Japan Network)’를 이루고 있다. 그 외에도 해커스페이스 등 다양한 형태의 메이커 스페이스가 활성화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일본 내부적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들 간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12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TOKYO FABBERS’ FES 2014’ 행사 역시 일본의 메인 메이커 스페이스들이 연합한 단체인 ‘TOKYO FABBERS’가 각 공간에서 나온 다양한 제품 및 작품을 전시하고 상호 정보를 교류하며 네트워크를 쌓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첫 번째로 개최한 행사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최근 전문기기를 갖춘 제작 공간, 워크숍 중심의 제작 공간, 테크숍 형태의 시제품 제작터, 팹카페 형태의 제작 공간, 온·오프라인 지식공유 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메이커 스페이스들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아직 이들 간 활발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으며, 이러한 네트워크가 지속되도록 하는 온·오프라인 공간 및 커뮤니티와 같은 플랫폼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각각의 메이커들

간 네트워크 형성과 지식 및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미디어나 이벤트들도 아직은 단발성에 그치고 있다. 배우는 활동에 있어서도 각 공간별로 단기~장기 메이커들을 위한 초보~전문 수준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간만 늘릴 것이 아니라 적절한 인력 활용에 있어서도 더 많은 고민이 따라야 할 것이다.

메이커 문화가 장기화되고 향후 긍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내에서 메이커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 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메이커들 간, 다양한 주체들 간 정보를 교류하고 좋은 프로그램 콘텐츠를 교류하는 활동, 즉 ‘만들고, 배우고, 공유하는’ 가장 근본적인 메이커 정신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메이커 문화, 대안적 생활양식을 만든다

지난해 가을 ‘메이커페어 서울’ 행사에서 메이커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들의 작품을 보고 나서 개인적으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이후 매거진



‘2015 제1회 NEX-D 미니 메이커페어’에 메이커 자격으로 참가한 필자

에디터로써 ‘메이커 문화와 메이커 스페이스’ 관련 특별 기획 기사를 작성하여 국내외 메이커 문화에 대한 흐름을 파악해 보았다. 그리고 판교에 있는 한 정부 주도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진행된 교육 프로그램에 약 2개월간 직접 참여하면서 스스로 메이커가 되어 팀원들과 함께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고 미니 메이커페어 전시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이후 계속해서 제작 문화와 관련한 전시, 프로젝트들을 취재하고 관련 내

용을 매체를 통해 사람들과 공유해 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발견한 사실은 이렇듯 메이커 문화에 꽤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오면서 계속해서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된다는 점이다.

메이커 문화에 대한 이러한 열정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메이커페어 행사를 다녀와서 설레었던 감정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 답은 행사장에서 수많은 메이커들과 나눈 대화 중 일관되게 나타난 내용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모터와 주변 사물을 이용한 장난감, 작곡 머신, 3D 프린터를 개조한 쿠키 메이커, 아날로그 인형 만들기 키트 등을 만들어 내놓은 메이커들에게 물었다.

질문 : 만들기는 왜 하시는 건가요? 목적이 있나요? 작가로서 작품 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나요? 창업을 하거나 커리어를 쌓거나 하는 목표가 있나요? 이 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요?

메이커 : 목적이요? 없어요. 그냥 재미있어서 하는 거예요. 다른 메이커들과 대화하고 만든 과정이나 결과물을 나누는 것도 재미있구요.

위 질문을 다시 풀어보면, “이 만들기라는 행위에는 재화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생산성이 있나요?”라는 질문과도 같다. 당시에 내가 가장 놀랐던 점은, 시간과 물질적인 비용, 성공과 실패의 과정 등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 ‘만들기’, 특히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만들기의 경우 좀 더 복잡한 지식 습득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일’을 메이커들은 그저 ‘재미’로 한다는 것이다. 흔히 의식주와 관계된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가구, 옷, 식탁보, 장신구 등)을 만드는 기존의 DIY 문화와는 다른 부분이 있었다. 별난 취미를 가지고 한 분야에 깊이 파고드는 사람들의 활동(로봇 만들기, 가족공예, 레고 놀이, 음악 작곡 등)과도 닮아 있지만 뭔가 다른 부분이 있는 듯했다. 그것은 바로 기술과 도구의 발달로 이들을 활용한 만들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TECH DIY”가 대중화되었고, 더군다나 재미를 추

구하며 무언가 만들어내는 평범한 사람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순수한 놀이와도 같은 만들기는 크든 작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 되어 자신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만들기를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사람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직업을 바꾸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기발한 아이디어의 작품들을 만든 300여 명의 메이커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메이커페어 전시장 안에서 이들과 대화했던 그날, 나는 마치 신세계를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다.

특히나 나의 경우 취미로 만드는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늘 바쁜 시간에 쫓겨 업무와 관련된 일만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 그저 즐기기 위해서 하는 ‘소득은 없는’ 일은 늘 뒷전이 되기 마련이었다. ‘재미’를 위한 일들은 늘 실천되지 못한 채 마음속 한구석에 ‘위시리스트’로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메이커들과는 다른 생각과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나는 더욱이 돈을 벌기 위해서라거나 생존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만의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고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강력한 동기를 얻게 되었다.

만드는 문화를 이루는 근본적인 요소는 결국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와 실천 의지이다. 나아가 마크 해치의 『메이커 운동 선언』에서는 ‘만드는 일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며, 도구를 갖추어 만들고 창조하고 표현함으로써 충족감을 느끼고,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며 사람들과 공유하고, 이 과정에서 배우고, 이러한 활동을 위해 후원하며, 이를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변화할 것’을 요구한다.

현대 테크놀로지와 결합해 재조명되고 있는 제작 문화는 삶의 실천적 문제들에 만연해 있는 ‘합리적 관점에 준거한 삶의 태도’를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제작 과정에서의 제작자의 ‘행위’, 행위의 ‘노동’적 속성, 행위의 개인적 또는 사회문화적 ‘동기’, 그리고 이를 위한 ‘실천’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보게 하는 것이다.

이렇듯 메이커 문화는 우리 주변의 사물을 단순히 소비의 대상으로써가 아닌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대상으로써 새롭게 바라보고, 내 삶을 위한 실천적 제작 행위를 하게 한다는 점에서 대안적 생활양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DIY(Do It Yourself)’라는 말을 새삼 떠올려 본다.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에서 독립해 스스로 무언가 만들고 그 과정에서 배우며 이것을 사람들과 나누어보라는 메이커들의 메시지가 들리는 듯하다. “언제까지 사물을 만드는 기쁨을 작가, 디자이너, 또는 기술자만이 누리도록 내버려둘 것인가.”●

참 고 문 헌

- 마크 해치. 2014. 『메이커 운동 선언』. 정향 역. 한빛미디어
- 크리스 앤더슨. 2013. 『메이커스』. 윤태경 역. 알에이치코리아.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혁신형제조공간, 팹랩」. KIAT산업기술정책브리프, 2014. 2.
- “커피 마시고 예술작품도 만드는 레이저 공방점 속속”. 〈SP투데이〉, 2014. 12. 15.
- 국립과천과학관 <http://www.sciencecenter.go.kr>
- 디플레이 <http://dplaylab.kr>
- 렐리쿰 <http://reliquum.co.kr>
- 메이커페어서울 <http://www.make.co.kr>
- 미래창조과학부 <http://www.msip.go.kr>
- 스튜디오노닥노닥 <http://www.nodacnodac.kr>
- 언메이크랩 <http://www.unmakelab.org>
-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 창조경제혁신센터 <https://ccei.creativekorea.or.kr>
- 팹랩서울 <http://fablab-seoul.org>
- Fab Cafe Global <http://fabcafe.com>
- FabLab Japan <http://fablabjapan.org>
- Tokyo Fabbers <https://www.facebook.com/tokyofabbers?fref=ts>
- http://en.wikipedia.org/wiki/Maker_culture
- http://en.wikipedia.org/wiki/Maker_movement
-

서평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통합 경제학

-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
찰스 아이젠스타인 지음, 정준형 옮김, 김영사, 2015.

“변함없이 존재하는 진리란 무엇일까? 그것은
만물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진리이며, 자기
자신과 별개가 아니면서 자신보다 더 큰 무언
가에 참여한다는 느낌이다.”



피케티 vs 아이젠스타인

도대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신음과 절규가 하늘
에 사무치고 있다. 1% 부자들의 독점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1%가 전
체 부의 99%를 차지하고, 99%가 1%의 부를 가지고 다투는 꼴이다. 그러
니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삶은 갈수록 가혹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
이 우리 사회에서 온갖 ‘갑질’의 형태로, 비정규직 차별과 청년실업의 증
가로, 낮은 최저임금, 복지 축소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년들과 여성, 사

• 한양대 강의교수, 천도교한울연대 공동대표

회적 약자들의 삶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고 있다. 이는 높은 자살률과 낮은 출산률로 나타나 생명이 철저히 외면되는 현실을 낳고 있다.

작년에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막대한 부의 옆에서는 매우 비참한 가난이 소리없이 자라나고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좀처럼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모델을 거부하고, 물질주의의 유혹을 극복해야 한다”고 충고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충고를 외면하고 부자들의 부를 더 증대시켜주는 반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국가의 ‘재분배’ 역할을 여전히 방기하고 있다.

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작년에 출판계를 강타한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은 선진국의 소득불평등 심화와 그 원인을 엄청난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밝힘으로써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철저히 부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했음을 만천하에 밝혔다. 하지만 이 책은 애초에 대안 제시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기에 대안을 기대한 사람들에게는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던 차에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제안하고 현실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 얼마 전 번역되어 나왔다. 찰스 아이젠스타인의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가 그것이다.

아이젠스타인은 전문 경제학자라기보다는 철학자이자 문명학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미국 예일대에서 수학과 철학을 전공했으며, 중국어 통역사, 비즈니스 컨설턴트, 요가 강사를 거쳐 현재 고다드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2007년 『인류의 도약』이라는 책으로 세계 석학들과 지성계의 주목을 받으며 일약 천재 통합사상가로 발돋움했으며,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자본, 경제, 사회, 문명, 의식, 인류의 문화적 진화에 관한 글을 써왔다. 그러므로 그는 경제학이라는 분과학문의 좁은 틀에 갇혀서 현미경식으로 ‘경제’를 보지 않고, 주변 학문과의 관계 속에서 보다 통합적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피케티와 달리 그가 가진 큰 장점이다. 역사적으로도 경제학의 큰 발자취를 남긴 사람은 오히려 경제학자가 아

닌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곤경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돈이 돈을 무한 증식시키는 화폐금융시스템 자체에서 찾는다. 자연파괴, 전쟁, 빈곤, 실업 등의 모든 문제가 '무한히 자기증식하는 돈', '상품으로 매매되는 돈', 특히 '높은 이자'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돈의 특징으로 인해 지금의 시스템은 끝없는 성장을 강요하며 탐욕과 무한경쟁과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생태계와 공동체적 관계 등 '공유자원'의 약탈을 필연적으로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거래되는 돈의 98퍼센트가 헤지펀드, 금융파생상품 등과 같은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실물경제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경제 위기에 대한 습관적인 첫 대응책은 더 많은 돈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것, 즉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든 바꾸는 일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젠스타인은 후손들이 살아갈 지속가능한 문명을 위해서는 모든 문제의 근본인 '돈', 귀중한 자연과 자원을 고갈시키면서 끊임없이 자기증식하는 돈을 전제로 한 현대의 경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 방식은 돈과 인간의 경제를 우주 만물과 마찬가지로 신성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신성'에는 고유성과 관계성이라는 두 측면이 있다. 어떤 것이 신성하다는 것은 그것이 그 자체로 유일하고 고유성을 가질 때, 그리고 그것이 나와의 특별한 관계, 또는 더 큰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신성한 관계를 잃어버림으로써 모든 관계를 물화(物化)시키고 양(量)으로만 규정해 왔다. 삶의 질적이고 신성한 측면을 잃어버림으로써 영혼의 피폐와 근원적 외로움에 시달려 왔다. 그리고 그 결핍을 다시 탐욕으로 채워왔다.

아이젠스타인은 이런 신성함을 다시 회복하자고 한다. 그것은 자연 속에 명백히 존재하는 경쟁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의 협력과 공생과 전체성을 우위에 두고 자연을 선물의 그물망으로 이해하던 토착적 사고방식을 회복하는 것이다.

실현 가능한 일곱 가지 대안

아이젠스타인은 이제 본격적으로 역행 과정을 시작할 때가 왔다고 주장한다. 그는 고대사회에서 선물과 필요를 이어주면서 발생했던 돈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여 상품과 서비스 영역에 있던 것들을 선물, 호혜, 자급자족, 공유의 영역으로 되돌리는 과정을 제시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돈을 쓰지 않고 쌓아두면 가치가 떨어지는 ‘역이자 화폐’, 각종 불로소득을 없애는 경제적 지대의 제거, 생태계를 비롯한 공유자원 고갈에 대한 배상과 사회·환경 비용의 내부화, 지역 경제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되살리는 경제·통화의 지역화, 또한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사회배당금(기본소득), 그리고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는 P2P 경제 등을 통해 구체적이면서도 점진적인 방식으로 제기하고 있다.

대안- ① 역이자 화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곤경의 근본 원인을 ‘무한히 자기증식하는 돈’, ‘상품으로 매매되는 돈’, ‘높은 이자’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첫 번째 방안은 ‘역이자 화폐’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실비오 게젤의 ‘노화하는 돈’의 아이디어를 계승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가 줄어들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돈을 쌓아둘 수 없고, 그 자체의 자기증식도 불가능하게 된다. 이로써 성장은 없지만 부의 공정한 분배가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미래 현금흐름의 할인이 사라져 더 이상 단기적 수익에 미래를 저당 잡히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이 소멸을 거쳐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구현한다. 돈은 더 이상 자연 법칙의 예외로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연방준비은행이 지급준비금에 역이자를 부과하거나 소멸화폐를 발행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어느 나라든 그런 권한은 입법기관에 있고 그래야 마땅하다. 중앙은행의 통화관리수단이 효력을 잃어가면

서 이제 이 대안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담론화 할 때가 되었다.

대안-② 경제적 지대의 제거, 공유자원 고갈에 대한 배상

사람들이 생산적인 일, 사회에 기여하는 일은 하지 않고 단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만으로 불로소득의 이득을 볼 수 있다면 부의 양극화는 불가피하다. 이에 대한 이 책의 해법은 토지에 단일세를 부과하자는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의 획기적 주장을 계승하되, 다른 많은 공유자원이 사유재산으로 바뀐 지금은 이것을 확대해서 토지 이외에도 전자기스펙트럼, 채굴권, 매장 석유, 특허권 등 수많은 형태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의 경제적 지대를 세금을 통해서 환수하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재산은 인류에 앞서 존재했거나 인류 공동의 산물이기에, 그것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한 어떤 개인도 사적으로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공유자원에서 비롯된 것은 무엇이든 요금이나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지적재산은 저작권과 특허권의 기간을 줄임으로써 공유자원으로 되돌릴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적재산을 낳은 문화적 모체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유전자, 전자기스펙트럼, 인터넷 같은 새로운 부의 원천을 모두가 공유하면서, 사회적, 환경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만 사용권을 배분해주어야 한다.

세금체제에 있어서는 재산과 자원에 대한 불로소득에만 과세함으로써 노동에 의한 과세, 즉 판매세와 소득세는 줄이거나 사라지게 한다. 이로써 자원을 보존하게 만드는 강력한 경제적 유인책이 생겨날 것이다. 경제적 지대는 단지 먼저 소유한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기에, 경제적 지대를 없애면 보다 공정한 부의 분배가 이루어질 것이다. 지적재산 분야에서 공유가 확대되고 예술적·지적 창작물의 ‘원료’가 사유재산의 제약을 덜 받게 되면서, 수익에 구애받지 않는 창조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다.

대안- ③ 사회·환경 비용의 내부화

지금은 대수층을 고갈시키고도 사회에 그 비용을 물지 않듯이, 폐기물을 흡수·처리하고 탄소를 순환시키는 지구의 수용능력, 유독성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인체의 수용능력을 고갈시켜도 그 비용은 물지 않는다. 오염과 그 밖의 환경 파괴로 인한 비용은 대개 오염 유발자가 아닌 사회 전체와 미래 세대가 치르게 돼 있다. 이는 명백히 부당한 일일뿐 아니라, 계속되는 환경 파괴를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오염 및 고갈에 대한 비용을 당사자가 직접 지불하도록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런 조치들은 환경과 경제의 대립관계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창조적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사업상 최선의 결정이 환경적으로도 최선의 결정이 될 것이다. 보존, 오염 방지, 유해 폐기물 정화를 위해 헌신하는 새로운 거대 산업들이 등장하고, 쓰레기 제로 생산이 일반화될 것이다. 높은 원료비용은 생산의 소형화와 효율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대안- ④ 경제, 통화의 지역화

전 세계적인 공동체의 와해 속에서, 우리는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존하고 살아가는 지역경제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적인 단일문화 속에 익명으로 표류하기보다 사람들과 결속되고 공간과 결속되기를 원한다. 게다가 글로벌 생산 체제는 지역들 간의 경쟁을 부추겨, 임금과 환경규제 면에서 '바닥을 향한 경주'를 하게 만들고 있다. 생산 및 거래가 지역화되면, 우리의 행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분명해져서 우리의 타고난 공감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많은 자연, 사회, 문화적 공유자원이 본래 지역적, 생태지역적이므로, 공유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화폐 시스템은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주권 또한 자연스럽게 강화시킬 것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대부분을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키운 것들로 조달하고, 주택과 수많은 대량생산품도 지역 재료

를 사용한다면 소규모로 생산되고 재활용될 것이다.

대안- ⑤ 사회배당금

수천 년 동안 이어진 기술 발전 덕분에, 삶에 필요한 것 중 측정 가능한 것의 생산은 대단히 쉬워졌다. 이런 기술 발전은 선조들이 준 선물이자 인류 공동의 재산이므로, 누구나 공유할 자격이 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자연이라는 공동의 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 시스템은 이미 우리 것인 공동의 부를 얻기 위해 일하도록 강요한다. 이런 부당함을 바로잡으려면, 경제적 지대에 대한 배상, 환경오염에 대한 과세 등(2, 3번 참조)으로 얻는 수익을 모든 시민들에게 사회배당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사회배당금은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디플레이션 위기를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 사회배당금은 생계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해결할 만한 수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이상적이며, 그 이상의 돈을 벌고자 하면 얼마든지 벌 수 있을 것이다. 사회배당금은 사람들이 생계의 압박에서 벗어나 일할 수 있게 해준다. 즉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싶어서 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제생활은 더 이상 생계를 잇기 위한 생활이 아닐 것이다. 생계 압박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영감이 이끄는 방향에 사용하게 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분리'로 황폐화된 사회와 지구를 치유하는 데 재능을 쏟게 될 것이다.

대안- ⑥ 경제 역성장

수 세기 동안 방적기에서 디지털 컴퓨터에 이르는 노동력 절감 장치들이 발명될 때마다, 우리는 일을 줄이기보다 소비를 늘리는 쪽을 택해왔다. 화폐 시스템에 의해 강요된 이런 선택은 사회자본, 자연자본의 고갈을 가속화했다. 그러나 이제 소비를 늘리는 선택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무위험 이자를 추구하는 동력이 사라지면, 경제 성장이 있어야 자본의 흐름

이 촉진되는 시대도 끝나고 역성장 경제가 실현 가능해진다. 기술 발전은 계속되고, 우리는 일을 줄이는 선택, 더 정확히 말해 돈을 벌기 위한 일을 줄이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빈곤층과 중산층은 지금보다 풍족함을 누리며, 역성장 경제인데도 경제가 성장하는 듯한 효과를 느낄 것이다. 보통은 성장 중심의 사업 투자에 의해 가능하던 임금 상승과 고용 확대의 혜택이 정상상태 경제 혹은 역성장 경제에서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화폐 영역은 위축되고 선물, 자원봉사, 여가, 측정 불가능한 것들의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사람들은 비경제적인 활동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될 것이다. 영상, 음악, 비디오, 뉴스, 책 등 디지털 콘텐츠의 비용제로화 추세도 계속될 것이다. 자원 기반의 생산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겠지만, 계속되는 기술 발전 덕분에 인적 비용은 줄어, 많은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소비가 줄어드는 대신 더 많이 나눠 쓰고, 임대료가 줄어드는 대신 더 많이 빌려주며, 판매가 줄어드는 대신 더 많이 베풀게 될 것이다. 이 모두가 역성장 경제의 반영이자, 역성장 경제를 앞당기는 길이다.

대안- ⑦ 선물 문화와 P2P 경제

화폐 영역의 확대는 다른 형태의 경제 순환, 그중에서도 특히 선물의 순환을 희생시켜 이루어진 것이었다. 모든 경제적 관계가 유료 서비스화되면서, 우리는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독립해 멀리 떨어진 익명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가 위축되면서 소외, 고독, 심리적 고통을 가져오는 주된 이유이다. 게다가 돈은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측정 불가능한 것들을 순환, 발전시키는 일에 적합하지 않다.

선물의 호혜경제가 중심이 되고, 개인과 개인이 직접 교환하게 되면, 필요한 것이 상품이든 서비스든 돈 그 자체든, 사람들은 엄청나게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를 충족하게 될 것이다. 직접 선물을 주고받는 모임, 선물과 필요를 이어주는 온라인 조직을 통해 돈 없이도 많은 필요가 충족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하는 공동체에 깊은 소속감을 갖게 될 것이다. 사용자 신용창출 시스템은 인터넷 기반의 P2P 대출과 함께, 기존 은행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없애줄 것이다. 지역 단위에서도, 글로벌 네트워크상에서도, 인정과 감사라는 측정 불가능한 '화폐'가 출현해 사회와 환경에 대한 기여를 서로 연결하고 보상해줄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일곱 가지의 각 요소는 자연스럽게 다른 요소를 이끌어낸다. 그러나 그 모두를 아우르는 하나의 핵심은 '성장의 종말'이며, 지구와의 새로운 관계를 향한 인류의 전환이며, 새로운 '사람들 이야기'이다. 결국 신성한 경제라 부르는 것의 기저에는 지구의 동반자가 되려는 우리의 열망과 모든 존재의 특별함과 상호연결성에 대한 새로운 영적 깨달음이 놓여 있다.

가슴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아이젠스타인이 제시한 대안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며, 아이젠스타인 개인의 천재적인 발견으로 나온 것도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 경제적 지대의 제거는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헨리 조지의 주장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것이며, 역이자 화폐는 '노화하는 돈'의 개념을 주창한 실비오 게젤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사회·환경 비용의 내부화는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부담금이나 배출권 제도를 살린 것이다. 또한 사회배당금은 최근 한국의 진보진영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기본소득과 같은 것이며, 일부 나라에서 실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경제·통화의 지역화 역시 우리 사회에서 생협이나

실험,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지역통화, 로컬푸드 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되거나 전개되고 있다. 또한 선물 중심의 호혜경제 역시 가라타니 고진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온 바다. 그 외에도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이나 사카르의 『프라우트 경제』, 가가와 도요히코의 『우애의 경제학』 등의 이야기와도 연결된다. 결국 그의 수많은 아이디어는 선배 학자들로부터 받은 지적 ‘선물’에 의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그의 대안의 핵심은 실비오 게젤의 아이디어를 통한 새로운 화폐 시스템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에 바탕한 호혜성, 선물의 정신을 살리는 데 있다.

아이젠스타인에게서 인상 깊은 것은 현재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착취와 갈등, 환경파괴와 빈곤의 세계화를 1% 부자들의 탐욕으로 돌려 그들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여전히 이분법적인 분리의 이야기이다. 그는 탐욕은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의 증상일 뿐이라고 한다. 가능한 한 많은 부를 소유하고 지배하고 가로채면서 냉담한 우주 속에 고립된 자아는, 그러나 연결된 존재의 풍요와 단절되었기에 결핍을 낳았고, 이것이 탐욕을 낳는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오히려 그들의 결핍을 치유해주고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깨달아서 스스로 나눔의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품격을 갖게 해주는 일이다.

또 하나 인상 깊은 것은 돈이나 물질을 나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물질주의를 이야기한다. 그는 ‘영적(spiritual)’이라는 말을 ‘물질적’이라는 말과 대립적으로 쓰지 않는다. 오히려 물질세계를 지금보다 더 신성한 대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한다. 관계와 순환과 물질적 삶 자체를 신성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해월 선생의 ‘경물(敬物)’이 아니었던가?

아이젠스타인의 탁월함은 새로운 경제학을 경제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인간성의 문제에서도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또한 드러난다. 그는 “개

인적 차원에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가장 큰 혁명은 자아의식과 정체성의 혁명"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서로 분리될 수 없고 모든 생명과 분리될 수 없음을 깨달아가고 있다"고 역설한다. 영적으로나 생태적으로나 우리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원리를 경제에 구현해야 함을 강조한다는 것이 이 책의 또 다른 미덕이다.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현실과 먼 이야기라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물론 지금 당장 최저임금도 못받는 열악한 현실에서 이 이야기는 멀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배의 항해에 비유해 보면 이것이 먼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배는 등대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등대를 향해 좌표를 찍고 가야 한다. 아무리 현실의 파도가 거세다 하더라도 가야 할 목표 없이 그 현실에 매몰되어 파도와 싸우고만 있다가는 결국 더 큰 파도나 예기치 않은 암초를 만나면 좌초하고 말 것이다. 배가 등대를 향하는 것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이 책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경제가 나아가야 할 비전은 물론 우리 문명의 배가 항해야 할 등대를 제시하고 있다. 피케티가 현실을 보여줬다면, 아이젠스타인은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통합적 사상가 아이젠스타인이 그리고 있는, 그리고 우리 가슴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뜨거운 열망을 품어안고 힘껏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이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글 김신양**

사회적경제의 관점에서 본 협동조합의 원외 이용 문제

‘협동조합은 필요의 딸’이라 한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뿐 아니라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초의 협동조합은 1750년대 프랑스의 프랑쉬-콩페 지역에서 치즈를 생산하는 이들의 생산자협동조합이었고, 영국 최초 협동조합은 런던에서 설립된 화재보험상호공제회사였다. 1808년 룩셈부르크에서는 정원사와 농부들의 농업협동조합이 만들어졌고 파리에겐 제과점노동자협동조합이 성행했다. 그리고 1900년대 초기 한국에서는 빚을 만드는 장인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
- ‘생협 비조합원 이용 관련 한살림 정책간담회’(2015. 6. 5) 토론문과 발제문을 토대로 다시 작성한 글.
 -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생산의 시대, 지역 차원에서 생산과 유통과 소비가 이루어지던 시기에는 이렇듯 생산자협동조합과 노동자협동조합이 활성화되었다. 그 이후 도시의 발달과 더불어 노동하는 이들과 그 가족을 위한 식료품 가게와 같은 소비자협동조합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1차산업과 2차산업이 줄어들고 서비스업이 발전하기 시작하던 시기,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 및 보건·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 또한 늘어났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협동조합이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협동조합운동은 시대의 산물이다. 그런데 그 시대를 읽고 대처하는 사람들은 단지 시대를 따르지만은 않았으며, 시대의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하여 때로는 새로운 것을 만들기도 하였다.

초기 협동조합은 생산자든 노동자든 소비자든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구와 동료, 이웃과 함께 만들었다.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점차 지역과 국경을 넘어 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목적 또한 나와 우리만의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더 넓은 지역사회, 혹은 남부 가난한 국가의 생산자와 북부 부유한 국가의 소비자가 함께 공정한 무역을 위해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으로까지 확장되기도 한다.

따라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원의 이용 문제 또한 이러한 협동조합운동의 변화라는 맥락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황 인식 : 사회적경제의 발전 속에서 협동조합운동의 변화와 사회성의 강화 요구

협동조합운동은 조합원 중심의 협동조합에서 점차 사회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경제위기와 자본주의 문제 속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기

대가 커지면서 사회적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어떻게 지역사회와 접점을 넓힐 것인가’가 중요한 사안이며 이런 맥락 속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등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협동조합의 출현을 넘어 기존 협동조합은 어떻게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최근 유럽 및 남미 등에서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 경우 2014년 7월 사회연대경제법이 제정되면서 1947년 제정된 협동조합일반법상의 비조합원이용 관련 규정이 변화했다. 그 이유는 첫째, 사회연대경제법은 전통적인 사회경제조직인 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체, 재단(cooperative, mutual, association, foundation, CMAF)과 더불어 최근 등장한 사회적기업을 아우르는 것으로 공통의 정체성을 규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회성이 강화되고 무엇을 일반기업과 다른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볼 것인가 하는 논의의 결과로 사회적 유용성이 강화되었다.

둘째, 유럽의 경우 경제위기 시 전통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이 기존 구성원만의 혜택을 고수하고 일자리를 지키는 데 급급하며 사회적 배제 문제를 소홀히 여김으로써 비판을 받았고, 연대경제 등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1인 1표라는 민주적 운영을 넘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부족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조직과 갈등을 겪은 후 사회적경제와 연대경제가 한 가족이 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이용 범위가 변화한 것이다.

반면 협동조합다운 협동조합의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예전에는 임의조항이었던 ‘협동조합리뷰’ 제도가 의무화되었다. 특히 소비자협동조합이나 은행협동조합은 의무사항이 아니었기에 굳이 리뷰제도를 활용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 모든 협동조합이 5년마다 시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협동조합이 얼마나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는지, 또는 어떻게 공동의 자산을 형성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 1947년 협동조합일반법 일반조항 제 3 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에 관한 특별한 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인 비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서비스**의 혜택을 받도록 용인할 수 없다”

◆ 2014년 7월31일 사회연대경제법 제 3 조

“특정한 유형에 해당하는 특별조항을 인정하는 조건하에서 협동조합은 **총매출의 20%** 한도 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제3자 비조합원이 협동조합 **활동**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한다”

결사체의 딜레마 : 자유의 확장

과거부터 결사체와 공동체는 공통적으로 결속력을 강화해야 하는 반면이로 인해 폐쇄성을 가지게 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우리만’의 결사체는 결국 폐쇄적인 집단, 자족적인 집단으로 사회성을 상실하게 된다(귀족협동조합의 경우가 그 예라 할 것이다).

협동조합은 ‘우리끼리’ 시작하였으나 ‘우리의 확장’으로 개방될 때 지역사회에 이를 수 있다. 그리하여 사회적경제는 ‘궁극적인 목적이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제1원칙으로 하고, 협동조합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고려(참여의식, concern)’라는 원칙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하는 ‘정체성’이 분명할 때 확장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

결사체는 자발적으로 결사한 사람들의 조직이다. 나와 너가 만나 우리라는 하나가 되는 조직이지만 그 우리는 1+1이 아니라 공통의 필요와 열망으로 만난다. 협동조합에서 결사체의 개방과 확장은 이렇듯 정체성이 유지됨으로써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나’만의 필요와 열망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인 무수히 많은 개인의 ‘필요와 욕망’은 시장이 충족시켜 준다. 그

래서 협동조합은 관계를 통해 호혜시장을 형성하고 서로 좋은 거래를 해 왔으며, 반면 일반기업은 경쟁시장을 만들어 가격으로 만나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이상 : 협동조합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공화국

협동조합은 필요에 따라 생산하고, 스스로 제한하며, 호혜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그러하므로 특히 소비를 조직하는 생협은 사실 소비자의 집합체가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매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조직된 소비자가 필요한 생산을 위해 통제할 뿐 아니라 생산자를 지켜주는 것이며, 생산자는 소비자의 살림을 지켜준다. 그런데 생협의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아무나 생협을 이용하게 허용한다는 것은 이 조직된 소비자집단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뜻이다. 또한 이렇게 될 때 결국 시장논리를 따르는 이기적인 소비자의 구매에 생협이 의존한다는 뜻이며, 이는 곧 생산이 소비(시장논리)에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의 이용에서 큰 문제는 바로 시장의 수요에 맡긴다는 것이다.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하자는 선의 뒤에는 함정이 있다. 소비자에게 마음에 들면 잘 팔린다는 것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 협동조합이 맡겨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협동조합으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이니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적 틀이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장에 있는 소비자들이라는 점, 시장의 수요와 움직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상황에 종속된다는 것은 시장의 수요에 의해 생산이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초기 협동조합의 이상은, 특히 소비자협동조합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자본가의 생산에 소비가 좌우되지 않고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생산하는 경제를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다. 시장을 소

비자, 즉 시민의 통제하에 두어 스스로 제한하게 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호혜관계로 만나는 협동조합의 확장으로 경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협동조합공화국의 이상이다. 에르네스트 뿌아송Ernest Poisson은 『협동조합공화국』이라는 책에서 소비자협동조합의 특성을 연구한 바 있다. 그는 소협이 이용고에 따른 분배, 조합원의 평등, 공정한 시장가격 판매, 양도불가한 공동의 순자산이라는 조직의 법칙을 통해 조합원의 확장, 사업종류의 확장, 노력의 조정에 따른 확장, 도매협동조합의 공업, 금융, 농업조직으로의 확장이라는 무한확장의 법칙이 적용됨을 들어서, 정치의 영역에서 공화국을 설립하듯 경제의 영역에서 협동조합공화국이 가능함을 역설하였다.

협동조합의 선구자들에게 협동조합의 이상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그 최종 목표가 아니라 협동의 확장을 통하여 다른 시장을 만들어 다른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경영의 문제는 이용의 문제

원외이용 문제가 제기되는 배경에는 협동조합 경영의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현재 생협이 봉착한 딜레마는 ‘정체성은 약화되는 반면 특정한 소비집단으로서의 폐쇄성은 강화되는 경향’이다.

‘우리’의 약화, 즉 결사체의 약화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개방과 확장만을 고려할 때 ‘비조합원의 원외 이용’ 문제는 본질을 은폐하는 수단이 될 뿐이다. 현재 전반적으로 생협의 이용율은 낮다. 이는 충성도가 낮다는 뜻이다. 그런데 누가 왜 이용하지 않는지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개선의 노력도 많이 보이지 않는다. 현재의 조합원이 이용하지 않는데 개방한다고 이용이 확대될까?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둔다고 참여가 활발해질까?

진정한 개방과 확장은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이용 못하는 이들(특히 비용 문제)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돈이 아니라 노동을 제공하여 출자와 구매 비용을 대신하게 하거나, 품앗이 노동이나 LETS를 활용하여 협동노동의 협동조합을 만들어가며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성(사회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조합원을 확대하는 것도 매장에서만이 아니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꾸러미나 급식 등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지역사회와 접촉면을 넓혀가면서 운영되었다면 이런 고민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경영전략에서도 핵심은 충실한 고객을 확보하는 방안, 핵심고객 만들기, 혹은 고객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이용고배당이라는 방식으로 협동조합이 만든 원칙이며, 이를 마일리지제나 쿠폰제 등으로 일반기업이 차용한 바 있다. 공정무역도 남부국가에 대한 문제, 불공정 무역에 대한 소비자의 자각에 호소한다. 다른 경제를 지향하는 조직은 가격경쟁력에만 의지하지 않고 고객을 확보하고 충성도를 얻어 가면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경영의 위기는 이용조합원의 확대와 이용계층의 확대에 극복하는 것이 보다 협동조합다운 방식이다. 그래야 사람들의 결사체로서 협동조합다운 운영이 가능하게 될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점점 또한 넓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전환은 중심축의 이동 : 시장에서 사회로

사회적경제는 사회의 관점으로 경제를 사고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사회의 관점으로 경제를 사고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경제활동의 중심에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환 이야기』에서 주요섭은 전환이란 ‘중심축의 이동’이라 했다. 이런 관

점에서 볼 때 협동조합이 진정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중심축을 시장에 두지 않고 사회에 두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 서로가 서로의 살림을 지켜주는 호혜시장을 형성해온 한국의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경우도 그러하다. 특히 한살림의 지난 30년간의 생명협동운동의 역사는 시장으로부터 사회로, 교환에서 호혜로 중심축이 이동해온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30년의 역사는 한살림생협을 포함해 한국사회 전체가 진정한 살림의 경제가 되도록 호혜성을 확장해 가는 새로운 생명협동운동의 시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한살림만의 것이 될 수 없으며, 다른 생협운동조직 및 건강하게 자라나는 많은 새로운 협동조합의 공동의 비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의 협동조합운동은 더욱 더 '사회'라는 중심축을 분명히 하여 구심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각 지역이 스스로 중심이 되도록 지역별 호혜시장 구축의 전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안에서 생산은 소비에 부응하고, 소비는 생산을 지키며, 노동은 자본에 종속되지 않는 새로운 관계가 발전할 것이다. 그러하니 생산자와 소비자는 더욱 굳건히 만나는 협동운동을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공동체의 연대를 위해 먹거리는 시장의 교환에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헝가리 출신의 학자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초기 제국시대의 교역과 시장』에서 우리가 경제에 대해 혼동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경제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물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의존하고, 사람과 자연이 상호작용하여 만들어지는 살림”으로서의 경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돈벌이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장의 교환만

이 경제라 할 수 없으며, 교환, 재분배, 호혜라는 세 가지 법칙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그 각각의 운영 원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특히 교환을 중심으로 한 경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변동가격에 따른 교환으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거래 파트너 간 명백히 적대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태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 적대감이 완화될지라도 교환에 따른 변동은 적대감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구성원 간 존재하는 연대의 토대를 보호하고자 염려하는 공동체는 생명의 사활이 걸린 문제를 두고 숨은 적의가 발전하여 먹거리로 인하여 생기는 심각한 걱정을 불러일으키도록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¹⁾

대형유통자본과 초국적인 자본에 의하여 먹거리가 투기의 대상이 되고 식량 난민이 증가하는 시대, 지역의 농민과 생산자들이 대형유통자본에 종속되거나 하청업체가 되어 자율성을 잃어가는 시대, 그리고 생명 및 생태 위기를 겪는 지금의 우리에게 폴라니의 글은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이 더욱 사회적인 기업으로 발전하는 길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방법이 아니라 더 많은 지역사회 주민과 더욱 단단한 협동의 관계로 만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협동조합의 원외 이용 문제도 시장 안의 협동조합이 아닌 협동조합 지역사회라는 다른 전망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이다.

1) '제도화 과정으로서의 경제', 칼 폴라니, 『초기 제국시대의 교역과 시장』, 1957.

비조합원 이용 문제, 생협은 어떻게 볼 것인가?

생협계의 논의 과제로 등장한 비조합원 이용 문제

생협 조합원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한 ‘비조합원 이용’(원의 이용) 문제가 최근 들어 생협계 내의 논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주로 비조합원 이용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지금의 생협법 관련 조항을 비조합원 이용 ‘허용’ 방향으로 바꿀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금지’의 원칙을 계속 지켜 나갈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는데, 구체적으로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현행 생협법 제46조의 개정 여부 및 방향과 관련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번 생협법 개정을 통해 예외 조항을 뒀서 비조합원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협법 46조 개정을 요구하는 주장들의 밑바탕에는 생협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 규모와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자리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도 ‘비조합원 이용 금지의 원칙하에 예외적 허용의 범위를 확대할 것인가’와 ‘비조합원 이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이용 범위를 정할 것인가’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현재 생협계 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주로 후자와 관련되어 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생협계 일부에서 생협법의 비조합원 이용 금지 조항을

폐지하고 비조합원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어 왔지만, 이것이 생협계 공동의 주요 논의 의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최근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일반협동조합의 경우도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생협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조합원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도 생협 차원의 공동 논의와 합의 과정 없이 생협법 개정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더해진 상태다. 현재 최원식 의원 발의로 “비조합원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생협법은 생협 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다른 협동조합들과 비교해서 형평성에도 반하는 만큼,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생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생협에서 비조합원 이용 확대, 특히 법적으로 비조합원 이용 허용을 원칙으로 하는 문제는 조합원의 이익과는 물론이고 생협 자체의 정체성과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어 보다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런 중요한 문제는 사전에 조합원에게 관련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고 의견 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칠 필요가 있다. 논의 과정에서 조합원 의견이 소외되거나 생협계 공동의 논의와 합의 과정 없이 생협법 개정 작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절차와 결과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비조합원 이용이 생협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대와 우려

사실 그 어떤 법이나 정책, 제도들도 완전무결한 것은 없고, 의도나 목적과는 별개로 결과에 있어 긍정과 부정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생협에서 비조합원 이용 허용·확대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비조합원

이용이 가지는 양면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생협계 내에서 ‘생협법상 비조합원 이용 금지’를 풀고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의 문건들은 다수 나왔으나 이것이 가지는 문제점을 우려하는 내용의 자료는 별로 없었다. 여기서는 비조합원 이용 관련 기존 논의 자료들을 참고하고 필자의 개인 의견을 보태 비조합원 이용에 대한 찬반 각각의 입장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비조합원 이용 허용·확대에 대한 긍정적 기대

첫째, 생협에 대해 비조합원들이 이용을 확대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 비용을 낮춤으로써 조합원에게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서 생협 사업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비조합원에게는 이용에 비례한 배당을 할 필요가 없는 만큼, 이들의 이용 확대로 발생한 수익을 조합의 공동 자본으로 적립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생협 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비조합원 이용 금지를 풀어 일반 소비자들에게 생협 이용 기회를 넓힘으로써 생협의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 경험이 늘어나게 되면 생협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아지고 조합원 가입 확대로도 이어질 것이다.

넷째, 현행 생협법에서 비조합원에 대한 홍보의 허용기간을 3개월로 제한함으로써 수시로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불편과 이를 응대하는 생협 조직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데, 비조합원 이용을 허용하고 확대하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다섯째, 생협의 비조합원 이용 확대로 생협과 여타 사회적경제조직들(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사업단 등)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협동조합 생태계도 활성화될 것이다.

2) 비조합원 이용 허용·확대가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첫째, 협동조합은 조합원 결사체가 중심이 되어 주체적으로 책임 있게 운영해가는 곳인데, 이런 조직적 특성을 이해하고 목적에 동의하지 않은 비

조합원들에게 조합 이용을 허용·확대 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

둘째, 비조합원 이용 확대는 조직을 사업중심주의로 흐르게 해 비조합원과의 거래에 따른 이익 확대라는 유혹에 빠지게 하고, 조합원 또한 이기주의에 빠져서 비조합원의 조합 가입 문턱을 높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도록 함으로써, 결국 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과 차별성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

셋째, 이용의 편익을 누리지만 조합 운영에 대한 공동의 책임의식은 없는 비조합원들의 이용 비중이 커질수록 이들의 무임승차와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조직의 상호성은 약화되고 그만큼 불확실성과 리스크는 커져서 결국에는 조합원 공동의 이익과 자산까지 위협할 수 있다. 소비자 권리 의식의 향상 속에서 비조합원 이용자들의 영향력(온라인 여론화, 소송 등)이 커지는 점 또한 생협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넷째, 비조합원 이용에 따른 수익으로 조합의 공동자금 비중이 커지게 되면 조합원 요구에 대한 조직의 관심과 책임성은 약해지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조합원에 대한 경영자 권한이 강화되어 조합원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다.

다섯째, 비조합원 이용 확대가 조합원 가입으로 이어지기보다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동기를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기존 조합원까지 이탈해서 단순 소비자로 남을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여섯째, 비조합원 이용 확대로 생협의 비영리성이 약화되면 현재 타 협동조합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받고 있는 생협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요구를 적극 제안할 수 있는 명분도 약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조합 외부 사람(비조합원)들의 이용을 대가로 기존의 조합원과 조합이 이익을 얻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비조합원을 조합 경영 개선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 차원의 질문도 남아 있다.

생협법 비조합원 이용금지 조항 개정 논의에 대한 검토

생협을 포함한 협동조합에서 비조합원 이용 문제는 해당 사회의 여건과 조합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만, 현행 생협법의 비조합원 이용금지 조항에 대한 개정의 논거로서 타 협동조합 법과 비교하는 것은 앞선 내용과 논의 차원이 다른 만큼 별개로 다룰 필요가 있다.

1) 비조합원 이용을 허용하는 타 협동조합법처럼 생협법도 그런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먼저, 농협, 신협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다른 협동조합들은 이미 법에서 비조합원 이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최근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 이어 일반협동조합들도 비조합원 이용을 허용하기에 이르렀는데²⁾ 유독 생협에 대해서만 비조합원 이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차별인 만큼, 비조합원 이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국내 대표적 협동조합으로 생산자이자 사업자인 농업인들이 만든 농협이나 충분한 예탁금 확보로 보다 나은 대출 조건을 유지해야 하는 신협을 두고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위치에 있는 조합원들이 만든 생협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비조합원 이용이 가지는 성격도 농협이나 신협과 생협은 다른 측면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농협과 신협이 비조합원 이용을 허용하게 된 과정과 그것이 가져다 준 결과를 살펴보는 것도 생협의 비조합원 이용 문제를 다루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물론 이 경우에도 '조합원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라는 단서 조항을 두고 비조합원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협은 농민들이 협동조합의 원리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조합원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국가 주도의 조직화 과정을 거쳤으며, 농협의 목표도 농업 종사자의 이익 증진과 농업 발전보다는 정책적으로 전체 농민을 위한 포괄적인 농촌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에다 준조합원 제도를 통해 비조합원을 조직 내부로 받아들였다. 이런 배경에서 농협은 ‘조합원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라는 조건을 달아 비조합원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오늘날 농협은 농업 관련 판매 사업보다 신용사업의 비중이 커졌고, 농민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은 약화되었다. 현재 농협의 신용과 경제사업을 분리시킨 것도 이런 점들이 크게 작용하였다.

한편, 신탁의 경우는 서민들의 고리채 문제 해결과 생활 자립을 실현하기 위한 민간의 자발적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 악화된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 통폐합과 재정비, 국가의 공적자금 투입 등이 이루어졌고, 신탁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비조합원 이용 문제가 함께 다루어졌다. 1998년에 비조합원 이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1999년 예탁금과 적금, 2003년 대출금으로 점차 확대되어, 지금은 당해 신규대출 규모의 1/3 내에서 비조합원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지금 신탁은 비조합원에 대한 부실대출 사고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기존 조합원에 대한 피해가 이어지자 비조합원 대출을 더욱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으로 비조합원 이용이 허용된 일반협동조합과 생협을 직접 비교하는 데서도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 설립 요건상 5명 이상의 조합원을 두도록 한 기본법상 협동조합들과 조합원 300명과 출자금 3천만 원을 설립 요건으로 하고 있는 생협은 생존 여건과 자립의 토대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만큼 비조합원 이용 허용 문제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2) 생협법의 비조합원 이용 금지 조항을 없애고 개별 생협 정관에 관련 내용을 담도록 해 자치를 실현하자는 주장에 대해

한편, 비조합원 이용을 포함해 조합의 사업 이용을 국가가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자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비조합원 이용의 법적 금지 조항을 없애고 정관으로 생협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협동조합을 지켜내고 자립과 자치의 원리를 실현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만큼 조합원 이용에 대한 결정권을 생협이 가져야 한다는 것도 타당한 주장이다. 하지만 비조합원 이용 문제를 법이 아닌 개별 생협의 정관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비조합원 이용을 금지하는 ‘생협법 46조의 철폐’와 ‘비조합원 이용 확대’, 그리고 ‘협동조합의 자치 원리 실현’ 사이에 상호 연관성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생협법의 목적과 내용이 생협의 자율과 자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간섭의 측면에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생협 영역의 질서 유지와 조합원 보호의 측면에 맞춰져 있는지, 비조합원 이용 금지 조항은 이 중 어느 쪽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관련해서 우리나라 생협법의 제정 및 개정 과정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생협은 1980년대 이후 화학농법으로 인한 농업생태계 붕괴와 수입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촌 및 농업경제 붕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먹을거리 안전성의 위기라는 사회적 문제를 바탕으로 친환경유기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통해 시작되고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민간 자율적 운동으로 시작해 활동해오던 우리나라 생협은 1998년에 이르러서야 생협법이 제정되어 법적 기반을 갖게 되었다. 제정 생협법 속에는 당시 한국 생협들이 가지고 있던 특성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었다. 생협법 제정 당

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차원에서 생협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함께³⁾ 연쇄점 등 유통업체의 반발 등으로 생협의 사업 범위는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과 그 가공품, 환경물품의 구입 공급과 가공 공급으로 한정되었다. 따라서 이런 한계로 인해 생협법 개정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어 왔고, 2010년 생협법 개정을 통해 사업 내용이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면서도 소수가 협동조합을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자좌수 제한과 임직원 겸직 금지 조항을 두기도 하고, 생협 영역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을 넣기도 했다. 또한 비조합원(조합원 외) 이용 금지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은 개정 과정에서도 그대로 두었다. 다만, 개정 생협법에서는 홍보를 위한 견본품 공급이나 공익 목적의 행사 참여, 학교 협동조합에 대한 물품공급 등에 대해 예외를 두고 허용하되, 홍보 목적의 비조합원 이용 기간을 1년에 3개월 이내, 이용 규모는 전년도 총 공급고의 5/100 범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조합원 이용 금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 허용의 범위를 어느 수준으로 정하느냐와는 별개로 생협법 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비조합원 이용을 허용하되 그 범위와 수준을 개별 생협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논의의 성격과 차원이 다른 문제다. 후자의 경우 우려되는 점 몇 가지를 짚어보자.

먼저, 법에서 비조합원 이용 금지 조항을 없애고 개별 생협의 정관상에 담도록 맡겨둘 경우 생협 간 경쟁을 촉발시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즉 법에서 비조합원 이용 금지 조항이 없어지고 허용이 확대될 경우 고객화 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생협 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규모가 작거나 조합원 결속력이 약하거나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

3) 생협법 제정 논의는 1994년 당시 대통령 직속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생산농가와의 직거래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일환으로 생협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 못한 생협들은 한층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생존 자체가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비조합원 이용 확대가 협동조합 생태계를 보다 풍성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비조합원 이용의 경쟁적 확대와 함께 유사 생협들이 등장하여 생협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조합원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은 의료생협들이 이미 경험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2010년 생협법 개정으로 46조에 ‘100분의 50 범위에서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지난 5년간 의료생협이 약 네 배가량 급증했는데, 이 과정에서 영리 수단으로 생협의 틀을 이용하는 유사 의료생협들이 난립해서 선량한 의료생협들까지 피해를 보는 일들이 발생했다.⁴⁾ 최근에도 사무장 병원의 수백억 원 규모 횡령 사고가 언론에 오르내리는 등 생협이 탈법과 불법의 부정적 이미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유사 생협들의 난립으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생기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 자연스럽게 생협에 대한 법적 규제와 국가의 개입을 불러오는 명분을 주게 되고, 결국에는 생협이 강조해 온 자율과 자치의 가치 또한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

생협은 비조합원 이용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사실 비조합원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다른 협동조합들의 경우도 법에서 ‘조합원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라는 단서 조항을 둘 만큼, 비조합원 이용은 조합원 이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소비 과정을

4) 이런 부작용을 인식하고 많은 의료생협들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했으며, 현재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생협법 개정을 통해 조합의 사업 이용범위를 조합원으로 제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통해 협동조합과 만나는 생협의 경우 특히 그렇다. 따라서 생협에서 비조합원 이용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와 관련한 정보들이 조합원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조합원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다르게 말하면 생협 차원에서 비조합원 이용 문제가 제기될 때, 이것이 사회적 요구인지, 생협 조합원의 요구인지, 경영자의 요구인지, 또 다른 누구의 요구인지를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조합원 이용 문제처럼 조직적으로 중요하면서도 그 결과의 불확실성이 높은 사안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와 같은 조직의 정체성과 사명을 스스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협 조직별로 지향하는 가치와 사업 전략, 조직 운영 시스템의 특성 등에 따라 비조합원 이용 확대에 대한 인식과 접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한국 생협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핵심 사업의 내용에 대한 검토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⁵⁾ 잘 알려져 있듯 한살림을 비롯한 국내 주요 생협들은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직거래 사업을 통해 성장·발전해 왔다. 그런데 친환경유기농산물의 경우 일반 가공품이나 생활용품 등과 비교할 때 수급에 있어 비탄력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⁶⁾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은 자연의 생명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주문 즉시 생산이 불가능하고 투입 대비 산출을 바로 계산하고 예측하기도 어렵다. 그만큼 수요 변화에 따른 대량 주문생산으로 탄력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가공품이나 전자제품 같은 일반 소비생활재를 주로 취급하는 소비자협동조합들과는 사업의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친환경유기농산물을 생산, 출하하고 공급하고 있는 한살림 같은 생협들의 경

5) 해외의 성공적인 생협 모델에 대한 학습과 참고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생협의 현실에 적용할 때는 신중함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6) 물론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해서 가공품을 생산하는 경우라면 사정은 또 다를 것이다.

우 비조합원 이용을 허용·확대할 경우 물품 이용을 둘러싸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 경합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비조합원의 존재가 조합원에 대한 ‘이익 제공자’가 아니라 조합원과의 ‘이익 경합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가 사전 약정을 통해 책임생산과 책임소비를 실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와 농촌이 공존 공생하는 것을 목표로 해 온 한살림의 경우 비조합원 이용 확대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호 신뢰에 균열을 일으키고 ‘생산과 소비는 하나’라는 조직의 정체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비조합원의 생협 이용 확대 시 더욱 주의를 기울일 부분이 있는데, 생협 자체가 비조합원 이용 확대로 인해 자본주의 시장체계 속에 깊숙이 편입되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비조합원 이용 허용·확대로 고객화된 일반소비자들이 자본주의 시장의 변화무쌍한 가격구조와 일상적으로 비교하면서 생협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경우, 협동의 가치로 소비를 조직화하고 생산 영역을 재구성하는 협동조합운동의 오랜 꿈에서도 멀어질 뿐만 아니라 생협의 운동성마저 퇴색시킬 수 있다.

국내 현실로 돌아와 보면, 기후변화와 시장의 구조적 요인 등으로 농산물의 생산량과 가격이 해마다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친환경유기농산물을 주요 사업으로 한 한살림을 비롯한 한국 생협들은 생산과 소비를 연계한 직거래 체계를 만들고 자본주의 시장과는 다른 방식의 협의적 가격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대안의 경제 영역을 만들어 왔다. 지난 2010년 배추 값 파동 당시 생협이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자로 크게 주목받았는데, 사실 생협이 이런 역할을 해낼 수 있었던 비결은 규모의 효율성에 기반한 비용절감 측면보다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체계를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나아가 (자본주의 시장메커니즘과는 다른)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동의 대안경제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해 온 데 힘입은 바가 크다. 이 점에서 생협이 가치 있게 추구해야 할 역할은, 좋은 품질의 재화와 서비스를 조합원에게 적정 가격으로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일, 협동적 소유와 민주적 운영의 원리를 잘 실현하는 일은 물론이고, 자본주의 시장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경제영역을 협동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데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일들은 정체성과 책임성을 긴밀히 공유하는 현명한 조합원들의 결집된 힘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이런 역할을 경제적 거래관계 수준으로 만나는 비조합원 이용자들에게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생협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공공적 사회실천 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적극 대응하는 길도 마찬가지다. 지난 1995년 맨체스터 대회에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다룬 ICA 성명에서도 ‘조합원 중심으로 돌아가서, 조합의 정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조합원 가입률이 줄어들고 조합원당 물품 이용률도 낮아지고 있어 생협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비조합원 이용 허용·확대로 연결시키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상식적이지만 협동조합을 생존케 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힘은 결국 조합원으로부터의 신뢰와 책임 있는 결속에서 나온다. 협동조합의 미래 또한 조합원의 절실한 필요와 열망을 얼마나 단단하게 조직해내느냐에 달려 있다. 비조합원 문제도 원외가 아닌 원내 이용 확대의 관점에서, 이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정성을 다해 안내하고 충실한 교육을 통해 조합원으로서 정체성과 책임성을 공유·확장해가는 방향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동학여신들, 매의 눈으로 역사를 보다



- 사회 및 정리** 이나미(이나) - 방송통신대 전임연구원
- 필진** 고은광순(고은) - 한의사, 청산편 집필
김정미서(김정) - 치유사, 명상지도사
리산연숙(리산) - 인권운동가, 총무
박석흥선(박석) - 교사, 북한편 집필
변김경혜(변김) - 시민활동가, 천안편 집필
임최소현(임최) - 개벽신문 편집장, 서울·경기편 집필
한박준혜(한박) - 시민활동가, 대둔산편 집필
- 토론** 이영재(이영) -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그녀들은 ‘동학언니’라 불렸다. 그러나 ‘언니’라는 일상적이고 친근한 용어는, 그녀들을 표현하기엔 원가 많이 부족하다. 그녀들은, 일상을 뛰어넘는 ‘비상한’ 사고를 쳤다. 나는 그녀들을 여신이라 부르고 싶다. 요즘 흔히 말하는 강마르고 예쁘다는 의미의 여신이 아니라 위풍당당함과 신령함이 훅 끼치는,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네와 같은 여인들. 그녀들은 마침 ‘Women Cross DMZ’ 행사에 참여하고 오느라 모두 흰 옷을 입고 있었다. 막 하늘에서 내려온 여신들의 포스가 느껴졌다.

이들은 총 13권으로 구성된 ‘여성동학다큐소설’의 필자 및 참여자들이다. 이들을 만나 소설과 그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모심과살림연구소의 동학공부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이영재 님도 함께 자리했다.

이나 > 안녕하세요. 오늘 WCD 행사 마치고 오시느라 다들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여성동학다큐소설’을 쓰게 된 경위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고은 > 제가 충북 청산으로 이사 온 후 해월의 외손자인 정순철에 대해 알게 된 것이 그 첫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 소설은 해월의 딸인 용담 할미를 주인공으로 해서, 아버지 해월, 해월의 딸, 그 아들 정순철 이렇게 이어져요. 정순철은 동요 <짜짜꿍>과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로 시작하는 <졸업식 노래>의 작곡가예요. 방정환과는 바늘과 실 같은 사이로 어린이운동에 전념했던 분인데, 월북하는 바람에 잘 안 알려졌죠. 그래서 그에 대해 세상에 알려야겠다 생각하고 박맹수 교수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경



상도, 북한 지역 등 전 지역의 동학 얘기를 써보라고 해서 작가를 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인연 닿는 대로 모으게 된 것이 15명이고 그중 12명이 글을 쓰게 되어 총 13권이 나오게 되었어요. 여기에 오지 못한 분으로는, 필자인 김미경, 김현옥, 명금혜정, 박이용운, 유이혜경, 이장상미, 정이춘자님과 자문을 해주신 조임정미님이 있어요.

박석 > 저의 경우는 고은 선생님이 저의 명상 선생님이라 참여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고은 선생님이 제게 혹시 동학에 관심 있다고,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모두 웃음). 근데 제가 외람되게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전 북한 지역을 맡았는데 그 이유는 북한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역사 선생님이 선물한 『백범일지』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북한 편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되었죠.(모두 웃음)



박석흥선

변김 > 저의 경우는, 어느 날 고은 선생님이 김산의 『아리랑』이라는 책을 보고 계셨는데 그 책을 보니 나의 20대 때의 감정이 다시 떠오르면서 울컥했어요. 제가 그 책을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소설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저는 천안편을 썼는데, 윤웅렬이 300명의 민보단을 만들어 옥천과 천안의 주민을 없애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당시의 신분제에 대한 내용, 지식인의 고민에 대한 것들을 다뤘어요.

리산 > 저는 청주에서 9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9인회’라는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분이 고은 선생님 덕에 놀러가자고 해서 갔다가 참여하



리산연숙

게 되었어요. 저는 그전부터 보은취회 행사에 해마다 갔었고 동학에서 여성들의 발자취를 찾아보고 싶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인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동학공부 같이 하고 소설은 2장까지 썼는데 공부를 더 해야겠다 싶어서 소설은 포기하고 총무 일을 맡게 되었어요. 리산이란 이름은 지리산에서 따온 거예요. 저는 본래 실천여성학을 공부했는데 너무 서구중심적이어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

래서 동학에서 한국페미니즘의 기원을 찾고 싶었어요.

고은 > 리산은 어릴 적부터 남들이 못 보는 귀신을 봐요. 드라마 <주군의 태양>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그래서 본인은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죠. 같이 수련을 갔을 때, 갑자기 병의가 되어서 평평 울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영이 한을 풀고 떠나갔죠.

김정 > 저는 박석 선생님과 같이 명상을 하다가 고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이 동학에 관심 있냐고 하셔서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저는 현재 치유사로 소설 팀과 함께 하고 있어요.

고은 > 김정 선생도 집필을 중간에 포기했지만 동학에 대한 애정이 깊고 또 유난히 영이 맑아요. 그래서 작품은 안 쓰더라도 우리와 같이해요.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김정미서

어디 아플 때, 인도말로 ‘딕샤’라고 하는데, 딕샤를 보내줘요. 그러면 기운이 나는 것 같고. 한의사보다 나아요.(모두 웃음)



변김경혜

변김 > 수련을 처음 같이 할 때, 명상하고 있는데 김정 선생에게 갑자기 ‘그분’이 오셔가지고(모두 웃음) 진동하고, 그게 커져서 막 뛰어다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저 사람 머리가 어떻게 된 게 아닌가 했어요.(모두 웃음) 그러나 나중에 이해하게 됐죠. 저희는 매달 일정 분량을 쓰고 난 다음 다 같이 모여서 워크숍을 했는데, 그때 김정 선생님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줬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애를 키워야 하니까 밤 시간밖에 소셜 쓸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게 매일 밤낮으로 일하니까 몸이 매우 힘들었죠. 그때 몸에 딕샤를 보내줘요. 그러면 정말 치유가 돼요.

한박 > 저는 공주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신문에서 고은광순 선생님이 공주 계룡면에 한의원을 열었다는 글을 봤어요. 저한테 고은 선생님은 ‘로망’이었어요. 제가 학생 때 여학생회 활동을 했는데 당시 고은 선생님은 호주제 폐지운동으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런 대단한 분이 공주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아줌마들하고 ‘저길 가자’ 했죠. 그렇게 불시에 찾아갔는데 선생님이 환대해주셨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청산으로 이사 가신 후 또 찾아뵈었어요. 그때 신기하게도 선생님이 제 남편 책



한박준혜

을 보여주시며 동학소설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에는 아무 말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책이 남편 책이라고 했고 그래서 글쓰기를 권유받았죠. 그런데 제가 글 솜씨가 없어서 저는 안 쓰고 다른 분을 소개 하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저도 참여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해서 저도 결국 같이 쓰게 됐어요. 저는 대둔산, 연산의 동학 이야기를 썼어요. 남편 이 구전조사를 했을 때 따라갔었고 그때 들은 이야기가 책의 내용 일부로 들어가요.



임최 > 저는 고은 선생님 대학후배인데 제 동창이 저를 추천해서 같이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안 한다고 하고 다른 분을 추천했어요. 그분은 탈북민이었는데 결국 안 하게 되고 제가 하게 됐어요. 그 결정적 계기는, 제가 명리학을 하는데 당시 갑오년 운수를 봤더니 제가 소설을 쓴다고 나오는 거예요. 또 제가 꿈 분석도 하거든요. 꿈은 가슴속 진면목을 많이 드러내요. 어느 날 꿈에 전 봉준처럼 생긴 사람이 나타나서 저에게 뭔

가를 붙였는데 거기서 나비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 꿈을 분석해보니 제가 창작욕에 불타는 사람이 된 거였어요. 결국 그 꿈에 나타난 나비가 소설의 중요한 모티브가 돼요. 제 소설에, 우금치 전투 때 손병희가 어떤 아이한테 나비 노리개를 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고 그 녀이 손병희의 셋째 부인인 주옥경에게 가요. 전 서울, 경기 지역 그리고 손병희와 주옥경 여사에 대해 썼어요. 동학이 천도교로 바뀌어서 3.1운동까지 가는 내용을 다뤄요. 그리고 페미니즘 시각에서 쓰다 보니 위안부 얘기도 나와요. 나비 모티브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나비 기금'으로까지 이어지죠.

이나 > 다들 전문 소설가는 아니신데, 글 쓰시는 데 애로사항은 없었나요?

참석자 모두 > 엄청 많았죠.

고은 > 제가 소설 쓰자고 권할 때, 다큐소설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꼬드겼어요. 박맹수 선생님이 마침 일본 자료를 많이 갖고 계시고 그게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거니까 그런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을 소설의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약간의 창작만 더하면 어렵지 않다, 그렇게 유혹했죠.

이나 > 저나 여기 계신 이영재 선생님과 같은 연구자들은 역사소설, 예컨대 『녹두장군』 같은 것을 읽으면 인용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이 동학다큐소설도 그런 면에서 연구자들이 읽으면 인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 것 같아요. ‘주’가 달려 있으면 더 좋겠는데요.



고은 > 저는 주를 많이 달았어요.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저도 이 소설이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연구자들이 심상훈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심상훈은 조병갑이 고부에서 유입할 때 도움을 주고, 또 해월을 잡아들인 사람이예요. 그리고 손병희가 “나를 한번에 죽이지 못하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고 말한 대상도 심상훈이예요. 스토리텔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쪽 이어지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경상도 이야기가 동학 연구에서 그동안 너무 다루어지지 않았어요. 기포령이 9월에 나오는데 경상도는 8월에 벌써 다 초토화돼

요. 일본이 해저를 통해 끌고 온 전선줄 때문이에요. 부산에서부터 전선줄을 끌고 올라와서 낙동강 따라서 세워가면서 동학도하고 부딪히고 죽이고 생매장하고 그러면서 다 초토화돼요. 경상도 동학도들도 엄청 싸웠어요.



이영 > 동학에서 페미니즘 뿌리 찾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요. 사실 동학의 여성관과 어린이관은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훌륭한 것들이죠.

고은 > 저는 개인적으로 향아설위(벽이 아닌 나를 향해 제사를 지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호주제 폐지운동을 열심히 했을 당시 제일 벽에 부딪혔던 게 부계혈통제에 대한 집착이었거든요. 호주제 폐지운

동은 시스템을 고친 운동이었다면, 그 후 문화적인 것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중에 제일 뿌리 깊은 것이 제사예요. 제사는 남성중심의 세리머니고 여성을 도구로 수단화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호주제는 제도로서 공적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이지만 제사는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 제사 거부운동’을 하면서 내 조상이란 것은 남자 쪽만 아니라 남녀 양계로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양쪽으로 조상이 한없이 많아지니까 결국 나 자신을 소중히 하자, 그것이 바로 조상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향아설위가 그것과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미 120년 전에 해월이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죽은 조상한테 제사 지내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 위패를 세워라, 나 자신을 존중해라, 그것이 해월의 마지막 설법이었다고 해요. 해월의 고갱이가 녹아있는 마지막 말인 거죠. 그래서, 동학이라는 게 정말 여성들이 찾는 진화한 사상을 갖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도교 결혼식에서는 신랑신부가 동시에 입장하잖아요. 이것이 천도교 시작부터 행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앞서간 거예요. 지금도 드센 남녀들이나 하는 행동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20세기 초에 벌써 천도교는 그렇게 한 거죠.

이영 > 리사 선생님도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동학에서 한국적 페미니즘의 가치를 발견하셨나요?

리사 > 저는 페미니즘을 소수자 관점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해월 선생은 페미니즘을 넘어서 에코페미니즘을 주장하셨더라고요. 저는, 해월 선생이 ‘땅에 침 뱉지 마라, 뜨거운 물 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감수성이 굉장히 놀라워요. 그런데 대학에서 실천여성학 가르치면서 동학 얘기를 하는 곳이 없어요. 늘 서구 얘기만 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없었겠냐구요. 평등사상이. 저는 한국 페미니즘의 기원이 동학사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밝혀내는 논문을 쓰는 게 올해 목표예요.

이영 > 동학이 삼대 교주로 넘어오면서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단발령 때도 먼저 나서서 머리를 자르고, 일진회와도 결합이 되잖아요.

임최 > 그래서 친일파란 소리도 많이 듣죠. 친일적 요소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분들 중에 애국계몽운동 했던 분들이 많고 따라서 그건 결국 애국계몽운동이 갖는 한계이기도 해요. 교육을 많이 시키고 인재양성을 해서 일본을 앞질러 가야 한다, 일본에게 진 것은 우리 역량이 부족해서이고 따라서 역량을 길러야 한다 등. 그런데 어떤 천도교인 분은 친일을 가장한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나는 친일파로 가장하고 내 일을 하겠다’라고요.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큰돈을 군관학교나 임정 건설에 희사해요. 결국 3.1운동 일으킨 것은 천도교 세력이었잖아요. 그때 쓰인



돈이 모두 천도교에서 나왔어요. 기독교도들도 돈 달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 5천원. 그 돈 안 주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결국 그 돈을 다 주고 3.1운동 했죠. 사실 3.1운동 전부터 천도교 측은 거족적인 시위 계획을 계속 세웠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친일적인 요소를 가장하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 항일운동을 한 거죠.

이영 > 동학과 관련된 새로운 가치들을 발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웠을 것 같아요. 조사하다 발굴되는 것을 찾아내면 되니까요. 그런데 동학에서 천도교로 넘어오는 과정, 친일 행위, 이런 것들과, 또 걸리는 것이 황해도 지역의 경우 동학에 적대적인 안중근을 다룰 수밖에 없으셨을 텐데, 안중근이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절대적 지위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셨는지.

박석 > 안중근은 양반이고 동학과 대척하죠. 포수들을 데리고 동학군과 싸워요. 그런데 제 고민은 안중근보다 김구였어요. 김구가 생각보다 동학과의 관련성이 별로 없어요. 기독교로 교육사업을 하다 상해로 넘어가죠.

저는 있는 사실 외에 더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고 사실에 충실하게 썼어요. 제가 북한 편을 쓰면서 다뤄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관심을 더 깊게 갖지 않았어요. 이것도 또 파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었던 거죠. 저는 시기를 통시적으로 길게 잡고 대신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안중근과 동학군이 싸우는 장면도 나와요. 실제 기록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썼어요. 일본 기록과 안중근 전기와 기타 다른 자료를 가지고. 당시 안중근이 17살인가 그랬어요. 실제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썼어요.

고은〉 그런데 동학접주 중에도 양반이 많아요. 경상도 동학접주가 쓴 일기를 보면, 접주의 70퍼센트가 양반이에요. 이것을 보면 당시 양반들 중에서도 유교 가지고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변화시키지 못하리라 생각한 사람이 많았던 거죠. 재산도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동학에 경도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그동안 외면되어 왔죠.

박석〉 동학농민혁명은 지금으로 치면 반체제 지식인과 농민·노동자와의 결합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런 게 현대사에서처럼 예전에도 있었던 거죠. 양반들이 참여하지 않았으면 혁명이 조직적으로 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임최〉 전봉준도 훈장 출신이잖아요.

변김〉 목천의 대접주는 이희인이란 사람인데 세종대왕의 후손이에요. 대단히 뼈대 있는, 진골 중의 진골 집안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동학을 한 거죠. 거기다 재산도 많아요. 소위 ‘끈 떨어진’ 양반이나, 아니면 서열처럼 능력은 출중한데 신분적 한계 때문에 권력 진출을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지식인들의 고민을 똑같이 한 거죠. 반면 윤영렬, 윤웅렬 형제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윤웅렬의 아들이

바로 윤치호예요. 윤웅렬이 윤치호에게 일본에 가서 학문하고 오라고 하잖아요. 당시는 인사 적체가 심각했고, 그래서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았죠. 윤영렬은 학식이 출중하지는 않았으나 권력에 대한 욕심이 커서 그 방도를 찾은 게 동학도들을 제거하고 공을 세우는 거였죠. 이것이 변혁기에 나타나는 또 다른 지식인 계급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영 > 소설에는 인물들이 다 실명으로 등장하죠?

변김 > 전 실은 그것이 고민이에요. 말씀드린 윤씨 집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반대로, 김해 김씨 집안처럼 삼대가 같이 동학을 하다가 나중에 한 날한시에 몰락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의 경우에는 관련 사료가 하나도 없어요. 향토사학자나 지역 주민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집 안에서 굉장히 쉬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너무 많아요.

고은 > 동학 사건에 대해 사사절 시와 노래로 후대에 남기고 싶어 한 흔적들이 있어요. “개남아 개남아 왜 죽었니” 등. 경상도에도 “하배가 이하배가 왜왔니 조동아 홍조동아 왜 죽었니” 이런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노인의 증언인데, 자기 어렸을 때 동네 골목에서 꼬마들이 그 노래를 불렀대요. 이걸 틀림없이 그 사람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한 여성들이 그렇게 노래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가르친 거죠. 그 사실이 잊혀질까봐.

변김 > 강창일 의원에 의하면 이런 노래를 구술로 정리해 책을 낸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일제 때 부친이 친일을 해서 본인이 그것에 대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고민되는 것이, ‘일본이란 나라를 어떻게 볼 것인가’예요. 강창일 의원과 박맹수 교수님도 해주신 얘기인데, 전봉준이 붙잡혔을 때 일본 막부 세력이 와서 ‘당신을 꺼내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막부 세력과 메이지 세력이 다르고, 그 세력 내에서도 여러 다양한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제가 조선을 강점했을 당시 주요 인물들을 하나하나 다 따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행정체제로 봤을 때 당시 국방부장관, 문화부장관이 다 다른 계열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이나〉 일본인들이 왜 전봉준을 찾아왔다고 생각하세요?

변검〉 당시 막부 세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 메이지 세력에 의한 일본의 근대화는 결국 동아시아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이것은 또 아시아의 본래 전통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강창일 의원에 의하면 그런 이유로 그들은 전봉준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었대요.

이영〉 한박 선생님께 여쭙보고 싶은데요, 남편 분이 동학 구전들을 수집할 때 같이 다녔다고 하셨잖아요. 구술을 해주는 분들은 동학도의 손자녀뻘이 되나요?

한박〉 그런 셈이죠. 마을에 가면 가장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동네에서 전해들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만 하더라도 동학에 대해서는 좀처럼 얘기를 안 하셨대요. 동학혁명 때 너무 많이 피를 봤고 또 한국전쟁 때에도 좌우대립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는 거죠.

저는 대둔산 얘기를 주로 썼는데, 특히 전쟁의 후방에서 활동한 여성들 얘기를 썼어요. 후방에서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하는 얘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기록에 남기지 않아요. 그러나 구전되는 얘기들은 결국 후방에 있는 마을의 얘기라서 그런 일상의 얘기들이 남아 전해져요.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 날랐거나 소를 잡았던 얘기 등. 예를 들어 '시루떡 마을'

이라고 있는데 이 마을은 동학혁명 때 시루떡을 만들어 날라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리고 연산 전투가 3년 전에 일본 교수에 의해 재조명됐어요. 기존의 틀에 박힌 사고는 우금치 전투를 마지막으로 동학군이 패배했다는 것인데 연산·대둔산 전투를 보면 그 다음 해에도 전투가 계속 이어져요. 동학군은 도망간 게 아니라 다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대둔산으로 간 거예요. 대둔산에 있으면서도 고위관리 목을 치거나 하면서 계속 투쟁을 해요. 저는 ‘의’를 세우는 과정에서 실패란 없다고 봐요. 이때 동학의 힘이 이후 3.1운동을 일으키고 임정을 세우게 하고 해방을 맞이한 후 우리 힘으로 인민위원회를 만들게 하고 또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진 거죠.

이나〉 동학도의 후손이 빨치산이 되기도 했다면서요.

고은〉 예를 들면, 성두환의 손자 성민현이 서북청년단에 쫓겨 어쩔 수 없이 빨치산이 돼요. 동학도의 자식과 손자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죽음을 보고 당연히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겠어요?

이나〉 그럼 동학혁명이 실패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 그 평등정신을 이은 다른 저항사상으로 계속 이어진 거네요. 또 그것이 반드시 애국계몽운동 계통으로만 간 게 아니라 여러 갈래로 분화된 거고요.

고은〉 여운형의 할아버지도 동학도이고, 또 한용운이 스님이 된 이유가 자기 아버지가 관군으로 동학도를 토벌하는 것을 보고 그 충격으로 속죄를 위해 평생을 살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일부 학자들은 동학도들 때문에 일본군이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가 되었다고 하면서 동학 핑계를 대는데, 알고 보면 일본은 1888년, 1889년에 이미 무라다 연발총을 다 만들었

고 20만분의 1 지도를 만드는 등 엄청난 전쟁 준비를 했어요. 그런 신식 무기와 기술을 제일 먼저 동학군을 상대로 실험한 거죠. 그것이 이어져 1945년도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아시아에서 2천만 명을 죽인 결과를 낳은 거예요. 저는 동학 소설을 쓰면서 전쟁의 중심에는 무기가 있다고 결론지었어요. 현 시대의 전쟁의 핵심도 무기예요. 무기를 중심으로 한 산업이 전쟁의 원인인 거죠. 그것 때문에 한국이 아직 분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동학군의 개혁의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동학소설을 쓰고, 또 오늘 해외 여성들이 북에서 내려오고 우리가 남에서 올라가 통일의 발자취를 새로 연 것처럼, 우리 여성들이 개혁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나〉 고은 선생님의 마무리 발언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영〉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책은 언제 출판되나요?

고은〉 현재 소설 펀딩 사이트 오마이컴퍼니를 통해 펀딩을 진행하고 있어요. 7월 정도에 목표액이 채워지면 그때까지 30% 정도 소설 내용 공개하는 것도 끝내고 가을에 출판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올 겨울 안에 13권이 다 나옵니다. ‘여성동학다큐소설’ 웹페이지(www.donghakstory.net)에 소설 내용과 후원 방법이 나와 있어요. 우리 책에는 그동안 감춰졌던 한국근현대사의 뿌리가 다 나올 뿐 아니라 통일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혜도 담겨 있어요. 따라서 관심 갖는 독자들이 많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나〉 아무쪼록 이렇게 좋은 책이 널리 읽히길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살림의 길

생명문화

작은집운동의 확산과 빛 없는 삶

• 하만조

생활협동

협동조합의 오래된 변주,
다시 시작되다

• 김이경

사회실천

적정기술의 동향과 농촌 기술운동

• 김성원

작은집운동의 확산과 빛 없는 삶

가장 넓은 집에서 가장 작은 집으로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사는 집의 넓이는 크게 확대돼 왔다. 1982년 가구 평균 41㎡였던 우리의 주택 면적은 2014년 71㎡로 증가했고, 많은 사람들은 이보다 더 넓은 평균 93㎡의 집에서 살기를 바라고 있어서 앞으로도 집의 크기가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경향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집에 사는 미국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1970년대에 현재 우리보다 2배 이상 넓은 150㎡의 집에 살았던 미국인들의 2013년 신축주택 평균 면적은 240㎡로 크게 넓어졌으며 그 증가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소유하는 물건도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냉장고만 보더라도 김치냉장고를 포함하여 가구당 평균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컴퓨터, 세탁기, 텔레비전 같은 가전제품들도 그 기능과 취향에 따라서 1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기술 발전의 결과로 일부 제품들은 사라지거나 통합되었지만 전체적인 보유 총량은 늘어났고, 이를 유

•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원

지하기 위한 전력 소모량과 발전 설비 또한 비례하여 늘어났다.¹⁾ 전자제품 외에도 캠핑, 등산, 낚시 등 취미생활이 확대되면서 전에는 없던 기능성 상품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구입해야 할 이유도 하나둘 생겨난다. 이에 더해 묶음 판매와 패키지 판매가 일반화되면서 용도가 겹치는 물건도 집안을 채워가고 있다. 이쯤 되면 집이 넓어져서 물건이 늘어났는지 물건이 늘어나서 집을 늘려온 것인지 선후관계가 모호하기는 하지만, 양자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더 큰 것이 좋고 더 많은 것이 좋다(the bigger is better, more is better)’는 문화가 우리의 생활양식으로 정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환경적 측면에서 이와 같은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혹은 그래서 우리는 더 행복해졌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우리에게 ‘분명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평균 17㎡(5평) 규모의 집을 짓고 최소한의 물건만을 소유하며 단순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에는 한 귀촌인이 부부의 집, 장모와 처형의 집, 아버지 집, 햄버거 가게, 민박 집을 각각 3평 규모로 한 공간에 지어서 함께 살고 있는 사례도 있고²⁾, 경남 함양에는 생태문화공간의 창조를 목적으로 하는 ‘온배움터’가 작은 집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적은 돈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집을 갖기 위해 돈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남이 아닌 내가 지을 수 있어서 더 애착을 갖게 된다는 점을 작은 집의 장점으로 꼽는다. 또 집을 지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한다는 점도 소중하다고 이야기한다.³⁾

1) 2004년 가정용 전력소비량은 48,615,320MWh에서 2011년 61,564,549MWh로 늘어났다.

2) ‘나는 작은 집에 산다’, EBS <하나뿐인 지구>, 2014.

3) ‘기분이 좋아지는 인터뷰 ... 작은집 연구소 김민규’ MK뉴스, 2014. 9. 17.

그런데 작은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평균 주거 면적이 세계에서 가장 넓은 미국이다. 1999년 제이 쉐퍼(Jay Shafer)라는 예술가가 지은 10㎡(3평) 규모의 ‘스몰하우스’라고 이름 붙인 작은집이 당시 지역 언론에 소개된 것이 미국에서 작은집을 확산하는 한 계기가 되었는데, 그가 작은집을 짓게 된 이유는 더 적게 소유함으로써 더 큰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그의 집과 생활방식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곳곳에서 그와 비슷하게 작은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작은집운동(tiny(small) house movement)’이 새로운 생활문화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운동이 아닌 혁명

미국에서 작은집운동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킨 데는 제이 쉐퍼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후 대중적으로 확산된 데는 몇 가지 배경이 있다. 첫째, 캐러밴이나 트레일러에 거주하면서 여행을 다니는 문화가 발달해 있고, 이를 위한 자연환경과 시설 등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다.⁴⁾ 관련해서 제이 쉐퍼도 여행용 트레일러에 거주하면서 결로와 난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작은집의 형태를 구상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 작은집은 짓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예컨대 2005년 미국 남부 멕시코 만을 강타한 태풍 카트리나의 피해 복구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13만여 가정에 작은집과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기도 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노숙인들에게 영구 혹은 일시 주거의 공간으로 작은집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며 이렇게 활용되는

4) 미국과 유사한 조건을 갖춘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작은집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사례가 전국적인 언론을 통해 종종 보도되고 있다.

셋째, 작은집을 짓는 데 큰 기술이 요구되지 않고 최근 테크샵^{techshop}의 성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 특유의 DIY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터넷 블로그,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해 제작 과정과 노하우, 동영상 등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작은집과 관련한 크고 작은 워크숍과 컨퍼런스를 통해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기도 하다.

넷째, 작은집이 상품화되었다. 작은집 세트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회사들로부터 도면이나 제품을 구입하여 제작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아예 완성된 형태로 구입할 수도 있다. 상품화는 작은집에 대한 대중적 접근성을 높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전문화와 고급화의 방향으로도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다섯째, 아마도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될 텐데,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대량 실직과 경기 침체를 경험한 미국인들 사이에서 담보대출에 의존하는 삶의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일례로 미국 애리조나 주 스코츠데일 지역의 작은집에 살고 있는 앤소니 플로이드^{Anthony Floyd}는 “2008년의 경기 침체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더 적은 것을 가지고 더 풍족하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져왔다”⁵⁾고 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배경에서 작은집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2014년부터는 작은집을 소재로 하는 두 개의 드라마가 TV에서 방영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⁶⁾

작은집운동을 주제로 하는 홈페이지와 블로그도 상당히 많은데 이 중 한

5) <http://www.azcentral.com/story/news/local/scottsdale/2015/03/25/tiny-house-movement-scottsdale/70428108/>

6) 'tiny house hunters'와 'tiny house nation'(2014~)이 방영되고 있다.

곳에서는 미국의 작은집운동 참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⁷⁾

이들은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작은집의 이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작은집을 소유한 사람들의 68%가 담보대출을 갖고 있지 않은 반면 일반 주택 소유주는 29%가 담보대출을 갖고 있다. 둘째, 이 담보대출은 결국 건축비용과 연계되는 것인데 작은집의 평균 건축비용은 2,570만 원(23,000달러)으로 일반 주택 건축비용 약 3억 원(272,000달러)에 비해 1/10 수준이고, 담보대출 이자 부담 약 2억 3천만 원(209,704달러)까지 고려하면 작은집 소유자들의 실제 재정 부담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주택 유지비와 생활비 지출이 줄어들어, 작은집 소유자의 89%가 미국인 평균 신용카드 부채액보다 적은 부채를 갖고 있으며 65%는 아예 카드 부채가 없다고 조사됐다. 『작은 집을 권하다』라는 책을 쓴 일본인 다카무라 토모야 씨의 경우도 식비와 기타 지출로 월 약 18만 원(2만 엔) 정도를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나는 작은집을 지어서 은행을 물리쳤다’라는 제이 쉐퍼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이점은 자신의 시간과 노동 대부분을 은행 빚 갚는 데 쓰지 않아도 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형화된 소비 중심의 생활양식에서 벗어나는 데도 도움을 준다. 그래서 혹자는 사람들이 작은집에 사는 것을 가리켜 ‘운동’이라고 부르지 않고 ‘혁명’이라고 부른다.⁸⁾

작은집? 적당한 집!

쉐퍼가 처음 지은 집은 이후 등장하는 작은집들의 기본 모델처럼 여겨지

7) thetinylife.com

8) <http://www.sctcc.edu/tiny-house-article>

고 있는데, 3평 규모의 트레일러 위에 목조로 2층을 올린 형태이다. 1층은 주방, 욕실, 거실 등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고, 2층은 침실로 꾸며져 있다. 또 현관문 앞에는 의자를 두고 앉을 수 있도록 데크가 설치되어 부족한 거실 공간을 보충하고 있다. 쉼퍼는 단순한 (simplicity) 디자인을 원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집을 구상할 때 하는 방식처럼 필요한 것을 덧붙이기보다는 불필요한 것을 빼는 방식으로 집을 지었다고 한다. 그는 이를 ‘효율성(efficiency)’이라고 부르고 토모야는 ‘팻셀 스타일’이라고 부른다. 기존 집의 공간 설계방식, 나아가 생활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방법론이다. 집이 작은 것도 처음부터 구상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한다.⁹⁾



자연스레 모든 공간은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고, 벽과 가구도 다양한 목적을 갖고 배치되었다.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재료도 여행용 트레일러와는 다르다. 일반 주택과 동일한 것을 택하거나 혹은 더 좋은 품질의 것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거주가 아니라 영구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값싸게 집을 지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잘 살 수 있는 집을 짓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측면도 고려가 된다. 쉼퍼의 집이 지역 사회의 잡지에 실리게 된 계기가 이후 여러 사람들이 작은집에 열광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작은집이 갖

9) <http://www.lifeedited.com/jay-shafer-four-lights-future-of-tiny-houses/>

고 있는 매력적인 디자인 때문이다.¹⁰⁾ 제이 쉐퍼는 효율성을 위해 지붕을 네모지게 만들지 않고 삼각형으로 만든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나는 적당히 기울어진 지붕과 그늘을 만들어주는 차양을 좋아했어요. 그것이 바로 내 행복을 이어가게 해주는 것이었죠”¹¹⁾ 이렇게 함으로써 비록 집이 작을지언정 외부로부터 침입과 사생활보호, 안정된 잠자리와 휴식 공간과 같은 집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기능과 함께 단순하고 소박한 디자인에 개성 있는 매력을 더해 인간적인 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집을 소개할 때 ‘알맞은(affordable)’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한다. 이것은 가격이 적절하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데 어쩌면 작은집을 짓고 사는 것이 비현실적이거나 비주류적인 현상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를 고려하면 가격을 포함하여 ‘살기에도 알맞은’ 혹은 ‘적당한’이라는 의미로 ‘affordable’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더구나 집에서 소비되는 자원과 에너지의 비중을 고려할 때, 그리고 그 집 안에 보관할 수많은 상품을 생각하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작은집이 적당하지 않은가라고 되물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¹²⁾

실제로 그 규모의 특성으로 인해 작은집은 자원과 에너지 측면에서 소비가 적고 효율적이다. 때때로 자신의 주거 방식과 행위 양식이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자 하는 이유로 작은집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집을 짓기도 한다. 이들 중 일부는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빗물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에너지원으로 태양광(열)을 이용하거나 용변을 퇴비화하는

10) 실제로 틀에 짜인 기존 집의 형태와 다른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작은집들을 인터넷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11) 『작은 집을 권하다』, 책읽는 수요일, 2013, 44쪽

12)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36.0%를 주거 및 상업용 건물에서 소비하고 있으며 선진국일수록 그 비중이 높음.(IEA, 2008)

컴포스트 토일렛^{compost toilet}을 활용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작은집은 트레일러 형태의 이동식이어서 고정된 전기선이나 상·하수도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전기와 물, 혹은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높다. 물론 여행자를 위한 전용 주차 구역을 이용하면 이들 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면 대안적 에너지 시스템과 에너지 효율성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작은집

작은집의 효율적인 측면은 일반 주택에 비교해볼 때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미국에서는 평균적인 크기의 주택을 한 채 지을 공간에 17m²(5평)의 작은집 11채를 지을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채를 지을 수 있다.¹³⁾ 보통 한 집에 한 가구가 산다고 가정하면 아파트는 물론 일반 주택보다도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¹⁴⁾ 이와 같은 공간 효율성, 그리고 집을 짓는 비용과 기간이 단축되는 점 때문에 작은집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61만 명에 달하는 노숙인과 텐트시티^{tent city} 거주민들에게 비록 일부의 사례이지만 한층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목적에 활용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도움을 주는 방법도 다양하다. 유타 주에서는 노숙인들이 겨울철 추위에 견딜 수 있도록 ‘서바이벌 팟^{survival pod}’이라는 작은집을 개발한 사람도 있고 뉴욕 주의 한 사업가는 땅을 기부하여 6채의 작은집을 지어주기도 했다. 마을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나서 노숙인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도록 작은집 커뮤니티를 건설하는 경우도 있다.

13) thetinylife.com

14) 우리나라의 아파트(개별 호)당 가구 수 비중은 평균 0.95가구이고, 주택(단독,연립,다세대)은 1.54로 주택의 거주 효율이 통계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이는 위스콘신 주의 매디슨^{Madison}, 뉴욕 주의 이타카^{Ithaca}, 워싱턴 주의 올림피아^{Olympia}, 오스틴^{Austin}과 같은 곳들을 포함하여 미국 전역으로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노숙자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나 그들을 구조적 경제 위기와 불평등의 희생양이라고 인식하는 측면과 더불어, 노숙과 범죄의 상관관계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측면에서 설득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들의 관심도 크다.¹⁵⁾ 이 중 한 곳인 오스틴은 비교적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지역의 비영리단체 Mobile Loaves&Fishes와 지역 주민들은 10여 년에 걸쳐 준비한 ‘Community First!’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마을 인근의 장애인과 노숙인을 지원하기 위해 27에이커의 대지를 마련하고 이동식 주택¹⁶⁾ 100곳, 작은집 125채를 설치했다. 주변에는 커뮤니티 정원, 야외극장, 양봉과 제사 운영 등의 공용 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서 기르는 야채와 달걀은 푸드 트럭에서 노숙인을 위한 식사 준비에 사용한다. 예방과 진료를 위해서 현장에 설치된 의료센터는 구성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검사하고 호스피스와 단기 보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공동체의 건강에 이바지하고 있다. 거주자들은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월 23만원(210달러) 수준의 임대비용으로 작은 집에 거주할 수 있으며, 일부는 월 10만원(90달러) 정도만 내도록 할 계획이다. 또 거주자들이 스스로 임대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과 고용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한 실무자는 이렇게 제공되는 작은집이 단지 노숙인을 위한 임시 거주지로서가 아닌 개인의 사생활과 존엄을 지켜주는 공간으로, 다른 누가 살더라도 괜찮은 수준의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15) 노숙을 끝내기 위한 전국 연합(national alliance to end homelessness)에 따르면 한 사람의 수감 비용으로 연간 34,480달러가 필요하다고 한다.

16) 여기서 이동식 주택은 트레일러 위에 작은집을 설치하여 이동이 가능한 형태의 주택을 의미함.

작은집이 함께 모여 마을을 꿈꾸다

노숙인 공동체라는 다소 예외적인 경우와 달리 일반적으로 작은집들은 현재 미국의 각 주별로 규정하고 있는 집과 방의 최소 주거 공간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대부분 트레일러 위에 건물을 얹어서 이 법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더라도 도시 내에서는 정해진 주차 공간을 제외하고는 장기적인 거주가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한 곳에 정착해 생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작은집운동의 한 흐름은 기존의 공간 제한 규정을 풀어달라는 제도 개선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집단 주거를 통해 제한 규정을 비껴가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와 관련한 노력이 성과를 거둔 사례가 등장했다. 지난 4월 미국 플로리다의 락클리지(Rockledge)에서 오랜 논의 끝에 하나의 정원을 공유하면서 주변에 여러 채의 작은집이 배치되는 방식인 ‘포켓 네이버후즈(pocket neighborhoods)’ 개념으로 소규모 커뮤니티를 설립할 경우 최소 9m²(3평)의 기준에 부합하면 작은집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¹⁷⁾¹⁸⁾

이처럼 곳곳에서 작은집 커뮤니티 혹은 마을을 꿈꾸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포켓 네이버후즈와 유사하게 각자 작은집에서 거주하며 시설과 대지를 공유하는 것이다. 아마도 스머프 마을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물론 법적인 이유 때문에만 커뮤니티나 마을을 구상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온 정주 공동체 경험의 자연스러운 발로일 수도 있고 작은집이라는 생활문화운동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필요와 욕구를 공동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실용적인 이유도 있다. 그래서 작은집 마을을 준비할 때는 어떻게 공간과 관계를 설

17) 포켓네이버후즈는 1996년에 건축가인 로스 채핀(Ross Chapin)과 부동산 개발자인 짐 솔르(Jim Soules)가 공동으로 설립한 주택단지로 하나의 정원을 공유하고 주변에 여러 채의 작은집이 배치되는 방식을 의미함.

18) http://en.wikipedia.org/wiki/Pocket_neighborhood

정할 것이냐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작은집운동의 선구자 제이 쉐퍼는 이 분야에서도 선구적이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현재 구상 중인 마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자신이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¹⁹⁾ 첫째, 적절한 비용으로 훌륭한 장소를 마련함으로써 가격과 품질의 균형을 갖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며, 둘째, 개인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이웃과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다. 셋째, 관계 측면에서 모든 것이 각자와 전체에게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다.²⁰⁾ 그는 올해 안에 착공식을 계획하고 있으며, 만약 그가 성공한다면 이 역시도 많은 작은집운동가들에게 영감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작은집 마을은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부분적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이를 자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나타나며 이를 위한 구성원들 간의 약속과 절차 규칙과 역할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자율과 자치를 위한 과정에는 민주적 의사소통이 바탕이 되고 그것은 또한 공동체의 관계를 풍부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비록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이러한 경험을 앞서서 해오고 있는 공동주거(co-housing)나 협동조합 주택(housing co-operative)은 작은집 마을이 택할 수 있는 형식으로서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 그의 설계도에는 약 52,600㎡(16,000평)의 대지에 약 9~37㎡(3~11평)의 작은집 60여 채, 214㎡(65평)의 공용건물common house 1동과 작업장 1동, 산책로, 주차장, 게스트하우스, 정원 등이 배치된다. (출처: www.fourlightshouses.com/blogs/news)

20) <http://www.fourlightshouses.com/blogs/news>

빛 없는 삶

작은집운동 이전에도 미국에서 당대의 사회문화적 압력에서 벗어나 단순하고 소박한 삶, 스스로 만드는 삶과 이에 필요한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1800년대 중반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의도적으로 살기(live deliberately)’, 헬렌과 스콧 니어링의 ‘좋은 삶(the good life)’, 1960~70년대 ‘토지로 돌아가자(back to the land)’ 운동이 그러했고 지금도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00년대 들어서 확산되고 있는 작은집운동의 캐치프레이즈를 붙여본다면 그것은 아마도 ‘빛 없는 삶’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이 빛은 단지 화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구가 0.5개는 더 있어야 지속되는 현재의 생활방식을 영위하면서 미래세대로부터 끌어다 쓰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포함한다. 문제는 우리가 이 빛을 언제 다 갚을지 모르지만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으로부터도 분명하게 들려오고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작은집을 짓고 사는 것은 완벽한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분명한 전환을 위한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협동조합의 오래된 변주, 다시 시작되다

- 평화·탈핵운동과 만난 협동조합

“니 밥 뭐 싸갓고 왔노? 아이고~ 김밥 한 줄로 싸울 힘이 나겠나!”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투쟁이 언론에 거둬 알려지고 있던 2012년 7월, 109번 공사 예정지에서 들은 말이다. 친구들과 지역에 등지를 틀어볼 요량으로 두어 달에 한 번씩 밀양을 방문하던 참이었지만 밀양 할매, 할배들을 만날 기회는 없었다. 밀양에 가면 잡어(雜魚)로 끓인 어탕에 국수를 말아 들어키고, 밀양을 가로지르는 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희희낙락 거리기 바빴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어르신들은 송전탑 문제를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간신히 밀양 어르신들의 외로운 외침이 알려졌다. 송전탑 반대를 시작한 지 7년째 되던 해였다. 2012년 1월 16일 故이치우 어르신이 송전탑 반대를 부르짖으며 제 몸을 불태웠다. 그제서야 밀양 송전탑 문제가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송전탑과 핵발전소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뿌리 깊은

*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원. 모심과살림연구소에서 생명경제연구회 및 해외 전환운동 조사연구 지원 활동을 함께하고 있음.

사회적 문제가 있다는 것도 그때서야 인지하게 되었다.

이후 밀양에 들 때면 방문지가 달라졌다. 송전탑 투쟁이 일어나는 산으로 산으로 올라갔다. 언론인도, 법조인도 아니기에 아무런 도움도 못되지만 그저 어르신들이 있는 곳에 가서 들은 바, 겪은 바를 끼적였다. 그러던 중 109번 공사 예정지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다. “윙~ 두두두두” 소리가 산 전체를 울렸다. 어르신들은 놀 있는 일이라고 했지만 공사장으로 뛰어가는 걸음은 불안했다. 전날 헬기가 포클레인을 실어 산으로 옮겨 놓았기 때문이다. 포클레인은 굉음을 내며 땅을 고르고 있었다. 어르신들은 망설임 없이 포클레인으로 뛰어들었고 공사는 잠시 멈췄다. 공사장 인부들에 맞서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한 용역업체 직원은 카메라를 들고 주민들을 채증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필자와 친구들도 카메라로 찍으며 부모님께 일러바치겠다고 협박(?)도 했다.)

그러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두 진영은 잠시 휴전을 했다. 어르신들은 “우리는 도시락 싸왔는데, 너(너희)는 뭐 먹을 거라도 있나?”라고 하면서 인부들의 식사를 물었다. 김밥 한 줄로 버틴다는 말에 “우야쨌노”라고 걱정을 했다. 알고 보니 어르신들은 인부들과 싸우면서도 자식뻔 되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준 적도 많았던단다.

육설과 고성이 오가던 현장에서 갑자기 ‘밥 타령’을 했다. 사실 30대 초반인 필자는 싸움의 대상자를 걱정한 경험이 없다. 어릴 때부터 옆 친구조차 경쟁자라는 소리를 끊임없이 들었고 누군가를 밀쳐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스무 살이 되어서야 광우병 촛불집회에서 잠시나마 연대를 경험할 수 있었지만 그 뒤를 이은 집회에서도 늘 아군과 적을 나누는 익숙함을 더할 뿐이었다.

그런데 밀양 송전탑 투쟁 현장에서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상대방을 걱정했다. 이러한 점이 의아했지만 밀양 할매, 할배들의 보듬는 마음에 전국 의 많은 사람들이 송전탑 반대 투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한 건 아닐

까. 하지만 밀양 어르신들의 품어주는 마음은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배신 당했고, 2014년 6월 행정대집행은 이를 확인시켜준 참혹한 사건이었다. 어르신들은 공권력에 농락당했지만 밀양을 지지해주는 연대자들과 계속 함께하고자 재정비했다. 송전탑이 들어선 다른 지역을 둘러보는 것뿐 아니라 부당한 권력으로 신음하고 있는 쌍용차, 팽목항, 구미(스타케미컬) 등으로 달려갔다. 더불어 '미니팜 협동조합'을 만들어 밀양 주민과 연대자들을 이어주는 직거래 망을 열었다.

밀양뿐 아니라 제주해군기지 반대 현장인 제주 강정마을에서도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강정마을 투쟁이 진행될 때 한라봉, 굴, 표고버섯 등을 특판으로 판매하는 유통망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밀양과 강정마을에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의 공통점은 투쟁의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투쟁을 지지해준 연대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을 받기보다 더욱 지속가능한 방식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도 닮아 있다.

저항에서 시작된 협동조합의 역사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지 약 3년가량이 지났다. 지난 3년간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일반협동조합의 수는 크게 증가했다. 2012년 52개에서 시작한 협동조합은 2015년에는 6713개(사회적협동조합은 278개)로¹⁾ 무려 130배 증가했다. 협동조합의 증가는 끝없는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의 반동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또한 한때의 유행일 수도 있다. 애드보커시를 주로 하는 비영리단체(NPO)로 활동하고 있던 조직조차 사업화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음에도 협동조합화를 할지 고민할 정도이

1) 기획재정부. 2015년 4월 기준

니 유행이라는 지적도 틀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기존의 먹거리, 육아와 같은 고전적인 주제와 달리 문화, 예술, 환경, 학문 등 영역을 막론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은 기존 생활·경제에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밀양과 강정마을의 사례는 눈에 띄 수밖에 없다. 주로 사회 문제 해결과 함께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접목되어 조합이 만들어지는데, 두 지역의 협동조합은 저항을 계속하기 위해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기업가 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을 강조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해외 사례를 부지런히 탐색하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여러 조직과 분위기도 다르다. 두 지역은 탈핵운동과 평화운동을 함께한, 그리고 앞으로도 연대할 이들과의 연결고리로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즉 저항과 협동조합이 조화를 이루며 운영되고 있다.

저항과 협동조합이라는 조합은 그리 낯선 것이 아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한반도에서 일어난 협동조합은 조선인이 만든 물건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을 독려하는 소비조합이었다. 최근에 협동조합 붐이 불면서 영국 로치데일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는데, 일찍이 1922년에 이미 조선에는 로치데일의 조합 경영 방식 등이 소개되어 실제로 이를 적용하는 조합도 있었다. 1932년 6월 동아일보에서 집계한 조선의 협동조합 숫자가 290개였을 만큼 지역 곳곳에서 협동조합운동이 일어났다.

물론 이 당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여러 논쟁이 있었다. 1923년 후반 물산장려운동이 침체한 후 민족주의계열은 기존의 자본축적과 공업발전을 목표로 한 경제운동을 수정하며 대중의 자주경제 수립을 지향하는 협동조합운동에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이 역시 물산장려운동과 같이 자본가

층의 재생산조건 개선이라는 성질을 내포²⁾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한 1920년대 초기에는 소비조합의 개념과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합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시기 소비조합운동을 통해 경제난에 대응하고 경제회복을 독려하는 데 역할을 한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어 여러 조직에서 농촌·농민문제 해결을 위한 협동조합에 주목했다. 동경 유학생들이 조직한 협동조합운동사가 1926년에 결성되었고, 1925년에는 조선농민사(이후 천도교계열로 편입)가 농민공생조합으로 발전해 가장 많은 협동조합을 지역에 만들었다. 또한 조선기독교청년연합회(현재 YMCA)가 농촌사업을 위해 신용협동조합 등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이 세 조직은 농촌의 피폐함을 극복하고 부의 생산, 분배의 영역에 있어 조합을 활용해 사회운동을 펼치려 했다. “조선인의 경제적 향상 도모(협동조합운동사 함상훈)”, “경제운동에 주력하여 농민대중의 생활을 안정시킬 것(농민공생조합)”, “살기를 위하여 마음을 합하고 물질을 합하여 일하는 것(조선기독교청년회 홍병선)”과 같이 협동조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했다. 이 외에도 조선기독교청년회에서는 덴마크식 농촌협동조합을 배우기 위해 덴마크를 직접 방문하는 등 민족 독립과 경제운동의 접목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는 이상촌 건설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협동조합운동은 1934년 이후 쇠퇴했다. 협동조합의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까닭도 있었지만 일제의 민간협동조합 탄압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일제는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조합을 폐쇄해 관제협동조합으로 대체했다.

2)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6. 경제운동』, 169쪽.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에서 탄생한 협동조합

1934년 이후 세계 전쟁이 극단으로 치달았고 한국전쟁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역사도 희미해지는데, 다시 그 모습을 보이는 시기는 1960년이다. 부산에서는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가, 서울에서는 장대익 신부가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리고 원주 지역에서는 1972년 남한강 재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농촌 협동조합운동이 시작되었다. 이후 한살림운동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도 몇몇 협동조합은 부당한 권력과 저항했다. 노동자 교육과 운동을 지원하던 영등포산업선교회에서는 1969년 50명의 조합원이 모여 출자금 1만4천 원으로 신용조합을 만들었다. 이후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정식인가를 받았고 조합원 수가 1천여 명이 되는 등 확대해갔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일부는 함께 땅을 구입해 주택조합을 시도하기도 했고 1979년에는 생필품 공동구매조합도 시도했다.

하지만 노동운동에 대한 독재정부의 감시와 탄압으로 1976년에 조합이 해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연대를 지속하기 위해 지역기금 형태로 조합을 꾸리고 있다. 이에 신용이 없어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금고 역할을 하며 지역에 생협, 의료생협이 탄생하는 데 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논골신협의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금호·행당·하왕 지역은 1987년 도시빈민운동을 시작으로 지역주민운동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1993년에 시작된 지역 개발 사업으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철거민 주거권 운동이 벌어졌다. 논골신협은 1994년 ‘주민협동공동체실현을 위한 금호·행당·하왕 지역기획단’에서 만든 분과 중 경제협동분과가 발전되어 만들어졌다. 지역 주민들은 주거권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 1000원, 2000원 등 소액출자를 했고 이후 1997년 정식인가를 받은 신용협동조합이 된다. 이러한 배경으로 설립된 신용

협동조합이기에 지금까지도 생협, 성동주민회, 논골두레장학회, 평화의 집 등 지역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조합 활동을 꾸리고 있다.

이 밖에 도시빈민운동의 과정에서 탄생한 난곡 희망 의료협동조합^(1976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설립된 부산 및 주요 도시의 양서협동조합^(1977년) 등도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불합리하게 소외받는 이들의 권리를 위해 만들어진 협동조합이다.

다시 저항의 역사가 시작되다

이후 협동조합과 저항이 연결되는 사례는 크게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 협동조합 자체가 양적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을 뿐더러 1997년 IMF 사태 이후 신용협동조합의 활동도 위축되었다. 대신 협동조합 정체성과 거리가 있는 농협, 수협 등이 성장했다.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일면서 윤리적 소비, 착한 소비 등이 향간에 관심을 끌었지만 지금처럼 협동조합이 확대되지는 않았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협동조합은 2012년에서 3년간 무려 130배가 증가했다. 이는 2007년에 50개였던 인증 사회적기업이 2015년에 1453개³⁾로 29배 증가한 사회적기업과 비교되는 수치이다.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일각에서는 협동조합‘운동’이 확대될 수 있을지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협동조합의 7원칙인 민주적 의사결정,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간의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이 국가와 자본의 논리에 익숙해진 현재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먹고살기조차 버거운 한국 현실에서 타자에 대한 공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동조합의 지역 사회에 대한

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5년 6월 기준

기여나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가 작동될 수 있는지 의문을 던지기도 한다. 이러한 지점에서 밀양과 강정마을에서 만든 협동조합은 더 불어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의 조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시사한다.

그 첫 번째, 해군기지 건설 반대와 강정평화상단협동조합

푸른 바다, 보얀 파도 그리고 그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구럼비 바위는 그 아름다움보다 투쟁 현장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2011년, 절경을 자랑하던 제주올레 7코스와 근처 강정마을은 해군기지 건설로 밀려날 위기에 처했다. 구럼비 바위와 어울려 살던 생명들, 마을의 평화가 국가권력과 거대 자본에 의해 파괴될 것이 예상되었다. 결국 이곳의 평화는 깨졌고 공권력이 투입되었다. 공사가 강행되자 전국 각지에서 활동가, 청년, 시민들이 강정마을 현장으로 달려갔다. 외부세력으로 매도되기도 하고 지은 죄 하나 없이 몸뚱이를 강제로 들린 채 연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1년 후 결국 공사가 강행되었다.

비록 해군기지가 들어서고 송전탑이 의기양양하게 지역에 들어섰지만 이들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김선우 시인은 이렇게 말한다. “언론은 이제 강정마을을 잊고 싶어 한다. 대책도 없는데 떠올리면 불편하기만 하니 그럴 것이다. 그러나 강정마을은 저기, 저렇게, 있다! 현재진행형의 고통으로 지금, 여기, 이렇게, 있다! 잊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실제로 그렇다. 전국에서 강정마을을 책마을로 만들기 위해 ‘십만대권 프로젝트’도 진행되었고 시민들이 통물도서관도 만들었다. 또한 강정마을의 평화책방에서는 평화운동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차와 쉴 곳을 마련해주고 평화공방에서는 공예품도 접할 수 있다.

강정마을에서는 투쟁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그중 하나가 지역 특산물을 상시적, 특판으로 판매하는 것이었다. 이곳을 ‘강정평화상단’이라 이름 붙이고 제주 굴, 젓갈, 표고버섯, 소금 등을 판매했다. 이 외에도 강정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위한 모금활동을 진행했는데



기부금법에 위반된다는 벽에 부딪혔다.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다 평화상단을 협동조합으로 설립하여 마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 30명은 2013년 8월, 언론도 관심을 거둔 강정마을을 지키기 위해 <강정평화상단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조합원 30명에 1인당 출자금은 10만 원으로 시작했다. 이들은 “후원을 통한 방식이 아닌 마을주민들과 지킴이들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협동노동을 통해 생명평화마을을 만들어가는 발판을 만들어가고자 한다.”라고 창립 의의를 밝혔다. 협동조합의 수익은 강정마을을 위해 전액 사용된다.

두 번째,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투쟁과 미니팜 협동조합-밀양의 친구들

해군기지가 들어선 것과 마찬가지로 밀양에는 송전탑이 꽂혔다. 할매들이 기를 쓰고 투쟁했지만 2014년 6월 11일, 행정대집행으로 경찰이 대거 투입되었고 현장은 무너졌다. 할매들은 “한전(한국전력)놈들은 이기겠는데 공권력은 못 이기겠습디더.”라며 그때의 악몽을 말했다. 상동면에 사는 87세 김말해 할머니는 노구를 이끌고 한전과 경찰에 맞섰지만 집 대문을 나서면 765kv 송전탑이 하늘을 가리고 있다. 담배 한 대를 피

워보며 쓰라림을 가라앉히려 하지만 “보고 있으니까 속이 울렁거려서 못 살아. 아이고 문디, 못 살겠다 카이⁴⁾”라고 분통을 터뜨린다. 할때는 6.25 전쟁, 대동아전쟁 “오만” 전쟁 다 겪어봐도 이 전쟁이 제일 큰 전쟁이라고 한다.

밀양에서는 투쟁에 참여하느라 본업인 농사가 뒷전인 되어버린 할때, 할배를 도울 수 있도록, 그리고 연대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대학생 및 청년들의 여름 농활을 밀양에서 하자는 홍보를 하여 밀양 마을 곳곳에 새하얀 청년들이 먹고 자며 농사일을 거들었다. 또 밀양 1평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프로젝트는 1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출자금을 내면 밀양 땅 1평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받을 수 있는 ‘꾸러미’ 프로젝트다. 이뿐 아니라 빈집 프로젝트도 진행하여 밀양 어르신들의 집과 땅을 빌려주기도 했다.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공사는 강행되었다. 송전탑 반대 투쟁에 관한 뉴스도 감춘 지 오래다.

하지만 전국의 연대자들은 이곳을 잊지 않고 후원을 이어나갔다. 현장에 가지 못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후원금을 보내고 지지를 표했다. “죽을 때까지 저거(송전탑) 안 뺏히면 눈 못 감습니더. 죽어서 영혼이라도 저 철탑을 뺏아서 옛 바귀 먹을 깎니더.”라며 지역에서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결의를 밝힌 밀양에서는 연대자들의 후원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밀양에서도 농사(농산물)를 통한 전국 연대자들의 만남이 이어졌다. 밀양 할때들과 연대자들이 투쟁 중에 틈틈이 경작한 ‘인증은 없지만 무농약’ 감자가 판매되었다. 또한 감 농사가 풍년이라는 이유로 한 박스에 5000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해보고자 특별판매를 진행했

4) 밀양구슬프로젝트. 2014. 『밀양을 살다』. 오월의봄. 36쪽.

다. 감 주문을 맡은 김우창 활동가는 문자가 10초에 하나씩 올 만큼 주문이 쇠도했고 수백 통의 주문 전화를 받았다. 연대자들은 “이렇게 싸게 팔아도 되는 거냐”는 질문과 함께 꼭 “힘내세요.”라는 말을 덧붙였단다.

밀양에 계신 분들은 “연대자로부터 밀양이 잊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한다. 그래서 인연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2014년 7월 <미니팜 협동조합-밀양의 친구들>을 창립했다. 이는 송전탑 반대 싸움을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연대의 장인 것이다. 미니팜 협동조합은 밀양 송전탑 투쟁에 참여하는 어르신이 기른 농산물을 판매하고 ‘밀양장터’도 지속적으로 연다. 그리고 밀양과 연대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곳을 찾아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연결한다. 주민을 중심으로 78명의 조합원, 지지자 20여 명 가입하며 첫 시작을 열었다.

모두의 협동으로 만드는 역사

밀양과 강정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추방’의 사례이다. 밀양 송전탑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이계삼은 “선하고 약한 것들은 늘 이렇게 아름다운데 언제나 패배하기만 한다”라고 했다. 거듭된 추방에 대해 고병권은 “생명의 영역, 삶의 영역이 그만큼 권력의 중요한 통제 대상이자 자본의 중요 상품 형식이 되었기 때문⁵⁾에 일어난다고 한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지점 때문에 “다른 형식을 창안하는 것이 권력과 자본에 대한 중요한 저항”이라고 지적한다.

두 지역에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은 “다른 형식을 창안”하고 있다. 이들의 조합은 일방적인 후원을 넘어선다. 농수산물 직거래를 통해 연대자와 지역 주민을 연결한 윤리적 소비일 뿐 아니라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겠다는 의지이자 실천이다. 이는 탈핵을, 평화와 생명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지

5) 『살아가겠다』, 10쪽.

역에서 손을 뺐은 것이다. 할매, 할배, 청년, 주민의 손을 잡아야 한다. 보통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연대하는 데서 다시 저항이 시작되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특출난 리더(십)를 강조한다. 기업을 바라보는 측면은 특히 그러하다. 언론에서는 빌 게이츠, 스티븐 잡스에 이어 최근에는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을 뛰어난 경영자로 부각시킨다. 사회적기업도 의미와 역할을 강조하는 만큼 사회적기업가라는 소수의 리더를 강조한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조금 양상이 다르다. 협동조합 역사를 뒤져보아도 조합의 선구자를 쉽게 찾을 수 없다는 말처럼 협동조합은 보통 사람들이 만드는 역사이다. 특히 협동조합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특별히 그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심지어 물건을 사러 온 어느 이름 없는 조합원까지도 모두 협동조합을 위해 나름대로의 기여를 했다는 사실⁶⁾”이다. 최초의 협동조합이라 일컫는 로치데일도 특별한 영웅이 아닌 함께 고민한 이들이 만든 새로운 세상이다. 즉 변화는 “특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에서 산업화 시기에 걸친 협동조합 저항의 역사는 다시 변주되고 있다.

강정마을과 밀양의 목소리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불법적으로 강행되고 벌금폭탄과 집행유예선고는 계속 떨어지지만 강정주민과 지킴이들은 마을을 끝까지 지키고자 합니다. 힘겹고 지난한 투쟁이 계속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연대해 주십시오.”

- 강정평화상단협동조합 홈페이지

“우린 끝까지 싸울 거예요. 우리를 응원해주는 연대자들을 위해서 송전탑 뺏을 때까지 싸워야죠. 또 정부가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이렇게 막는 거고, 끝까지 할 겁니다.”

- 동화전 마을 권귀영 ●

6)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 역사와 사람들』, 10쪽.

▶ **강정평화상단협동조합** savejeju.net

강정마을에서 재배한 감귤, 한라봉, 천혜향 등 농산물이 준비되어 있다. 제주 고등어, 제주 은갈치, 제주 흑돼지 등 축산물도 준비되어 있으며 전국여성농민회 언니네 텃밭 (서귀포 공동체)의 마을고추장, 햇감자 등 꾸러미도 준비되어 있다.

문자주문: 010-6286-2131 메일주문: savejeju@daum.net

▶ **미니팜 협동조합 - 밀양의 친구들** my765kvout.tistory.com

밀양 주민들이 경작하고 만든 마늘, 꿀, 고구마, 감자, 복숭아 및 된장, 매실액 등이 있다. 1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납입 후 대책위 전화로 집주소와 이메일주소 전달, 정기적으로 밀양 소식과 농산물 정보 등 제공

문의: 010-9203-0765, 010-5045-3405

출자금 납입계좌 : 신한 110-415-687752 장수민 / 농협 352 0785 8154 43 장수민

참 고 문 헌

강정마을회. 2012. 『눈물 속에서 자라난 평화』. 단비.

고병권. 2014. 『살아가겠다』. 삶창

밀양구슬프로젝트. 2014. 『밀양을 살다』. 오월의봄.

오미일. 2008.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6. 경제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2012.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푸른나무

조지 제이콥 홀리요크. 정광민 역. 2013. 『로치데일 공정선거자 협동조합 역사와 사람들』. 그물코.

차성환. 2004. “잃어버린 진실: 양서협동조합운동의 재조명 1 - 부산양협운동의 전말”. 『기억과 전망』Vol.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 외에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투쟁과 관련된 다수의 기사 및 현장의 목소리.

적정기술의 동향과 농촌 기술운동

적정기술이 왜곡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적정기술은 후진국을 돕기 위한 국제 원조 도구나 대안 에너지 기술, 환경단체나 귀농단체의 활동 프로그램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 적정기술이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지만 왜곡과 혼란이 더해지면서 적정기술 운동에 앞섰던 사람으로서 조금은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적정기술의 정체는 무엇인지, 이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질문해본다.

적정기술의 다양한 이름

적정기술만큼 수많은 이름과 입맛대로 해석되는 기술은 없다. 대안기술, 적당기술, 중간기술, 공동체 기술, 생태적 기술, 자급자족기술, 생활기술, 인간화된 기술, 인간의 얼굴을 가진 기술, 자유기술, 저자본 기술, 값싼

• 전남장흥 귀농, 농촌생활기술 적정기술 연구자, 『이웃과 함께 짓는 흙부대집』, 『점화본능을 일깨우는 화덕의 귀환』, 『희목난로의 시대』 저자, 흙부대생활기술네트워크 매니저,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 적정기술연구소 연구원

기술, 작은 기술, 진보적 기술, 급진적 기술, 부드러운 기술, 로우테크^{Low Tech}, 토착기술 등등.

슈마허^{E. F. Schumacher}로부터 출발했지만 무수한 개인, 단체, 조직, 기관에 의해 회자되면서 적정기술은 새롭게 정의되어 왔다. 종종 그의 본래 기획과 달리 왜곡되거나 혼란을 더하기도 했다. 기술에 대한 철학적 태도나 이념적 접근, 사회운동 차원, 정치경제에 대한 입장, 경제개발 전략의 차이, 장치나 도구의 유형에 따라 적정기술은 각각 다르게 언급되어 왔다. 어떤 이들에게는 단지 특정 국가의 자연 자원과 자본, 노동, 기술 더 나아가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경제적인 기술을 의미한다. 더 이상 국가를 신뢰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기업이나 국가에게 일임하지 않는 기술적 선택이기도 하다. 다양한 의미부여 때문에 혼란스러울 정도의 유연성을 가진 적정기술은 기술과 도구, 인간과 환경적 한계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예술이자 권리가 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제작하기 쉽고, 배우기 쉽고, 유지 관리가 편한 기술이자 에너지 집약적이지 않은 기술이다. 화석에너지보다 대안에너지나 축력, 인력을 사용하는 장비나 도구로 이해되는 적정기술은 사람의 손 기술과 숙련된 기능에 의존하고 소규모 기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부합하는 기술이며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다.

슈마허의 중간기술과 한국의 ODA

적정기술의 아버지 슈마허는 산업주의에 반대하는 급진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다. 1955년 UN 사절단 일원으로 버마(현 미얀마)를, 1961년 농촌개발 자문으로 인도를 방문했던 슈마허는 서구적 산업화와 기계화에 반대하여 제3세계 농촌사회의 자주적 경제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술로 ‘현대적 산업기술’이 아닌 ‘중간기술’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안했다. 그가 제안한

중간기술은 호미와 트랙터의 중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간이나 동물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기술이다. 즉, 작은 규모로 생산 가능하며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기술이다. 1966년 슈마허는 중간기술개발집단(ITDG)을 설립하여 제3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했다. (1970년 이후 슈마허의 뒤를 이은 활동가들은 ‘중간기술’이라는 용어보다 ‘적정기술’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다.) 중간기술개발집단이 만들어진 지 근 50년이 지난 후 이곳 한국의 상황을 보면 안타깝게도 슈마허의 저항성은 지워지고 적정기술이 시장주의로 변색되고 있다.

국제원조 기구나 해외무상지원을 결정해야 하는 정책 당국에게 적정기술은 제3세계 특정 지역과 문화에 대한 적용성이 높은 저비용의 경제개발 기술이자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쉬운 경제개발 도구일 수 있다. 사실 한국에서는 이 부분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한국은 2009년 OECD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국제무상원조(ODA) 의무를 갖게 되었다. 정부에게 있어 ODA 사업은 국격 증진과 외교를 위한 도구다. 정부의 무상원조 전담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2015년도 전체 예산은 6천4백억 원. 이 중 경쟁 입찰에 붙인 대외 무상원조 사업 예산은 2천100억 원 규모이며, 한국수출입은행이 승인한 대외 경제협력기금(EDCF) 1조4천억 원을 포함하여 2015년 정부의 전체 ODA 예산은 총 2조 원에 이른다. 국제원조 사업은 대기업에게는 자원개발과 시장개척을 위한 사업이나 이미지 제고의 수단이 되었으며 중소기업에겐 경쟁입찰을 통해 해외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된다.

적정기술이 국제무상원조의 한 방편으로 주목받으면서 정부와 대기업의 투자와 지원이 확대되었다. 풀이 있는 곳에 벌들이 모였다. 적정기술을 활용하거나 표방하는 관련 단체들이 급격하게 늘어나 현재 100여 곳이 넘는다. 적정기술 연구개발 수행 능력이 있는 몇 단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제선교, 자선, 원조 단체들이다. 국제원조를 위한 적정기술은 이들 단

체들이 정부의 예산과 기업의 지원을 끌어오기에 좋은 구실이 되었다. 진지하게 제3세계의 자주성과 지역성을 고려하며 적정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하는 기관은 몇 곳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엔 과거의 IT 벤처처럼 적정기술을 아이টে으로 삼는 사회적기업이나 벤처(요즘은 '스타트업Start up'이라 불린다) 창업을 하려는 젊은이들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제3세계의 척박한 오지에서 감동적인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국제협력단체 활동가들과 청년들의 인도적 활동은 그 자체로 당연히 숭고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시대 첩병이 되었던 선교사들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여전히 인도적 원조를 뒤이어 제3세계에서 환경과 토착 공동체를 파괴하며 자행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의 자원개발과 노동착취가 떠오르는 것은 뼈뺀 나의 시선 때문일까. 이 혼탁한 세상에선 어떤 선행도 어느새 회색이 된다. 인도적 지원이란 명분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 적정기술은 슈마허의 의도와는 조금은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

CAT의 이상주의자들과 대안기술

적정기술에 대한 다양한 정의의 공통 핵심은 기술과 지역적 환경과 조건이 적절하게 어울리는 데 있다. 최소한 특정 공간과 시간 속의 물리적이고 생태적인 환경과 사회적 맥락에 적합한 기술을 의미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적정기술은 초기 유럽과 미국의 활동가들에게 있어 저항이자 신념이었으며 실천적인 언어로서 단지 기술 이상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적정기술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도 이제껏 그 의미에 있어 충분한 합의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질적인 각양각색 사회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대안기술의 세계적 메카인 영국의 CAT(Center for Alternative Technology)는 제럴드 모건 그렌빌Gerard Morgan- Grenville에 의해 시작되었다. 1974년 그는

황무지였던 미드 웨일즈의 버려진 채석장을 몇 안 되는 소수의 선구자들과 함께 개척했다. 현재 CAT에는 약 150여 명의 상근자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실천적 대안을 체험할 수 있는 방문자 센터와 교육, 연구기관을 갖추고 있다. 방문자센터에는 매년 약 6만5천 명이 방문한다. CAT의 사업은 생태적 생활, 생태건축, 숲 관리,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유기농업 환경위생 등 폭넓은 기술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종종 반항적인 몽상가들과 이상주의자들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설립 25주년을 기념하여 발간한 회고록의 서명처럼 모건은 정신 나간 이상주의자(Crazy Idealists?)였을지도 모른다. 그들 집단은 70년대 산업문명의 진군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믿었으며 장기적 생존을 위해서는 다소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대안들이 필요하다는 신념을 공유했다. 이들의 비전은 최소 16세기부터 시작되는 전통, 즉 18세기 기계파괴 운동을 벌인 러다이트Luddites, 19세기 사회비평가였던 러스킨Ruskin과 사회주의자이자 공예운동가였던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에 이르는 영국의 반 산업주의 전통의 이상과 낭만을 이어받았다. 이러한 전통은 20세기 중반 산업문명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뉴레프트New Left, 대안문화운동, 환경보호운동, 퍼머컬처, 협동조합운동, 여성운동, 여성해방, 탈학교, 평화운동 등과 중첩되면서 다시 살아났다. 이러한 흐름들은 익명의 대중사회와 거대기술을 철저히 불신했다. 인간적 규모와 유연함을 강조했던 대항문화는 실천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창조할 수 없었던 몽상가들과 이상주의자들을 매혹했지만 구체적 대안을 갖고 있지 않았다. 반면 대안기술은 구체적 대안으로 이해되었다.

1971년 프랑스, 스웨덴, 영국, 미국의 환경단체들이 결집하여 생태근본주의를 표방하는 환경단체인 '지구의 친구들(Friends of the Earth)'을 설립했다. 이 단체는 현재 세계 최대의 환경단체 네트워크가 되었다. 1972년엔 로마 클럽이 보고서 「성장의 한계」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자원과 에너

지의 고갈로 인해 세계 인구는 감소되고 경제 성장은 축소될 것이라는 비판적 전망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가 발간된 지 40년이 지난 현재 이들의 예견은 지난 기간 중 대부분 적중했다. 이러한 가운데 1970년대 영국에서는 소위 '녹색운동'에 대한 재정의 논쟁이 촉발되기도 했다. 논쟁을 촉발한 이들은 현대 산업사회가 생태의 지속가능성과 양립할 수 없으며 재앙을 향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다수 환경론자들의 설득력 있는 주장의 함의는 '탈산업사회'였다.

반면 CAT의 구성원들은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계속 했다. 산업이 붕괴된 조건에서 과학과 기술을 포기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새로운 사회의 개혁과 지속가능한 세계의 재구성을 위한 도구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CAT는 실증적으로 40년 동안 지속해왔다. 비록 근본환경주의 그룹들과 조금은 다른 비전을 갖는다 하더라도 CAT가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영국의 오랜 반산업주의의 전통과 다양한 대항문화, 1970년 이후 촉발된 산업기술사회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에서 촉발된 실천적 논쟁에 뿌리를 두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한국의 적정기술은 현 산업사회에 대한 어떤 저항의 전통과 실천적 논쟁에 근거하고 있는 것일까? 또는 어떤 논쟁을 만들어가며 실증적인 실천을 지속해 나갈 것인가?

진보적 사회운동과 산업사회 내부의 적정기술

미국에서 적정기술은 진보적 사회운동의 새로운 기획이었다. 랭던워너가 『길을 묻는 테크놀러지』에서 지적하듯이 1960~70년대 최대 산업국가인 미국 내부에서 적정기술운동은 진보적인 정치운동의 후퇴와 산업기술사회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시작되었다. 적정기술은 에너지 대안의 모색이 아니라 새로운 개혁과 변화의 기운을 끌어내기 위한 시도였다. 미국에서 진보진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전의 선거들에서 패배하며 큰 타격을 입

있고 지속된 시위와 조직 활동에 지쳐갔다. 많은 활동가들이 정치운동을 포기하고 적정기술운동을 시작한 시기다. 미국 진보진영 일부의 새로운 모색과 활로로 적정기술이 선택된 것이다. 1976년 농민출신인 민주당의 카터가 미국의 3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이를 적극 지원하면서 적정기술운동은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보수주의자인 레이건이 차기 대통령이 된 후 적정기술에 대한 지원은 급격히 철회되었고, 서서히 미국의 적정기술 운동은 크게 축소되었다. 이는 미국의 적정기술 활동가들이 왜곡된 정치와 사회구조에 정면으로 도전하지 못한 결과였다. 또한 산업기술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사회개혁과 생태적 전환을 목표로 삼는 활동을 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했다.

2008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도 미국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정치운동에 지친 진보진영 활동가들과 사회운동의 일선에서 떨어진 활동가 출신의 귀농·귀촌자들이 적정기술을 택했다. 이들은 처음엔 개인적 필요와 관심으로부터 출발하여 점차 산업기술사회에 대한 문제제기와 농촌사회의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적정기술을 전개했다. 해외원조와 다른 방향에서 지난 5년여 동안 한국 사회 내부를 향한 적정기술은 (아직 미미하지만) 반핵운동, 지역운동, 협동조합운동과 결합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활동가들 그 자신들은 저항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초적인 적정기술 보급과 교육에 급급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활동 그 자체의 저항성이나 보다 정밀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다듬지 못하고 있다.

생태전환과 사회개혁의 비전, 적정기술 시즌2?

2013년 4월 26일 필자를 포함한 일군의 적정기술 활동가들이 모여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이하 전환기술협동조합)을 창립했다. 전환기술협동조합

은 에너지·경제·환경위기에 처한 우리 사회의 생태적 전환과 지역의 자립적 순환경제구축에 필요한 전통기술, 적정기술, 생태적 현대기술을 포괄하는 ‘전환기술’을 연구, 개발, 교육, 생산, 보급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즉 ‘적정기술’ 단체이면서도 ‘전환기술’을 단체명에 넣으면서 사회의 생태적 전환과 개혁을 좀 더 분명하게 내세웠다. 이 점은 설립취지문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자연과 생태농업을 근간으로 한 자급자족, 절제된 기술과 도구, 호혜와 협동의 경제 환경 속에서 자연 앞에 겸허하며 기쁨 속에 평화로운 창조적 본성을 회복한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는 지역 공동체들, 지역의 풍토를 반영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개성이 자유롭게 공존하는 생태사회로의 전환이란 비전은 희망의 미래를 지금 여기에 구현하게 하는 동력이다.

우리는 기술의 힘을 실감한다. 과학적 진보와 산업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닌 우리의 온 삶을 규정하는 환경이자 결정적 구조였다. 후쿠시마 핵 발전 사고는 산업 자본주의가 낳은 거대기술의 비극적 최후를 상징한다. 지금 여기서 그동안 우리의 기술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전복 시킬 필요가 있다. 과학지식과 기술은 생명 공동체의 건전성과 안전 및 아름다움을 보존할 때 옳바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랜 과거의 언덕을 넘어 전승된 전통기술과 오늘날 오만한 과학지식에 대해 한계와 제약을 가하는 적정기술의 혼합은 생태순환사회로 변모하기 위한 최선의 전환기술이다.”

설립 후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신생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전환기술협동조합은 전국에 걸쳐 다수의 적정기술협동조합들과 단체들이 탄생하는 데 모태가 되었다. 곡성의 향꾸네협동조합, 천안의 작은손협동조합, 공주 두레적정기술협동조합, 예산 꿈지락 적정기술협동조합, 아산의 송악에너지공방협동조합, 아하홍성생활기술협동조합, 서천알콩달콩협동조합, 서울의 마을기술센터핸즈와 적정기술공방, 울산 자립기술협동조합 등 전국

각처에 다수의 지역단체, 귀농단체, 환경단체들이 적정기술을 자신의 활동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다. 아쉽게도 전환기술협동조합은 생태적 전환과 사회개혁이란 목표를 분명하게 표방한 것에 비추어 구체적인 방안과 실천에 있어서는 미숙했다. 다른 단체들에서도 대중적인 확산의 과정에서 생태적 전환과 사회개혁의 목표는 유실되어갔다. 적정기술이 한국 사회에 소개된 이후 급격히 확산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역사성과 다양한 가치는 무시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너무 간단하게 ‘원조 기술’, ‘값싼 대안 에너지 기술’, ‘쉬운 기술’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적정기술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논의하고 우리 사회에 걸맞는 비전과 의미를 찾아보아야 할 때이다. 설령 우리 역시 적정기술의 합의된 의미를 찾지 못한다 해도 단지 가벼운 기술 유행이 되도록 놔버릴 수는 없다. 산업화된 기술이 망쳐버린 이 세계에서 생태적인 전환을 희망하는 우리에게 적정기술은 드문 기술적 성찰과 모색의 계기임이 분명하다.

개인과 몇몇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적정기술의 인적 기반을 힘겹게 넓혀오던 ‘적정기술 시즌 1’이 끝나고 뒤이어 ‘적정기술 시즌 2’가 시작되었다. 충남에 적정기술 관련 협동조합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가 결성되었고, 충청남도도 2015년 5억 원을 들여 ‘적정기술 에듀파크’를 조성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충남의 농촌정책 사업과 연계하여 적정기술 교재를 제작 중이다. 경기도 역시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격차 해소,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정기술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서울시는 적정기술 공모전을 녹색연합, 마을기술센터 핸즈와 함께 금년에도 개최한다. 적정기술을 앞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오던 완주에 이어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본격적으로 정책적인 관심과 투자를 시작했다. 이미 산업화된 우리 사회 내부를 향한 적정기술의 변화이다.

앞서 언급했듯 적정기술 관련 청년 창업도 늘기 시작했다. 정부와 기업도 청년의 적정기술 관련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의 인

생 설계를 위한 학교 밖 교육을 인정하는 자유학기제가 도입되었으나 자유학기제가 요구하는 보다 다양한 체험 교육과 실기 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갖춘 학교 밖 기관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 콘텐츠로 적정기술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요구를 감당할 적정기술 분야의 인적 자원은 부족하다. 한마디로 적정기술의 수요는 증가했지만 적정기술 분야의 인적자원도 기술적 콘텐츠도 아직은 빈약한 상황이다.

적정기술 농기계와 농기계 자작운동 : 농촌 기술공동체의 복원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농·귀촌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2014년 한 해만 4만5천 명가량이 농촌으로 귀농하거나 귀촌했다. 2014년 도시첫밭 인구는 1백8만 명을 넘어섰다. 농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2024년까지 4백8십만 명까지 증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은 주로 소규모 농사를 짓는다. 이러한 농업 인구의 변화는 소농에 맞는 소규모 농기구와 적정기술 농기계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 내고 있다. 벌써 유럽의 텃밭용 농기구를 모방·제작해 판매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적정기술 농기계 자작운동을 전개하는 팜핵¹⁾, 말에 현대적 농기계 장치를 부착한 세계적 적정기술 농기계 축제인 북미의 호스프로그레스데이즈²⁾와 현대적 우경 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킬러스인터내셔널^{Tillers International}, 2001년부터 중고 자전거 부품을 이용하여 자전거 믹서기, 탈곡기, 분쇄기, 물 펌프 등 약 2000개의 발굴림 구동기계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는 과테말라의 NGO

1) <http://www.farmhack.net>

2) <http://www.horseprogressdays.com>

마야페달³⁾에 대한 혁신적인 귀농귀촌인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마야페달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제작 방법과 도면을 내려받을 수 있다. 프랑스 농민들도 스스로 농기계를 제작하고 있으며,⁴⁾ 영국의 농업노동자연맹, 오픈소스에콜로지⁵⁾와 같은 단체들은 농민의 농기계 자가제작 워크숍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농민들이 스스로를 농업노동자라고 표현하는 자기인식도 놀랍지만 이들의 실사구시의 활동이 부럽다.

OECD 평균의 38배 정도 되는 한국 농업에너지 이용 수준은 심각한 지경이다. 이런 때 에너지 위기의 농업을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인 도전이 필요하다. 농기계 기업에 종속되는 농업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도 농민의 소규모 농기계, 농기구 자가 제작운동이 한편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농촌 지역의 소규모 농기계 수리소, 철공소 등 최소한의 생산 기반을 가진 기능인들을 교육하고 재조직할 필요가 있다. 이들과 농민들이 함께하는 농기계 자작 워크숍 모델을 만들고 시장화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도구와 기계를 바꿔야 에너지 문제가 바뀐다.

공동체에 관한 담론에서 종종 간과되어 왔지만 전통적인 농촌은 기술공동체였다. 목수와 대장장이, 도공이나 와공, 토수, 가바치, 염색 장인, 죽공예 장인 등등 지역사회 내에 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을 가진 장인들과 농민들은 서로 협력하고 교환하며 삶을 영위해왔다. 이 점을 잊지 않은 유럽과 북미에서는 농촌생활기술센터들이 민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농업기술센터가 산업적 농업을 지향한다면 농촌생활기술센터는 농촌의 생활을 바라본다.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지역의 기술 자원을 잃어버린 우리 농촌은 지역 외부의 기업과 산업화된 현대적 기술에 생활을 의존하게 되

3) <http://mayapedal.org/>

4) <http://www.latelierpaysan.org/>, http://www.dailymotion.com/Adabio_Autoconstruction

5) <http://opensourceecology.org/>

었다. 에너지 위기, 경제 위기, FTA, 농업인구의 변화 등 농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속에서 기술이 점점 더 마을과 지역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그 어떤 노력의 성과도 농촌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적정기술이든 전통기술이든 대안에너지이든 농촌사회의 순환경제와 자립성, 협력, 지속성 증대, 그리고 자연과 인적자원의 절제된 활용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머지않아 농촌은 피치 못하게 지역 기술공동체를 복원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가장 급진적인 변화와 산업기계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농촌의 기술공동체를 복원하는 데에서 시작될 것이다. 적정기술은 그러한 활동을 위해 선택해야 하는 기술적 도구 중 하나일 뿐이다.●

‘좋은 삶’을 위한 사회발전지표

“당신은 잘 살고 있는가?” 또는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나는 어느 정도 만족해.” 또는 “나는 힘들게 살고 있어.” 등으로 답변할 수 있다. 더욱이 내가 살아가는 지역 또는 나라가 다른 지역이나 나라에 비해 잘 살거나 또는 못살고 있다는 정도도 짐작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이 처해 있는 삶의 조건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놀라운 동물이다. 이를 주관적 판단 또는 생활만족도라 한다. 통계청이나 학자들이 수천 명에게 설문하여 평균을 내고 ‘행복지수’, ‘생활만족도’라 명명해 발표하는 예를 우리는 종종 본다. 그러나 이를 배경으로 사회경제정책을 세우고자 하면 모두 신뢰 문제를 들어 반대할 것이므로 정책수립 시에는 주로 참고자료로만 이용한다.

-
- (사)참누리:빈곤 없는 사회 부설 빈곤문제연구소 소장, 사회복지학 박사

사회발전지표, GDP로 충분한가?

미국 상무성의 사이먼 쿠츠네츠 연구관은 1934년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생산 활동의 수준을 표시하는 GNP(국민총생산= GDP+해외 순 수익)라는 지표를 개발하여 보고하였다. 이 지표는 브레튼우드국제회의를 통해 2차 대전 이후 한 국가의 경제활동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제지표로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었다. 1980년대 이후는 주로 GDP(국내총생산)가 통용되고 있다. GDP는 일정 기간 중 생산된 부가가치의 총합이다. 현대자동차가 강철을 80원에 사서 100원의 자동차를 만들어 팔았다면 부가가치 생산액은 20원이다. 모든 사람과 기업 등 제도단위들이 1년 동안 만들어낸 부가가치들의 합계가 총생산액이 되며 이를 토대로 전년대비 성장률이 몇 %라고 말할 수 있다. 지난 70년간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각국 정부들은 대부분 GDP증가율, 즉 경제성장률을 바로미터로 삼아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였다. 경제발전은 최고의 정책 과제였다. 경제성장은 소득의 증대이고, 소득의 증대는 국민후생과 행복을 증대시킨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1960년 1,000달러에서 2014년 28,739달러(IMF 발표)로 높아졌다. 원화로 환산하면 1인의 평균소득이 연 3천만 원, 3인 가족 경우 평균적으로 9천만 원의 수입이 있다는 뜻이다. 세계적으로 드문 고속성장 사례로서 우리는 이를 경제발전이라 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1인당 GDP라는 숫자는 GDP를 총 인구수로 나눈 평균 개념으로, 우리가 실제로 버는 개인소득 또는 가계소득수준과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내가 느끼는 생활만족도나 행복의 수준은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결과(다른 사람들이 행복하면 나는 불행해진다)도 반영되므로 1인당 GDP의 크기와는 큰 상관없이 없다. 갤럽은 세계 143개 국 사람들에게 “웃고 즐기는가?” 등 긍정적 정서 5개 지표를 물었는데 1인당 GDP로 세계 29위인 우리나라는 59점으로 121위이었다. 과테말라는 1인당 GDP로는 118위이지만 갤럽 조사

에서는 2위였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1인당 GDP의 크기는 왜 행복의 크기로 전환되지 않는가? 1인당 GDP는 과연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인가?

GDP는 생산 활동의 수준을 측정하는 데는 괜찮은 지표이다. 그러나 국민의 후생이나 웰빙(잘 사는 것)을 측정하는 데는 문제가 많다고 일찍부터 지적되어 왔다. GDP에는 알려주지 않는 정보가 많고, 함께 계산되어야 할 부문이 아예 생략되거나 계산되지 말아야 할 부문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 그러한 문제점 몇 가지를 살펴본다.

먼저 평균적으로 늘어난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또한 얼마나 빈부격차가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개인의 경제자원 보유상황에 대하여도 알려주지 않는다.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서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이를 사회발전으로 인식하는 '착각'이 발생한다. 경제 구성원이 체감하는 물질적 웰빙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1인당 GDP보다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더욱 중요하다. 가계소득조사에서는 재벌들의 소득이 파악되지 않고 노숙인 부랑자들의 무소득이 잡히지 않는다. 또한 가계소득에는 공·사적 이전과 세금 및 보험료 등을 공제한 가처분소득이 중요하다. 물질적 복지의 관점에서는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에서 의료와 교육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고려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평균수준의 소득과 소비보다는 중간수준의 숫자를 분석하여야 한다. 재산의 변화, 계층별 소득 분배를 포괄하는 지표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GDP는 시장경제 내에서 화폐로 환산되고 교환되는 생산이나 서비스 활동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전체 GDP 대비 30~4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는 청소, 요리, 육아, 케어 등 시장 밖에서 일어나는 비_非임금노동은 그 계산에서 제외되어 있다. GDP는 양적인 성장은 보여주나, 그 성장이 얼마나 질적으로 좋은 것인지를 구별해주지 못하여 단순한 지출의 증가를 성장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일례로 기름유출 사고의

경우 환경 피해, 생활 파괴 등 삶의 질을 낮추는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이로 인한 복구비용의 증가가 GDP 증가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 성장의 결과로 파급되는 도시 범죄의 증가, 전쟁, 오염, 온실가스 배출, 자연재난의 증가 등을 간과한다. 특히 자본들(자연자본, 인간자본, 사회자본, 경제자본 등)의 변화는 웰빙의 장기적 지속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데 GDP는 이에 대한 정보를 거의 알려주지 않는다.

이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GDP는 사회발전의 진전에 대한 평가지표가 되기에는 턱없이 불충분하다. 사람들이 자원을 웰빙으로 변환시키는 정도는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에게 이용 가능한 자원(또는 소득과 재산)의 크기를 웰빙 수준이라고 간접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웰빙 수준은 직접 평가되어야 한다.

둘째, GDP를 금과옥조로 삼는 성장 제일주의의 배경에는 복지경제학의 공리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공리주의는 소득증가에 의한 소비지출이 효용증가를 통해 감성적 행복을 증대시킨다는 ‘소득증대=행복증대’라는 개인주의적 쾌락주의 철학의 관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소득증대는 사회발전을 위한 여러 수단 중 한 가지일 뿐이다. 따라서 웰빙, 즉 잘 산다는 것이 쾌락이나 행복의 성취가 아니라면 한마디로 무엇이냐는 질문이 제기 된다.

‘삶의 질’을 중심에 둔 사회발전지표

2007년 6월 이스탄불에서 UN, 세계은행, ILO, OECD 등 국제기구들과 주요 선진국들은 GDP지표가 인간의 번영이 진전되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타당치 않다는 점에 합의하고 대안적인 사회발전(social progress)지표를 개발하기로 선언하였다. 세계은행은 ‘포괄적 성장’ 또는 ‘지속적 성장’

개념을 채택하여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구체화되기 힘들었고, 각국에서는 대안지표 논의만 무성하였다. 2008년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세계적인 학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제 성과와 사회발전 측정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GDP지표의 대안을 작성토록 의뢰하였다. 2009년 10월 동 위원회는 ‘웰빙과 사회발전 지표’의 구축방향을 설명하는 일명 「스티글리츠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는, GDP는 수단의 하나로서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 등 GDP가 가진 한계를 지적한 후 ‘사회발전’이란 물질적 및 비물질적 ‘삶의 질의 지속적 향상’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사회발전지표의 이론적 근거, 사회발전의 영역 틀, 웰빙의 9개 차원, 웰빙 지속성을 나타내는 4대 자본들, 주관적 판단지표의 포함 등 구체적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이론적 배경은 동 보고서의 전체 프레임을 만드는 토대가 되므로 가장 중요하다.

동 위원회는 웰빙에 대한 과거의 학문적 논의를 소개하고 다양한 논의를 거쳐 아마르티아센 교수의 역량접근(capability approach)을 사회발전의 이론적 근거로 채택하였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던 센 교수는 인간발전이란 ‘인간역량의 증대’ 즉 실질적인 자유의 확보에 있고 이것이 삶의 질의 향상이라고 요약하고 있다. 또한 삶의 질은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자율적 사회구성원들이 목적과 가치 있는 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와 행위(beings and doings)로서의 ‘기능들’과 이들 기능들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 또는 실질적 자유의 확보로서의 ‘역량들’의 조합이라고 설명한다. 기능들의 예로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것, 주거환경이 쾌적한 것, 안전을 보장받는 것, 교육을 받는 것, 읽기를 할 수 있는 것,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 등을 들고 있다. ‘역량’의 단적인 예로는 자전거를 보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자전거를 가질 수 있고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고등교육, 병원 입원 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가 고등교육의 이수라는 가

치 있는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 등도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삶의 질의 수준은 자율적 행위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잘 사는 능력이나 성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로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발전이란 개인 차원의 인간발전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객관적 물질적·비물질적 삶의 조건이나 삶의 표준이 개선되는 것으로 종합된다. 이것이 사회발전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량접근에서는 소득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는 수단에 불과하고, 소득의 증대가 행복의 증가라는 심리적 결과물과 쾌락주의적 물질적 성장패러다임을 거부한다. 역량접근은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지향하는 가치 있는 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 역량, 즉 자유의 확장을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OECD는 스티글리츠 보고서를 따라 웰빙을 총 3개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 개인 웰빙은 삶의 물질적 조건 영역(소득과 부, 고용과 수입, 주거조건)과 비물질적 영역(건강, 일-삶의 균형, 교육과 기술, 사회적 연관, 시민개입과 거버넌스, 환경의 질, 개인보호, 주관적 웰빙)으로 나누어 총 11개 차원 24개 지표로 구성하고, 지속성 영역은 물질적 자본, 자연자본, 인간자본 및 사회자본의 증감변화를 파악하여 장기적으로 웰빙을 지속시킬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OECD는 2011년부터 매년 각국의 삶의 질 지표(Better Life Index)를 발표하고 있고, 2014년 10월부터는 34개 회원국들의 362개 지역별 삶의 질 지표도 발표하고 있다(우리나라 경우 수도권, 경남권 등 7개 지역). 지속성 영역은 현재 개발 중이다.

사회발전지표의 국내의 개발 동향

스티글리츠 보고서를 계기로 주요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지표개발에 나서 2~3년 사이에 개발을 완료하였거나 개발 중이다. 프랑스(2012년), 오스트리아(2012년), 영국(2012년), 캐나다(2011년), 호주(2013년), 리투아니아(2012년)

등은 일차 개발을 완료하였고, 계속 보완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300개에 이르는 ‘주요 국가지표시스템(Key National Indicators System)’의 일환으로 ‘삶의 질 지표’를 개발 중이다. 미국의 Social Progress Initiative라는 비영리기관은 경제관련 지표가 아닌 사회적 및 환경적 요인 52개 지표들로 구축된 ‘사회발전지수’(social progress index, 이하 SPI, 하버드대학 Michael Porter 교수 개발)를 세계 133개국에 대해 작성하고 이를 2014년과 2015년 각각 발표하였다. SPI는 현재 40개국 이상에서 개발 중이라고 보고되고 있는데, 남미에서는 파라과이가 SPI를 ‘2030 국가발전계획’에서 채택하였고, 다른 국가들의 경우 지방정부 차원(보고타, 리우데자네이루, 아마존 지역의 772개 지방정부들)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EU의 지역과 도시정책 담당 책임자는 지난 4월 회원국들의 각 지역에 대해 SPI개발을 검토한다고 발표하였다. 스티글리츠 보고서와 OECD는 사회발전 지표의 틀, 차원들, 개별지표들의 개발과정에 많은 국민들의 참여나 지역별 토론회, 특별 서베이 등 상향식 논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민 참여를 필수적 절차로 하여 개발하였다.

여러 국가들의 웰빙지수 가운데 캐나다의 웰빙지수(Canadian Index of wellbeing, CIW)는 대표적이다. CIW는 민간단체의 주도에 의해 3개 영역, 8개 차원, 64개 지표로 10년 이상에 걸쳐 개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정부와 많은 학자 및 전문가들의 참여, 수많은 지역순회 토의, 지표들에 대한 면밀한 타당성과 신뢰성의 점검과 재점검, 새로운 지표의 개발 등을 통해 만든 역작으로 평가된다. 1994년을 100이라 할 때 2010년에는 GDP가 28.9%가 증가하였으나 CIW는 5.7% 증가에 불과하였다. GDP의 증가가 삶의 질의 향상으로 전환되지 않은 주요한 요인의 하나는 환경지표(지속성)의 장기적 하락이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통계청이 OECD가 권고하는 틀에 따라 2011년부터 지표를 개발하여 2014년 6월에 ‘국민 삶의 질 지표’를 부분적으로 발표하였다. 지표는 12개 영역과 81종 지표로 구축하여 지표별로 개선과 악화

의 2개 신호로 표시하고 있다. 12개 영역은 물질부문 4개[소득·소비·자산, 고용·임금, 사회복지(공적연금 가입률,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주거]와 비물질 부문 8개[건강, 교육, 문화·여가, 가족·공동체, 시민 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 웰빙]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공표되고 있는 지표는 70종으로 나머지는 개발 중이다.

그러나 현재 개발된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지표 작성의 목적이 상실되고 있는 모습이다. 삶의 질 차원과 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가 거의 배제되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차원과 지표 선정에서 빈곤율, 지니계수, 실업률 등 신뢰받고 있지 못하는 지표들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대체할 새로운 지표의 개발 노력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 그리고 4대 자본의 변화측정에 관한 조사 연구가 전체적으로 부재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지표별로 개선과 악화만 표시하고 있어 총체적으로 삶의 질이 좋아진 것인지 나빠진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그래서 어떻다는 것이냐?’는 의문만 남게 된다. 이에 따라 GDP지표의 대안으로서의 중요성이 간과되었고, 사회발전지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희박하게 되었으며, 국민의 삶의 수준을 가늠하고 평가하는 최고정책지표로서 사회, 경제 및 환경 정책에 반영되는 절차도 없는 ‘발표용 지표’로 그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공론에 부치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재구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지표들의 동향에 의해 정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가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다차원빈곤지수와 지역사회발전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삶의 질 지표 개발과 관련되어 두 가지의 정책 아젠다가 있다.

첫 번째는 다차원빈곤지수를 개발하여 이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에 적용하고, 빈곤감축정책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빈곤이 다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논쟁의 대상이 아닌 실재이다. 삶의 질 지표의 패러다임에서는 빈자는 소득의 부족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이 결핍된 사람들이다. 다차원빈곤분석은 사회적 배제 접근, 제도적 접근 등 여러 방면으로 모색되어 왔는데 역량접근에 기초한 다차원빈곤이론이 지난 20여 년간 가장 괄목할 만큼 진전되었고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실제 정책지표로 적용되고 있다. 다차원빈곤의 차원이 소득, 재산, 건강, 교육, 주거, 사회적 관계, 사회보장 등 7개 차원으로 구축되는 경우 각 차원마다 빈곤선을 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총합지수화하고 다시 총합지수에 있어서의 빈곤선을 정해야 하는데 이의 객관적 결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통계 기술적으로든 행정적으로든 어려움이 크다. 최근에는 ‘차원계수방식(counting approach 또는 Alkire -Foster measure)’¹⁾이 이론적 및 실용성 면에서 세계적으로 선호되고 있다. 옥스퍼드대학의 ‘옥스퍼드 빈곤과 인간발전추진기구(Oxford Poverty and Human Development Initiative)’는 UNDP의 의뢰에 의해 차원계수 방식으로 140여 개국들의 다차원빈곤지수를 2010년부터 개발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부탄 정부는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남미의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의 132개 지방정부, 엘살바도르 등에서는 법적으로 규정하거나 정책지표로 작성하여 빈곤감축정책에 직접 활용하고 있다. 인도, 말레이시아, 중국(워링 산간지역)도 이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최저생계비를 빈곤선으로 하여 소득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로 선정하고, 생계, 주거, 의료 등 급여를 일괄 지원하여 왔다. 그러나 2015년 7월부터는 개별급여체계가 도입되어 사실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대상 수급자를 각각 중위 소득의 28%, 40%, 43%, 50% 이하로 결정하고 있다. 문제는 빈곤선들이

1) 차원들에서 결핍차원들을 구별한 후 예를 들어 결핍 차원 수 3개를 차원빈곤선으로 다시 정하여 결핍차원 수가 3개 이상인 사람을 다차원빈곤자로 규정하는 방식

모두 소득기준(교육만 제외하고는 재산을 소득 환산하여 실제 수입에 가산한다)이라는 점이다. 생계 급여의 선정은 소득의 크기를 기준으로 할 수 있지만, 주거, 의료, 교육부문의 현물급여의 선정에는 소득기준 외에도 가족의 규모, 형태, 연령, 만성질환보유 등 고려할 사항이 많으므로 이들 차원에서의 결핍 여부의 결정을 소득기준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차원빈곤접근에 의한 수급자 선정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빈곤감축정책이라고 칭할 수 있는 정책이 부재한데, 다차원빈곤 접근에 의해 다차원빈자와 이들의 결핍된 차원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이들을 타겟팅한 빈곤감축정책을 본격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두 번째 정책 아젠다는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기반하여 사회발전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EU와 OECD는 2000년대 후반부터 회원국들의 ‘전통적 지역성장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소 기반 지역사회발전정책(place-bas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다.

OECD는 1995년~2007년의 장기에 걸쳐 회원국 1700여 개 지역들을 위치에 따라 도시우세지역, 중간지역 및 시골우세지역으로 나누고 이들 지역들의 성장에 대한 기여를 분석하여 중요한 결과를 얻었다. 총 지역 수의 4%에 불과한 ‘거대 허브지역’들이 총 성장의 32%를 기여하였고, 나머지 지역들은 기여도가 모두 매우 낮지만 이들 나머지 지역들의 전체 성장에 대한 총 기여도는 68%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집적 효과가 큰 대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성장잠재력도 크고 전체 성장을 주도하지만 인구밀도가 성장에 주는 영향이 적어 시골지역이든 중간지역이든 어느 지역에서도 성장의 잠재력이 있어 ‘성장 따라잡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1인당 GDP의 성장률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평균적으로 시골우세지역, 도시·시골의 중간지대, 도시우세지역 순으로 빠른 성장을 누렸다. 인구밀도나 경제활동의 집중 효과는 성장 성과를 얻는 필요하고 충분

한 조건이 아니었다는 점이 실증되었다. OECD는 지역사회의 성장요인과 부진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지역사회발전과 관련된 핵심적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 01 지역의 성장패턴은 지역의 형태에 따라 상이하며, 시골지역 등 어떠한 형태의 지역들이든 모두 성장잠재력과 성장기회를 가질 수 있다. 지역의 성장잠재력 촉발이 국가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므로 최근 성장잠재력이 낮아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02 고용-복지연계 프로그램, 훈련, 직업능력개발, 의료와 돌봄 서비스 등 인간자본투자자는 생산적 복지지출로서 '통합을 지향하는 성장'을 추구하는데 이러한 성장 성과와 함께 평등, 재정건전성 및 지속성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 03 역동적인 성장지역의 성장촉진요인은 인간자본, 사회자본(제도, 새로운 지역정책 수립 등 거버넌스), 혁신(기술개발, 아이디어 등) 및 인프라인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이 중에서도 인간자본과 사회자본의 형성이 핵심역할을 한다.
- 04 지역에서 부문개별적인 정책단위로 개입하는 것은 의도되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주요한 성장촉진 요인들은 빠짐없이 하나의 정책패키지로 구축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핵심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발전지표의 구축이 요청된다. 둘째, 지역사회개발이나 성장계획 또는 복지계획을 각각 수립하는 현행 시스템을 벗어나 성장정책과 통합정책의 패키지로서 지역사회발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인간자본과 혁신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회투자정책 전략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사회발전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앞으로의 15년

Post 2015 개발의제

2015년 가을이 되면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된다. 우선 9월에 있을 제70차 유엔총회는 지난 15년간 개도국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던 새천년개발목표의 종료 시점에 맞춰 향후 15년간 적용할 새로운 개발의제 Post 2015를 확정한다. 두 번째 중요한 결정으로 12월 초에 있을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 1, 2차 체제를 대신하게 될 2020 신기후체제에 대한 협상과 결정이 진행된다. 이미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탄소저감을 위한 국가별 자발적기여(INDC) 수준을 제출하였으나, 아직 눈치를 보면서 수위를 조절 중인 국가들도 있다. 개발의제를 이야기하면서 기후변화를 함께 꺼낸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통해 상호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와 물 소비, 경제성장 역시 기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개발의

• 시민환경연구소 객원 연구위원

제의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되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올해 지정될 새로운 개발의제의 내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2012년 이전 리우+20 회의를 준비하면서 유엔은 앞으로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개발의제를 선정해야 할지 주요 그룹에 물음을 던진 바 있었다. 당시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는 앞으로 채택될 새로운 개발의제는 개도국 중심이 아닌 전 지구적 차원이어야 한다는 것, 포괄적 참여를 통한 목표의 선정과 실행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 인권과 평등, 환경문제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원칙 등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가 고위 리더나 관료, 전문가에 의해 수립됨으로써 제한적이며 수직적이고 획일적인 정책이 되었다는 지적에 근거한 것이었다. 리우+20 회의가 끝나고 바로 고위급 패널이 구성되었고, 이들은 처음으로 2013년 5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빈곤퇴치와 변혁적 경제」라는 보고서를 새로운 개발의제로 제출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원칙은 ①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말 것, ②지속가능한 발전, ③일자리 창출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제로의 전환, ④평화롭고 효과적이며, 개방적이고 책무성 있는 제도를 만들 것, 그리고 끝으로 ⑤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원칙은 그해 7월에 제출된 유엔 사무총장의 「모든 사람을 위한 존엄한 삶」이라는 보고서에도 일부 반영되었다. 보고서는 빈곤의 종식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유엔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으면서, 국제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단독의 목표로 설정해야 하며 책무성 메커니즘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한편 지속가능발전목표 공개작업반(OWG)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여러 국가기관과 주요 그룹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졌고, 2014년 2월부터 핵심영역과 목표들을 정리하여 6월에 초안을 만들고 7월 제13차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가지와 세부목표 169 항목을 채택하여 발표하였다. 고위급패널과 사무총장의 새천년개발목표 관련 보고서, 공개작업반 보고서를 망라하여 2014년 12월 반기문 사무총장은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존엄성으로의 길 2030: 빈곤 종식, 모든 이들의 삶의 전환과 지구 보호」.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3가지 원칙이자 비전은 첫째, 개발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Leave No One Behind) 포용적 발전을 강조하였고, 둘째, 제목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존엄한 삶(Life of Dignity for All)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셋째, 파트너십과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제도를 통한 실천약속(Universal Compact)을 강조하였다.

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평가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빈곤의 종식과 산모 및 영아의 건강, 공중보건, 보편적 교육, 성평등, 자연보전과 파트너십을 포함하는 8개의 목표와 18개의 세부목표,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간결한 언어, 명료한 측정 방법의 제시 등으로 비교적 소통이 쉽고 평가지표의 적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진 반면 지나치게 획일적이어서 지역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안의 적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유엔의 중심의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국제적 원조사업을 실행하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평이다. 특히 개도국의 초등교육과 공중보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새천년개발 목표에서 극빈층을 2015년까지 반으로 줄이는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국가들은 이 목표를 이룬 반면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은 목표들 달성하지 못하였다. 전체적으로 극빈층은 반 정도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9명 중 1명은 기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천년목표 중 가장 성적이 좋지 않은 분야는 영유아사망률과 모성보건으로, 5세 이하의 영유아 사망률을 2/3 줄이겠다는 목표는 여전히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모 사망률을 75% 줄이겠다는 목표 역시 2013년 현재 45%정도 사망률이 줄어든 수준이기 때문에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상기하였던 바와 같이 새천년개발목표는 그것이 가진 단순함 때문에 빈곤을 지나치게 개도국의 문제로만 인식하였던 것, 분쟁이나 재난을 겪은 취약국가에 대한 특수한 현실을 반영할 수 없었던 것이 한계로 평가되며, 빈곤을 협의의 사회개발 의제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인권이나 평화, 거버넌스 등 사회적 문화적 차원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또한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개도국의 경우에 개발원조가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원칙과 내용

2014년 12월 발표된 UN사무총장의 종합보고서(The Road to Dignity by 2030: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 p.8)를 살펴보면,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실제로는 그 뿌리가 깊고 오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92년 리우회의, 2000년 새천년 정상회의와 새천년목표(MDGs), 2005년과 2010년 MDGs 정상회의, 그리고 2년 전 리우+20에 이르는 여정은 일관되어 있었다. ‘Human Well-being’이라는 궁극적 목표가 그것이었고,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문제로 인해 인간의 참삶(Well-being)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각성이 그 배경이었다. 지속가능발전이 의제 21을 통해 지난 20여 년간 우리 가까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전환사회를 획기적으로 가져다주는 실행력을 갖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녹색경제나 녹색성장의 기술시장 패러다임이 등장하였다. 그렇다면 개발의제로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역시 기술패러다임에 기반한 것은 아닐까?

개요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Leaving no one behind)는 원칙이 비전토론에서 주목을 끌었다. 그 개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누가 가장 뒤처지기 쉬운 사람인지, 배제되기 쉬운 그룹인지가 정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의되어야 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수립해야 한다. 획일화에 대한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국가별 제도정비의 책임과 수립되는 목표가 국가에 적합하도록 수정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실행력과 책임성을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 때문에 측정지표와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어려움 또한 예상된다. 이미 유엔 통계기관은 지속가능목표별 측정가능한 지표를 각 국가별로 조사하여 400개가 넘는 지표를 선별하였다. 이 중 측정이 어려운 항목, 질적 평가가 요구되는 항목은 지표 선정이 어려워 목표 자체가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속가능발전목표(공개작업반 제시안)

1.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증진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참삶(well-being)을 증진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증진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여아의 역량강화
6.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
7.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8. 지속적·포괄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9. 건실한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진흥 및 혁신

10. 국가내·국가간 불평등 완화
11.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확립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대처하는 긴급 조치 시행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바다·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15. 육지생태계 보호와 복구 및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용 증진 및 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 사막화 대처, 토지황폐화 중단 및 회복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증진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책임성 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17개의 목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이념을 그대로 이어받아 새로운 개발 의제하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애하고 있다. 따라서 원조(ODA)를 통한 개도국에 대한 지원은 빈곤과 영양공급, 교육 분야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새천년개발목표 시행과정에서 파악된 바, 고용의 안정이 빈곤 문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개도국의 경우 전체 고용시장에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정의되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빈곤에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빈곤의 감소 속도가 20%에 정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영양결핍 인구의 비율도 이와 유사하게 15~16%대를 유지하였다.

공개작업반이 제시한 목표1과 2는 빈곤문제를, 목표8은 고용안정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경제성장에 동반되어야 하는 고용안정의 문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목표3과 6은 공중보건 개선에 관한 사항이고, 모든 사람의 교육 접근권을 보장하는 항목은 목표4에 포함되었다. 불평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항목(목표5,10)은 성평등과 더불어 소득격차에 의한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간의 불평등을 저감시키자는 목소리가 포함되었다.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낳은 환경문제와

사회적 불평등이 지속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개선하자는 의지가 느껴진다.

환경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목표12)은 지난 리우+20 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10개년 계획(10YFP)이 반영된 것으로, 대량 생산과 소비를 추구하던 자본주의와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일침을 가하는 목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에코 라벨링을 통한 친환경상품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녹색매장을 지정하여 녹색소비를 확대 실시하는 것, 기술인증 시스템을 통해 환경인증제품을 더 생산하는 것, 폐기물을 저감시키는 것, 생태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담고 있어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틀에서 말하는 녹색산업을 새로운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자는 녹색기술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드러낸다. 한편 도시 기반시설과 설계에서 환경과 안전을 고려해야 하고(목표11), 산업분야에서도 환경산업을 발전의 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포함하였다(목표9). 개도국에서의 에너지 접근권 확보, 에너지 효율성을 배가함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한 화석연료 에너지원의 감축과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는 안은 목표7에 반영되었다.

새천년목표에서 단 하나의 목표였던 환경에 관한 목표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다수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차지하는 환경의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종적으로 유엔정상들이 모인 마지막 협상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항목을 감소시킬 경우, 환경에 관한 목표들이 모두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상의 결과가 지속가능발전목표보다 후에 나오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목표13과 관련해서 전향적인 기후관련목표가 정해지긴 어려울 것이다.

해양자원에 대한 보전과 산림자원 및 토양의 황폐화를 막는 목표 14, 15의 경우 공유재인 자연자원감소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농업이 대규모 산업화되면서 대량생산에 따른 표토층의 유실과 비료와 농약의 과다한 사용은 토질을 낮춤으로써 자연 생산력을 저감시키고 토양 황폐화를 일으켜왔다. 일부 농업인(산업계)들은 더 많은 비료를 공급하여 생산을 배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도 있지만, 이미 비료에 의존하는 생산방식의 문제와 질소와 인의 과다한 사용으로 하천과 해양에는 부영양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소농과 전통적인 농업방식, 농생태학의 적용 등 새로운 접근법이 더 요구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이행기제

목표16과 17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기제를 담은 항목이다. 국가별 이행기제가 일률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은 낮지만 기존의 의제21에서 출발한 지속가능발전법이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활동을 보다 체계화할 수 있는 틀이 될 것이다. 국가별 책무성은 여전히 투명성 확보에 머무르고 있지만, 모니터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적 규정을 두어 문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제제조치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될 필요성이 있다.

글로벌 파트너십에 관한 이행기제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GNI대비 0.7%의 의무사항을 재확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0.3%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이에 대한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파트너십이 담고 있는 내용이 국가 기관이 주도하는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개인과 단체 등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교류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도입도 필요할 전망이다.

누구를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인가?

공개작업반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포함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항목이 있기도 하고, 의미가 모호하거나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 이에 대한 협상은 현재도 진행 중이고 9월에 최종안이 결정되는 그 순간까지 누구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단 기존의 녹색경제와 녹색성장에서 주요한 축을 이루었던 기술프레임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효율성을 높이는 에너지 정책과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프레임, 산업분야와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전망은 녹색기술발전을 통한 경제성장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개발협력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원조와 재원 흐름이 핵심 협상주제가 되고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협력, 개도국간의 파트너십, 민간재원을 통한 지원사업 등 다양한 방법 모색이 진행중이다. 개도국은 더 많은 지원사업을 원하고 있고, 선진국은 자체적인 목표를 선정하고 실행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수원국의 이행기제와 투명성을 더욱 요구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정해지기 전 2015년 7월에는 제3차 개발재원회의(Financing for Development)가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다. 이 회의는 추후에 정해질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재원투입 주체에 대한 논의와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 굉장히 주목받는 회의가 될 것이다.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행에 있어 세계은행을 포함한 다자개발기구와 금융기구의 적극적 참여 및 재원확보를 위해 민간재원을 늘리는 일 등이 협상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다자금융기관과 민간의 재원이 개발의제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바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며, 실질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의 주요 그룹을 비롯한 개도국들은 이행기제에 이를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기후기금(GCF)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기금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고 기금의 집행 기준 역시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예를 들면 녹색기후기금에서 개도국의 화석에너지 청정기술 개발에 기금을 투입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두고 시민사회와 국가협의체간의 갈등이 존재한다. 청정기술이라는 말은 들어가지만 그것이 화석연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옹호하는 정책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투입되는 재원과 개도국의 환경약자들에게 지원해야 할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 재원의 비율을 놓고 치열한 협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재원회의의 아디스아바바 협약안이 지속가능발전의 재원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UN의 9개 주요그룹인 지방정부, 농민, 여성, 청소년, NGO, 기업, 원주민/소수민족, 노조, 과학기술자 그룹은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진행되는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그룹별로 수렴하여 제시하였다. 그중 농민(Farmers Major Group)들의 의견을 잠시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 과정에서 농민들의 참여를 요구하며, 우리 구성원들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족농, 소농 등 이미 팽배해진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빈곤을 겪으면서 그 해결안을 놓고 진지하게 고민해온 우리들을 인식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농생태학과 제로 투입 농업과 같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실천안들을 지원해주고 확대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의미이다. 나아가서는 농촌에서 혹은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성별과 민족, 인종으로 차별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주목하기를 요구한다.”(지속가능발전2015 이해관계자 프로그램에 제출된 농민 입장)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도입 의미

1992년 리우회의가 개최되고 국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는 의제21 혹은 지방의제21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행모드에 들어간 바 있다.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탄생하였고, 이례없는 전향적 자세로 시민단체 추천인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대표로 추인하기도 하였다. 위원회는 대통령 산하 혹은 총리실 산하에서 2006년까지 활동하면서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시민단체들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수년간의 토론을 거친 법안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녹색성장위원회’에게 그 기능과 자리를 내어주며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축소되었다. 담당부처는 환경부로 이관되었고, 현재 총리실 산하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실행을 맡고 있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자리잡고 있다. 민간위원들보다는 전문가와 관료 위주의 위원회로서 시민사회와는 협력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기후변화적응 및 에너지 자립, 녹색기술을 바탕으로 신성장 동력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펼쳐왔다. 특히 녹색국토와 교통 조성을 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반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수립하고 평가하는 지속가능발전계획이 환경부 관리하에 있는데,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서는 다루지 않는 빈곤과 사회적 형평성과 식량안보와 국민건강 증진, 토양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담았다는 점에서 국제적 기준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더 근접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지속가능발전이 녹색성장보다는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적 개념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구체적으로 마련되는 2015년부터는 국내 조직 및 법 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전 정권에서 마련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가 주목

된다. 이미 지정된 이행과제와 세부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목표는 기존의 전략에 맞춰서 조율될 가능성이 높지만, 조직 개편과 법률안 재검토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법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이성훈, 2014, “Post-2015 개발의제란 무엇인가: 한국시민사회의 관점에서”, Issue Brief,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공동개최 토론회.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IISD), 2014. Earth Negotiation Bulletin Vol.32 No.14~17.

SD2015 Multi-stakeholder engagement program, 2014, “Major Group Position Paper: The Farmers Major Group’s Vision and Prioritie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Global Policy Forum, 2015. 4. 29일자. Global Policy Watch, “The Struggle to Shape the Agenda.”

Amy Cutter et al. (from Stakeholder Forum), 2014.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Integration: Achieving a Better Balance between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A Study commissioned by the German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혼자 읽는 독서에서 함께 하는 책 읽기로!

땡땡책협동조합은 책을 읽고 쓰고 만들고 전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책 읽기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삶을 성찰하고 이웃과 연대하며 자율과 자치를 추구하는 독서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노동으로 책을 만들고 합당한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저희들의 목표죠.

대개 독서는 혼자 하는 거라 여기지만, 함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며 즐거운 모임을 이어나가는 일에는 삶을 조금씩 흔들고 나아가 기반을 바꿔놓는 저력이 있어요. '국가폭력' 기획독서회, '기본소득' 기획독서회처럼 공부모임을 만들고 늘려가며 독서모임과 독서모임을 잇고, 자본과 유통의 힘에 휘둘리는 소규모 독립출판사들과 협약을 통한 도서 직거래도 실험하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문제처럼 엉망으로 굴러가는 이놈의 세상에서 사회적 참여가 필요한 일들에 나서기도 하고요. 그밖에 땡땡이 유랑독서회나 책 박람회, 땡땡이 소식지도 만들고, 땡땡이출판협동조합 준비모임도 고민하고 있어요. 조합원의 책꽂이를 공유하고 헌책을 나누는 땡땡이 책방, 도서관도 만들어보려고 하고요. 이 원대한 계획을 성사시킬 힘은 우리 관계 속에 있다고 믿어요. 함께 손잡고 버티며 가실 분들은 망설임 없이 문을 두드려 주세요.

땡땡책협동조합에서 펴낸 책들

우리, 노동자로 살아가다

노조파괴에 맞선 총북 노동자들



유성기업 사례를 통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드러내고,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권리를 잃어가고 있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폈다. 그 속에서 노예가 아닌 노동자로 살기 위해 어떻게 싸워왔고 싸우려 하는지, 그 투쟁에 노동자와 시민이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를 다룬다.

땡땡책협동조합 엮음 | 3천원 | 132쪽 | 2014

후쿠시마에서 살아간다

3.11 핵사고 3주기, 더불어 살 길을 찾아서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라는 파국과 대면하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야기. 시급한 핵문제에 당면한 대전, 밀양, 부산을 오가며 한일 서로가 처한 현실을 공유하고, 앞으로 핵 없는 세상을 위해서 어떤 연대를 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그 이야기를 담았다.

땡땡책협동조합 엮음 | 148쪽 | 3천원 | 2014



전화 02-338-4005 이메일 00books@hanmail.net 블로그 <http://00books.tistory.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groups/00bookcoop

카페 <http://cafe.daum.net/00bookcoop>



조용한 전환

3.11이 열어 준 가능성의 공간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4년,

정치 세계에서 탈원전 무드는 사라졌고

권력을 되찾은 보수 세력은 3.11 이전으로

맹렬히 시계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3.11 이후

기존 사회의 존재 방식의 한계를 깨달은 일본의 청년 세대는

성장 일변도의 일본 사회에 이미 작별을 고한 듯

다른 삶에 대한 논의와 상상,

‘전환’을 향한 작은 실천을 조용히 지속하고 있다.

3.11은 일본 청년들에게 무엇이었으며

일본 청년 세대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후쿠시마 미노리 씀 | 12,000원

청년들의 목소리는 한편으로 와카모노론이라는 틀을 넘어서, 3.11 이후 기존 사회의 존재 방식의 한계를 깨닫고 새로운 사회를 모색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들은 분노를 발산하기보다는 기성세대를 놀라게 하고 흥분시킬 수 있는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과 아이디어를 대화의 장으로 가지고 나오려 한다. 이를 통해 기성세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투자하게 만들자는 발상으로 내놓고 있다. 이렇게 청년 지식인들의 아이디어와 실천은 세대 간의 대화로 이어지고 있다. (본문 중에서)



대학거부 그 후

졸업장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김남미 외 씀 | 11,000원



십 대 밑바닥 노동

야/너로 불리는 이들의
수상한 노동 세계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기획 | 배경내 외 씀 | 12,000원



서울 서초구 서운로 19 서초월드 809호

02-6931-3604 mosim@hansalim.or.kr

<http://mosim.or.kr>



재생종이로 만든 책

